2021.10.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산업동향&이슈 I 제22호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한국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경제·산업이슈 |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동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10월호 통권 제22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Ⅰ. 경제동향 6
Ⅱ. 산업·고용동향 32
Ⅲ. 해외경제 동향 70

경제·산업현안 89

Ⅰ.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90
Ⅱ. 한국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97
Ⅲ.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104
Ⅳ.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111

경제·산업이슈 117

Ⅰ.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동향 분석 11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ART 1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Ⅰ. 경제동향 ····· 6
1. 생산 ····· 6
2. 소비 ····· 8
3. 투자 ····· 10
4. 대외거래 ····· 16
5. 소비자물가 ····· 18
6. 금융시장 ····· 21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28

Ⅱ. 산업·고용동향 ····· 32
1. 제조업 ····· 32
2. 서비스업 ····· 45
3. 에너지 및 원자재 ····· 51
4. 고용 ····· 59
5. 인구 ····· 64
6. 부동산 ····· 66

Ⅲ. 해외경제 동향 ····· 70
1. 미국 ····· 70
2. 중국 ····· 75
3. 유로지역 ····· 78
4. 일본 ····· 81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 83
[주요 경제정책] ····· 86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2Q	3Q	4Q	1Q	2Q	3Q	7월	8월	9월
전산업생산	-1.2	-3.7 (-3.0)	-0.9 (2.8)	-1.5 (1.6)	2.7 (1.7)	7.2 (0.4)	-	4.5 (-0.6)	6.0 (-0.2)	-
광공업생산	-0.4	-5.9 (-6.5)	0.2 (6.0)	0.0 (2.9)	4.4 (3.4)	12.7 (-1.2)	-	7.7 (0.2)	9.6 (-0.7)	-
서비스업생산	-2.0	-3.4 (-1.3)	-1.7 (2.0)	-2.0 (0.9)	2.2 (0.7)	5.7 (1.7)	-	4.0 (0.1)	4.4 (-0.6)	-
소매판매액	-0.2	2.0 (5.9)	1.6 (-1.1)	-1.2 (0.9)	6.4 (1.7)	4.4 (2.7)	-	7.9 (-0.5)	3.8 (-0.8)	-
설비투자지수	6.0	5.8 (2.7)	7.7 (2.2)	2.8 (0.8)	11.9 (6.9)	12.7 (0.7)	-	10.9 (2.0)	11.8 (-5.1)	-
건설기성액	-4.1	-5.5 (-2.9)	-4.2 (-2.8)	-5.3 (2.5)	-7.2 (-3.6)	-5.3 (-2.4)	-	-8.0 (-1.8)	0.3 (1.6)	-
수출(통관)	-5.5	-20.3	-3.4	4.2	12.5	42.1	26.5	29.7	34.8	16.7
수입(통관)	-7.1	-15.8	-8.7	-1.7	12.2	37.5	37.5	38.1	44.0	31.0
경상수지 (억달러)	752.8	61.1	240.0	322.4	228.2	215.2	-	82.1	75.1	-
실업률	4.0	4.4	3.6	3.7	5.0	3.9	-	3.2	2.6	-
취업자수 (천명)	-218	-407	-314	-441	-380	618	-	542	518	-
소비자물가	0.5	-0.1	0.6	0.4	1.1	2.5	2.6	2.6	2.6	2.5
원/달러환율	1,180	1,220	1,188	1,116	1,115	1,121	1,158	1,445	1,161	1,170
국고채금리 (3년)	0.99	0.91	0.85	0.95	1.04	1.19	1.45	1.42	1.41	1.52

주: 1. ( )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둔화

■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7~8월 중 생산과 소비가 2개월 연속 감소**

- 8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로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줄어들어 7월(-0.6%)에 이어 0.2% 감소를 시현
- 소매판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7월(-0.5%)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0.8% 감소
-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5.1% 감소
- 다만 9월 중 고용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되며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67.1만 명 큰 폭 증가
- 9월 중 월간 수출액(558.3억달러)과 일평균 수출액(26.6억 달러)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

■ **한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들은 경기회복세 지속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수출 둔화,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을 통해 경기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위험
-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되며 상승 흐름을 지속

■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중반을 기록**

- 공업제품 물가는 가공식품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여 전월(3.2%)보다 오름폭이 확대
- 서비스 물가는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는 등 전월(1.7%)보다 높은 1.9% 상승

9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글로벌 물가 불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원/달러 환율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

■ **원/달러 환율은 8월(1,161원)보다 9원 상승한 9월 월평균 1,170원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

■ **국고채금리는 3년 만기 기준 8월 1.41%에서 9월 1.52%로, 10년 만기 기준 1.91%에서 2.06%로 각각 상승**

■ **국내 KOSPI지수는 8월말(3,199) 대비 4.1% 하락한 3,069를 시현**

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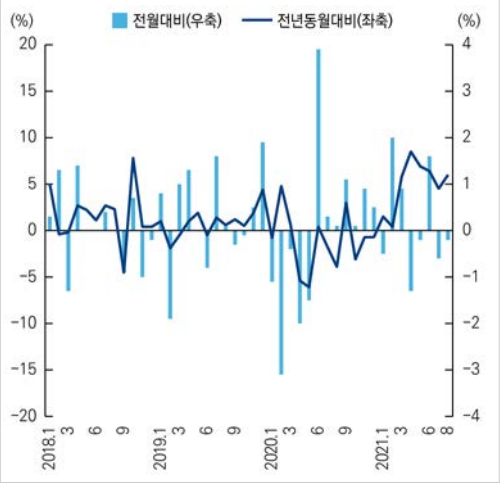
1. 생산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감소 전환되며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 **전산업생산(-0.2%)은 건설업(-1.8%→1.6%)과 공공행정(-8.3%→5.2%)에서 증가 전환되었으나, 광공업(0.2%→-0.7%)과 서비스업(0.1%→-0.6%)에서 감소 전환되며 전월(-0.6%)의 감소세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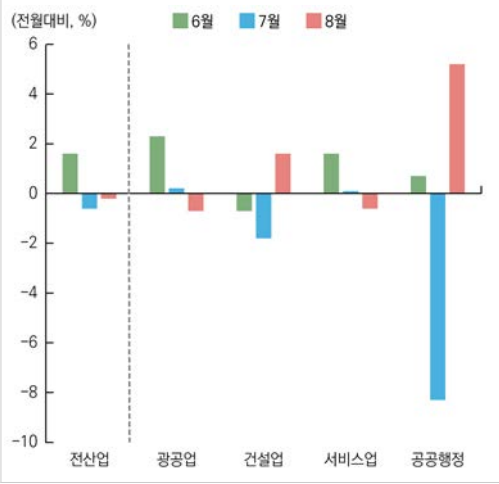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0.7%)은 제조업(-0.4%)에서 전기장비(-5.1%), 금속가공(-5.0%), 의료정밀광학(-8.2%) 등에서 줄며 전월(-0.2%)보다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0.6%)은 숙박·음식업(-5.0%), 도소매업(-0.9%), 교육(-1.7%), 운수창고업(-1.3%) 등에서 줄며 전월(0.1%)의 소폭 증가에서 감소 전환
- 전년동월대비로는 4월(8.5%) 이후 7월(4.5%)까지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8월 들어 6.0%로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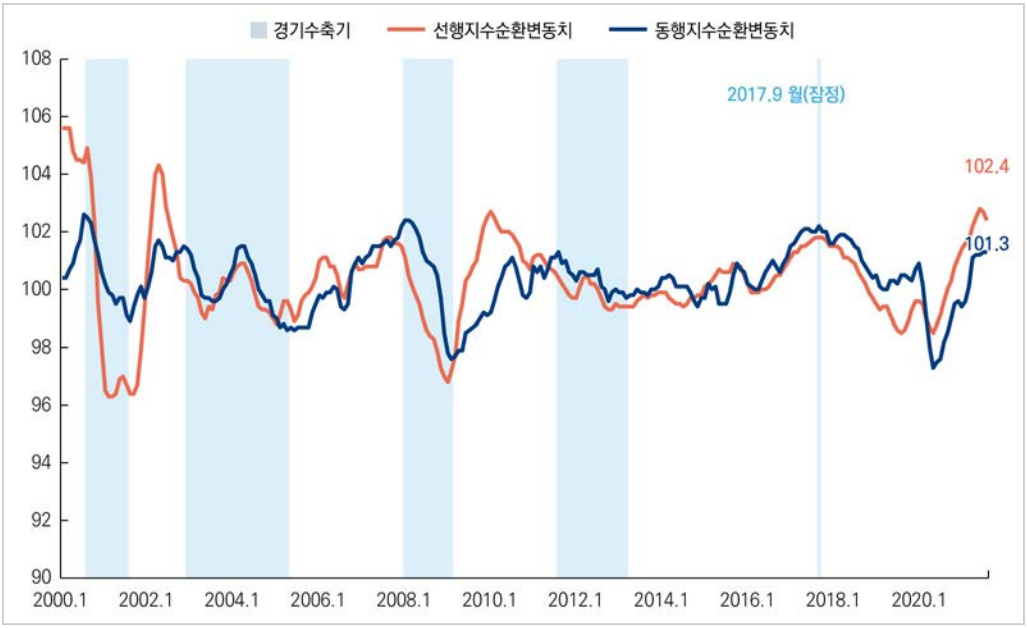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기지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등의 구성 지표에서 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101.3)과 동일한 수준 유지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2.4)는 코스피와 건설수주액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 수출입물가비율, 장단기금리차 등의 지표에서 감소하며 전월(102.7)보다 0.3p 하락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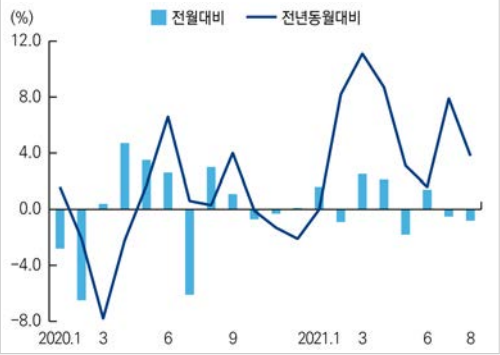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소비

소매판매는 8월 중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이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판매가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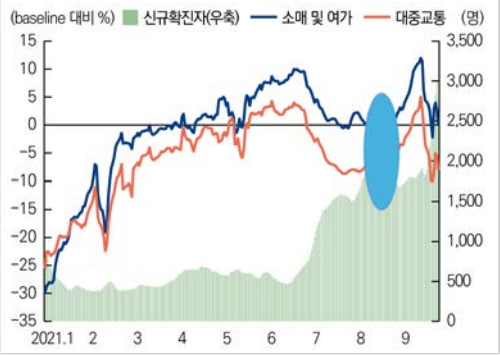
■ **8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0.5%)에 이어 0.8% 감소**

[그림 4]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5] 구글 이동성지수와 신규 확진자수 추이



주: Baseline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 기준이며, 7일 이동평균 사용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Our World in Data, 국회예산정책처

■ **8월 중 비내구재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하계 휴가 특수가 사라지면서 나들이 관련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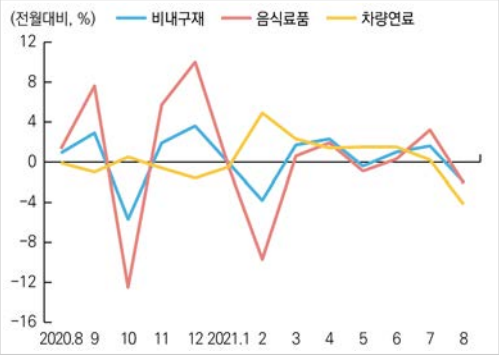
- 음식료품 판매(전월대비, %): ('21.6월)0.3→(7월)3.2→(8월)-2.1
- 비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6월)1.0→(7월)1.6→(8월)-2.0

■ **내구재 판매는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내구재 중 가장 큰 비중[1]을 차지하는 승용차 판매가 줄면서 전월대비 0.1% 감소**

-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용품 수요 증가로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통신기기 판매가 증가
- 반면, 승용차 판매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생산 차질로 출고가 지연되면서 감소세
- 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6월)-0.8→(7월)-0.3→(8월)-0.1
- 승용차 판매(전월대비, %): ('21.6월)-1.8→(7월)-5.6→(8월)-4.8
- 통신기기 및 컴퓨터 판매(전월대비, %): ('21.6월)0.7→(7월)1.8→(8월)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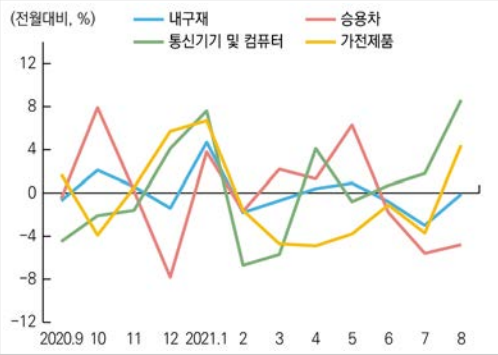
1) 내구재 경상판매액 중 상품군별 비중(2021년 8월 기준): 승용차 39.9%, 가전제품 24.1%, 통신기기 및 컴퓨터 15.7%, 가구 8.0%, 기타 내구재 12.3%

[그림 6] 비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 **9월 중 소비심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과 신규 확진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률 상승,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적응,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개선**

-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7~8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9월 중 전월대비 1.3p 상승한 103.8 기록

[그림 8]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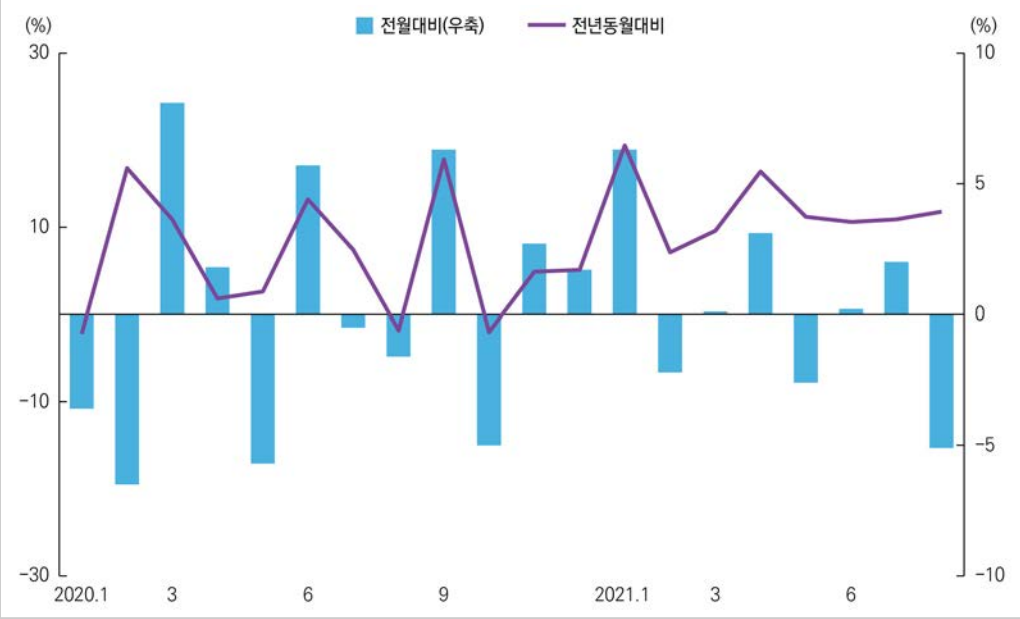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전월대비 감소 전환

■ **8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각각 4.3%, 7.7% 감소하며 전월대비 5.1%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는 기계류(12.2%)와 운송장비(10.4%)에서 모두 늘어나며 11.8% 증가

[그림 9]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10.7%)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9.2%), 정밀기기(-3.9%), 기타기기(-1.8%)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4.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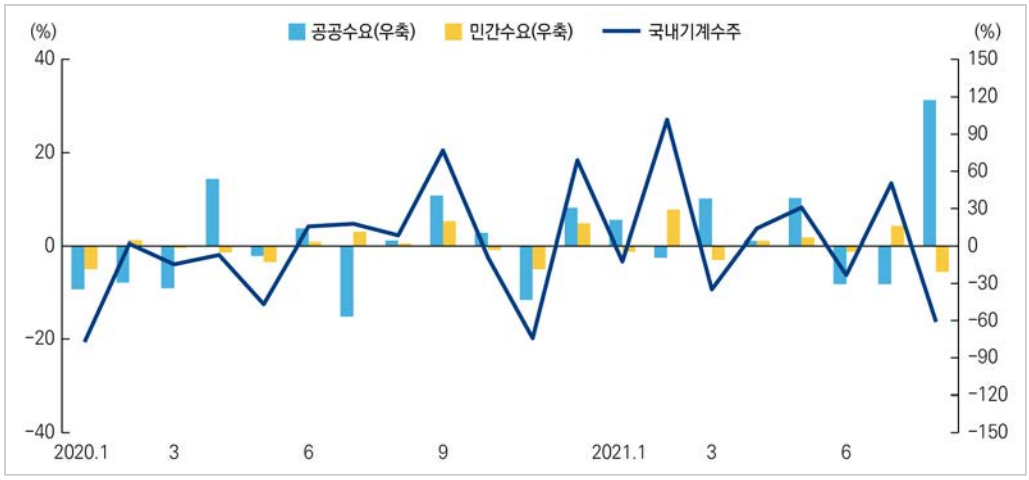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5.4%)와 기타운송장비(-10.7%)에서 모두 크게 줄어들며 전월대비 7.7% 감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월대비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와 기계류 수입액은 전월대비 증가

■ **8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117.4%)에서 전월 큰 폭으로 감소(-30.6%)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민간수요(-20.8%)가 제조업·비제조업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16.3% 감소**

■ **8월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2.6% 증가하며 전월(-1.4%)의 감소에서 증가 전환**

[그림 10]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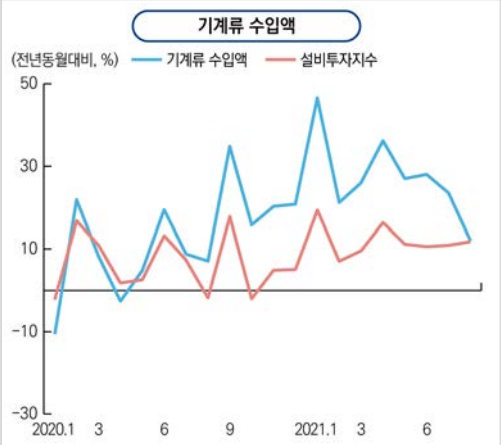
■ **8월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

- 8월 중 기계류 수입액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72.7%)에서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54.2%)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247.9%)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
- 자본재 중 반도체 제조 장비의 9월 수입액(속보치)은 전년동월대비 7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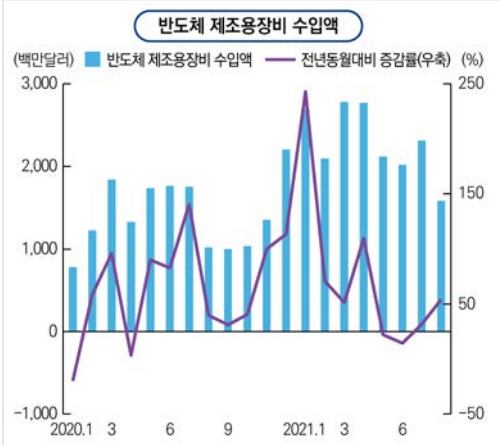
■ **8월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관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함**

-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21.7월)99→(8월)98→(9월)100(수출기업 106, 내수기업 96)

[그림 11]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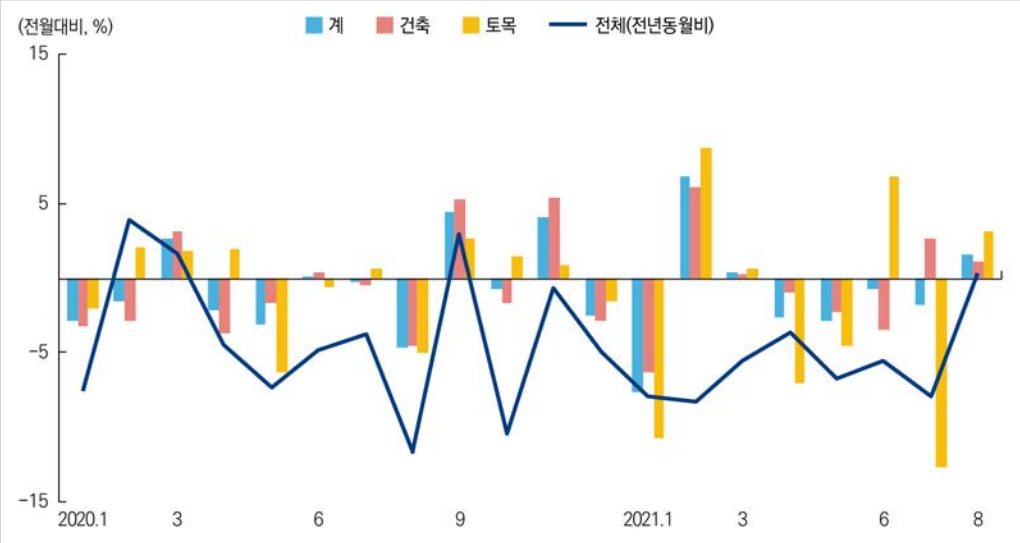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전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토목이 증가하고 건축도 2개월 연속 증가한 데 힘입어 5개월 만에 증가

■ **2021년 8월 중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이 전월대비 3.1%, 건축이 1.1% 증가하여 전월대비 1.6%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11개월 만에 증가로 반전
- 공공부문이 부진한 반면 민간부문의 건축과 토목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21.6월)-0.7→(7월)-1.8→(8월)1.6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21.6월)-5.6→(7월)-8.0→(8월)0.3
- 건축(전월대비,%): ('21.6월)-3.4→(7월)2.6→(8월)1.1
- 토목(전월대비,%): ('21.6월)6.8→(7월)-12.7→(8월)3.1
- 공공(경상,전월대비,%): ('21.6월)9.6→(7월)-6.1→(8월)-1.6
- 민간(경상,전월대비,%): ('21.6월)-0.9→(7월)1.3→(8월)2.4

[그림 12] 공종별 건설기성액(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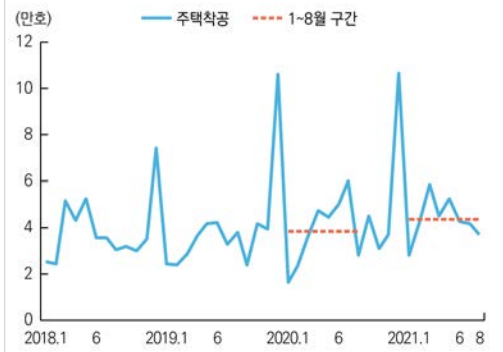
■ **건축부문별로 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건축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동평균치를 보면 회복세는 완만한 상황**

- 주거용건축은 경상가격으로 8월 중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이는 디플레이터의 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불변가격으로는 3.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주택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올해 1~8월 중 주택착공이 전년동기에 비해 13.5% 증가하였기 때문임
- 경상주거용건축(전년동월대비,%): ('21.6월)4.8→(7월)6.1→(8월)15.1
- 불변주거용건축(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전년동월대비,%): ('21.6월)-4.9→(7월)-3.9→(8월)3.7

[그림 13] 불변 주거용건축(추정) 추이

주: 경상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질가치로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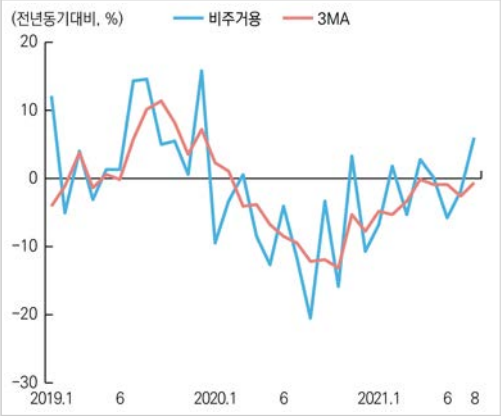
[그림 14] 주택 착공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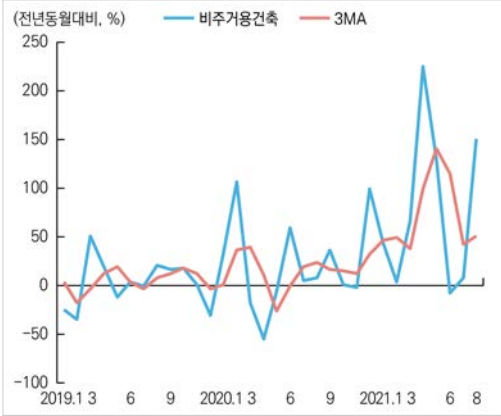
- 비주거용건축은 8월 중 경상가격으로는 전년동월대비 17.5%로 전월 8.3%에 비해 큰 폭 증가하였으나 불변가격으로는 5.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17개월 간 지속되었던 감소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충격의 완화에 힘입어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 비주거용건축의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
- 경상비주거용건축(전년동월대비,%):(21.6월)3.1→(7월)8.3→(8월)17.5
- 불변비주거용건축(국회예산정책처 추정,전년동월대비,%):(21.6월)-5.8→(7월)-1.9→(8월)5.9

[그림 15] 불변비주거용건축(추정)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그림 16] 비주거용건축(경상) 수주 추이



주: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수주의 합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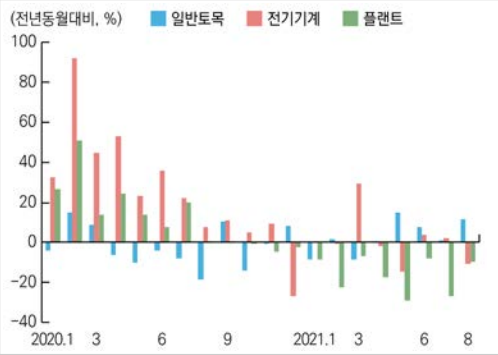
■ **토목건설의 경우에도 불변가격으로는 전년동월대비 11.4% 감소한 데 비해 경상가격으로는 1.0% 감소하여 건설물가의 급등이 양 지표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음**

- 토목건설을 부문별(경상)로 보면 일반토목이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한 반면 전기기계와 플랜트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완화
- 경상토목건설(전년동월대비,%):('21.6월)2.1→(7월)-11.8→(8월)-1.0
- 불변토목건설(전년동월대비,%):('21.6월)-7.2→(7월)-20.6→(8월)-11.4
- 일반토목(경상,전년동월대비,%): ('21.6월)7.7→(7월)1.0→(8월)11.8
- 전기기계(경상,전년동월대비,%): ('21.6월)3.7→(7월)2.0→(8월)-10.5
- 플랜트(경상,전년동월대비,%): ('21.6월)-8.0→(7월)-27.0→(8월)-9.7

[그림 17] 토목건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8] 부문별 토목건설(경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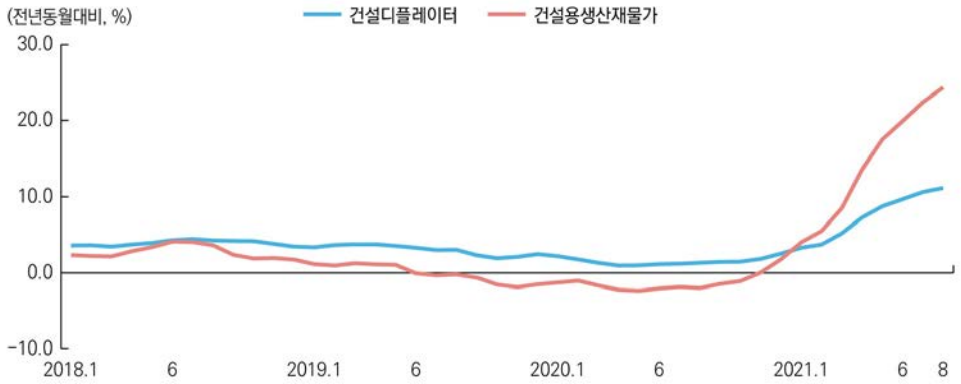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최근 건설 관련 물가의 급등은 건설투자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

- 경상가격 건설투자와 불변가격 건설투자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2021년 들어 건설 관련 물가가 크게 상승한 데 원인이 있음
  - 건설용 생산재물가가 올해 1월 전년동월대비 4.0%에서 8월 24.3%로 크게 상승
  - 통계청 경상가격 건설기성액과 불변가격 건설기성액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디플레이터를 추정할 수 있는데, 추정된 건설디플레이터도 1월 3.3%에서 8월 11.1%로 상승
- 코로나19, 정부의 주택금융 억제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물가의 급등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약화를 초래
  - 토목건설의 경우 사전에 예산이 정해지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토목건설의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불변가격 토목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건설디플레이터 및 건설용 생산재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4. 대외거래

가. 수출

수출은 전세계 교역회복 등에 힘입어 월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7% 늘어난 558.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두자릿 수의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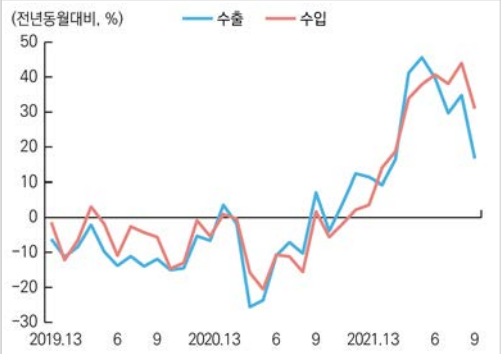
-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역대 1위 월 수출액을 경신
-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26.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9%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1.0% 증가한 516.2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

- 내수회복과 수출경기 호조 등으로 1차산품(56.6%), 중간재(40.4%), 자본재(2.0%), 소비재(4.6%) 수입이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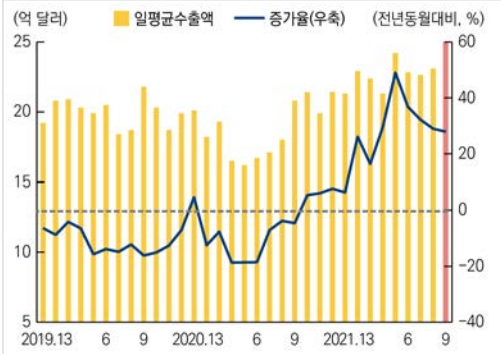
■ **무역수지는 42.0억 달러로 1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교역액은 1,074.5억 달러를 기록**

[그림 19]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0]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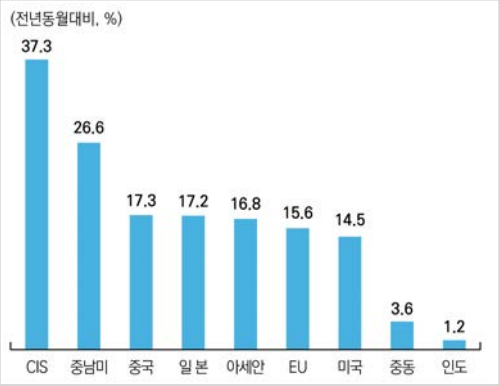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전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9대 지역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미국, EU, ASEAN, 인도로의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1위를 기록**

- 미국으로의 수출은 제조업 및 건설경기 회복으로 일반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14.5% 증가(13개월 연속 증가)
- EU지역으로의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선박이 다수 통관되면서 15.6% 증가(13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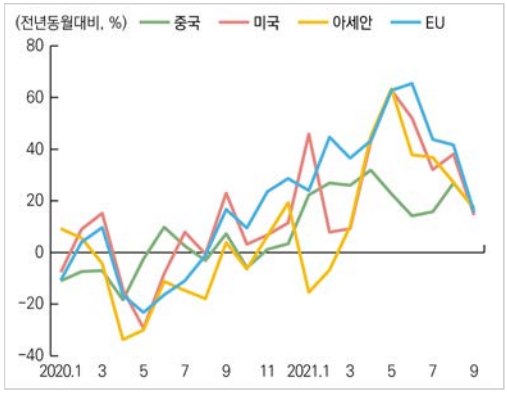
- 중국으로의 수출은 스마트폰 교체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와 무선통신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17.3% 증가(11개월 연속 증가)
- ASEAN 지역으로의 수출은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비대면 IT제품의 수요 증가로 디스플레이 품목이 선전하며 16.8% 증가(7개월 연속 증가)
- 인도로의 수출은 석유화학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증가로 철강과 일반기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1.2% 증가

[그림 21] 2021년 9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2]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운송수지 흑자와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16개월 연속 흑자

■ **8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5.1억 달러로 전년동월 66.4억 달러에서 확대**

■ **8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수출(522.2억 달러)이 수입(465.9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56.4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은 세계교역 확대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IT 품목 등이 호조세를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입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기회복 등으로 1차산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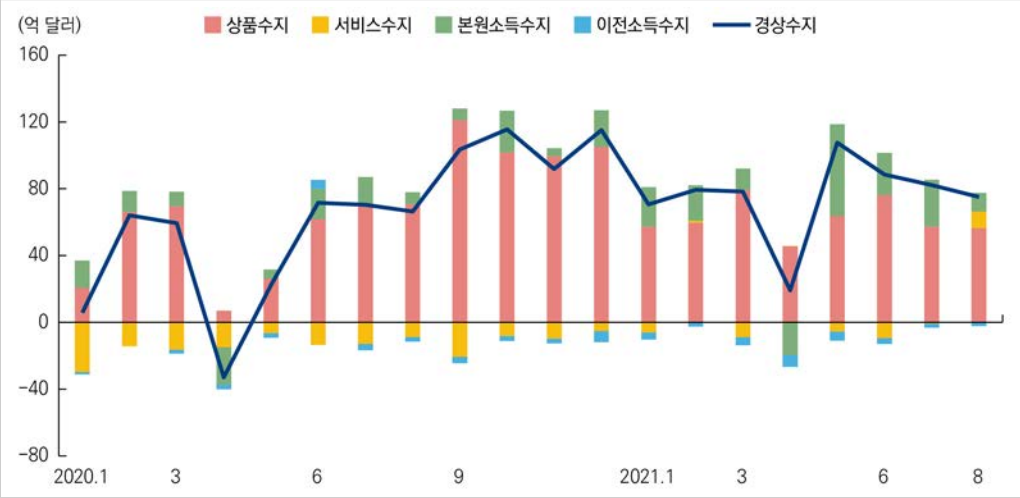
■ **8월 서비스수지는 해상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면서 4개월 만에 흑자 전환(10.0억 달러)**

- 8월 운송수지 흑자규모는 해상수출 화물운임 상승[2] 및 국내 해운사 및 항공사의 화물 운송량 증가 15.2억 달러 흑자를 기록
- 8월 여행수지는 해외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4.2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6.1억 달러 적자를 기록

■ **8월 본원소득수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투자로 받은 배당수입과 국내 기관투자자의 증권투자 배당수입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년동월(7.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늘어난 11.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배당소득은 전년동월 0.1억 달러 적자에서 4.8억 달러 흑자로 전환

[그림 23]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6개월 연속 2%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

■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며 4~8월에 이어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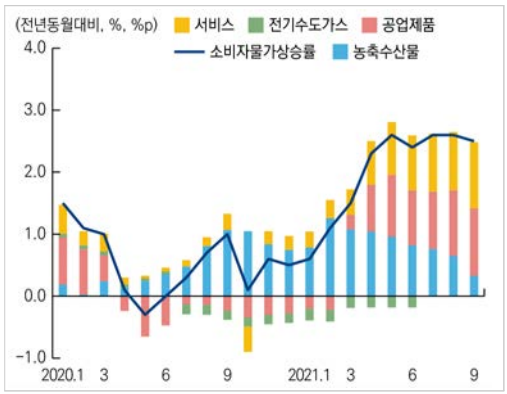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에 힘입어 전월보다 높은 1.5%를 기록

2) 8월 선박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년동월대비 264.9% 증가

[그림 24]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5]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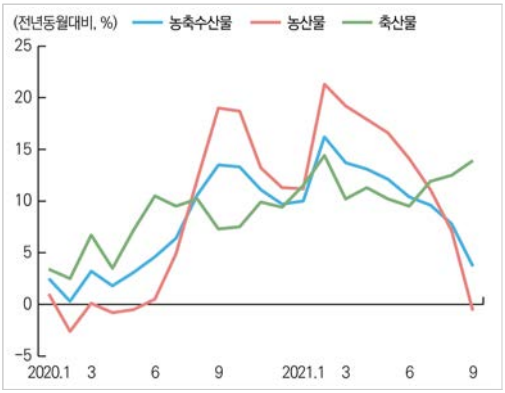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채소류 가격 안정으로 농산물 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인 3.7%를 기록**

- 과실류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8월 27.0%→9월 8.2%), 봄철 이상기후 등으로 급등하였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전년동월대비 -12.2%)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0.6% 하락
-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달걀가격이 높은 상승세(전년동월대비 43.4%)를 지속하고 명절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와 수입소고기 가격이 각각 16.4%, 10.1% 상승하며 축산물 가격의 오름폭 확대(8월 12.5%→9월 13.9%)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3%p로 점차 축소되는 모습

[그림 26]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7]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지난해 석유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3.4% 상승**

-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가 전년동월대비 79.3% 오르면서 22.0% 상승

  * 국제유가는 9월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멕시코만의 생산차질이 지속되면서 상승(3개유종 평균 배럴당 72.8달러)

- 또한,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업체들이 출고가격을 인상하면서 라면, 제과, 유제품 등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7월 1.9%→8월 2.3%→9월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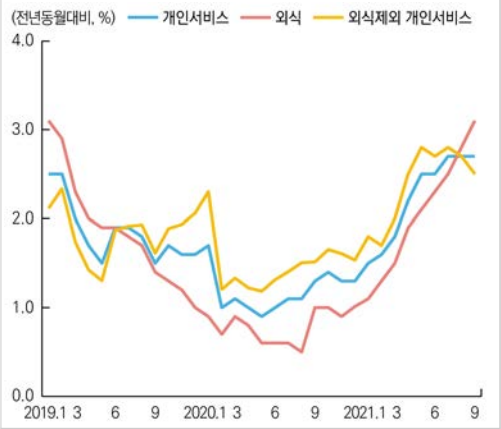
■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 전환, 외식 물가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높은 1.9% 상승**

- 개인서비스 물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3.1%)되며 2.7% 상승
- 공공서비스 물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효과가 지속되었으나, 9월부터 우편요금이 50원 인상되면서 우편료가 상승(전년동월대비 10.3%)하였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동결되거나 인하되었던 대학등록금이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 공공서비는 물가는 교육비와 의료비 인하 등으로 인해 2018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33개월만에 상승 전환

[그림 28]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9] 개인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3) 가공식품이 공업제품(333.1)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71.9로 공업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6.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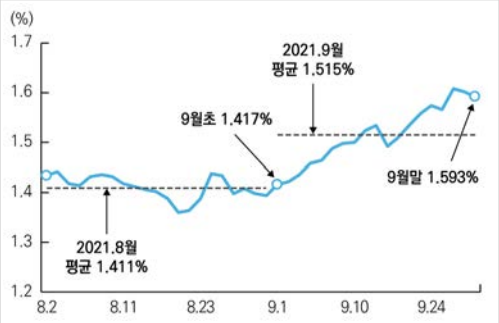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주요 정부 기관장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공감대, 국제금리 상승, 국내외 물가불안으로 모든 만기 구간에서 상승

■ **2021년 9월 중 월평균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전월 1.41%에서 1.52%로, 10년 만기채는 1.91%에서 2.06%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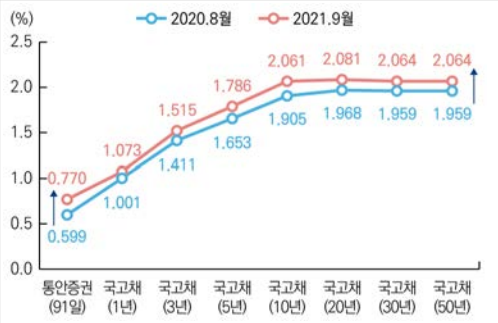
- 만기 3년 이내의 국고채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자 단기금리가 급등하여 국고채도 월초부터 상승
- 만기 3년 이상 국고채는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한 영향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자 이에 연동되어 상승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21.7월)1.42→(8월)1.41→(9월)1.52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21.7월)1.98→(8월)1.91→(9월)2.06

[그림 30]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1] 수익률곡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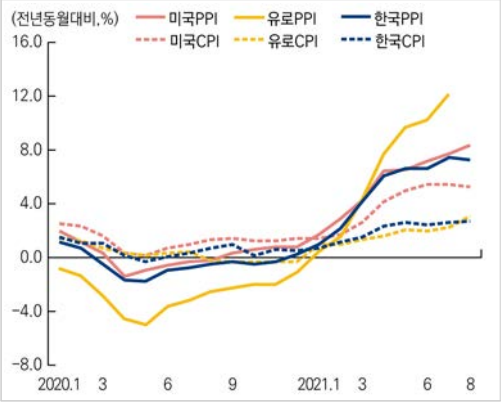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4분기 말경부터 물가가 불안해지자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이던 통화정책을 긴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

- 국제적 총수요 증가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
- 다만 최근 주요국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뚜렷이 높다는 점에서 공급측면(비용 상승)의 원인이 더욱 큰 것으로 보임
- 물가압력이 높아지자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1년 1/4분기 급등 후 안정세를 보였던 미 국채금리 등 국제금리가 9월 들어 급등하여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의 상승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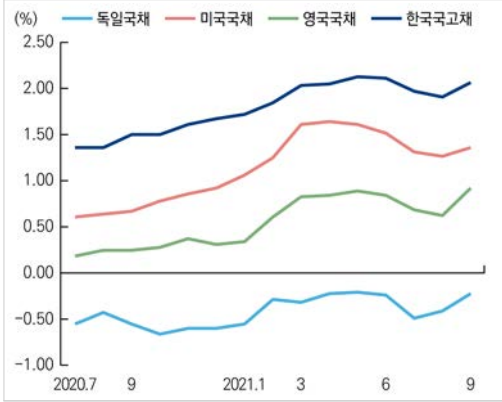
[그림 32] 주요 국가별 CPI, PPI 상승률 추이



주: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점선으로, PPI는 생산자물가지수로 실선으로 표시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bloomberg

[그림 33]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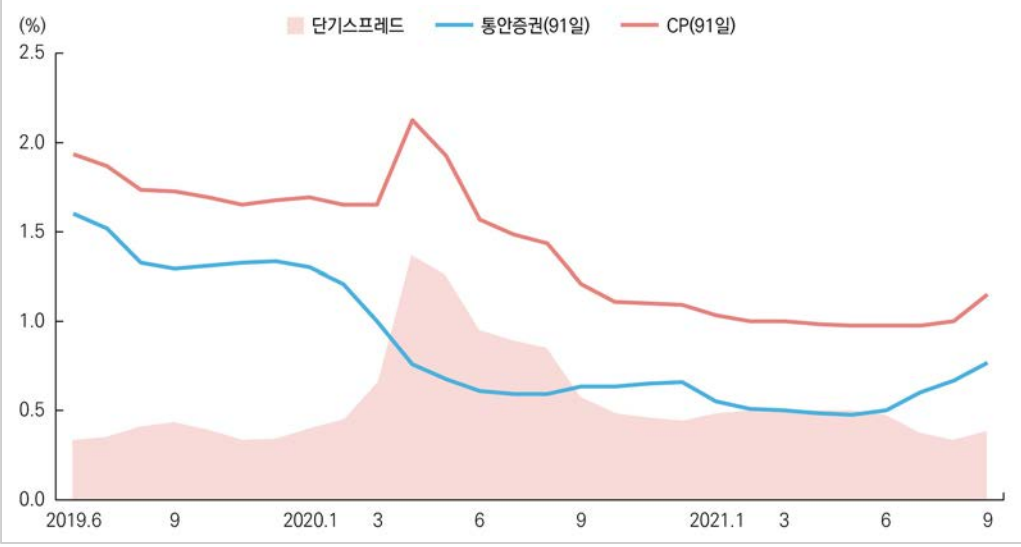
주: 10년만기 국채로 독일과 영국은 기말기준, 미국과 한국은 월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인포멕스

■ **단기금융시장에서는 물가압력의 상승으로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화안정증권(91일물)금리와 CP금리가 모두 상승**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 ('21.7월)0.60→(8월)0.67→(9월)0.77
- CP금리(91일물, 월평균, %): ('21.7월)0.97→(8월)1.00→(9월)1.15

[그림 34]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21년 9월 회사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8월 기업대출 금리도 대기업대출 금리와 중소기업대출 금리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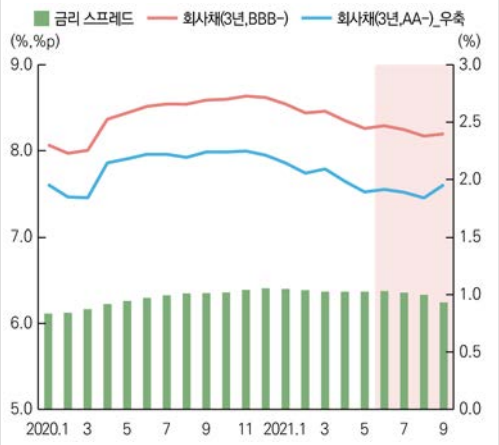
■ **2021년 9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

- 9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12bp 상승한 1.95% 나타냈으며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3bp 상승한 8.20%를 기록
- 9월 회사채(3년,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대비 9bp 하락한 624bp를 기록

■ **2021년 8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대출 금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는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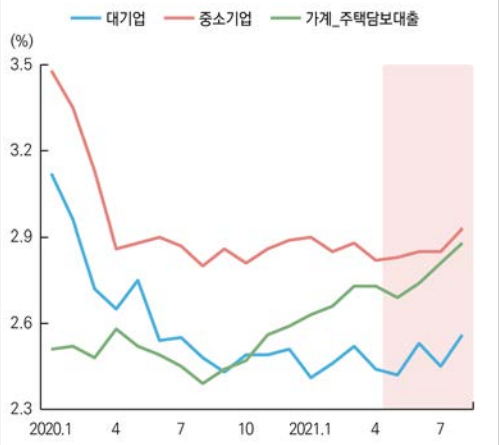
- 8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1bp 상승한 2.56%,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8bp 상승한 2.93%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40bp에서 37bp로 축소
- 한편 8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월대비 7bp 오른 2.88%를 기록

[그림 35]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6]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주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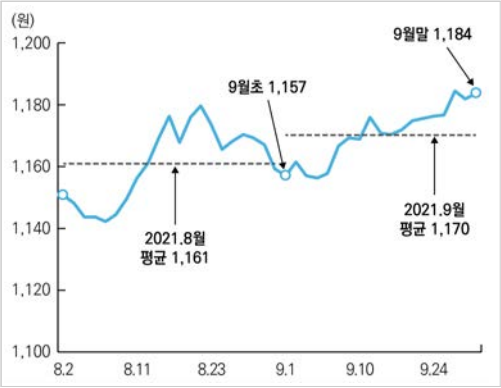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물가불안,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3개월 연속 상승

■ **2021년 9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70원으로 전월(1,161원)에 비해 9원(0.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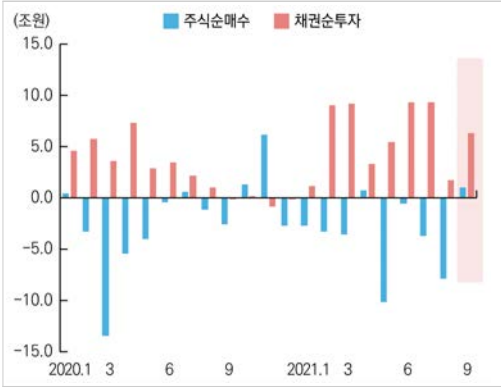
- 올해 들어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기조(1~9월 중 약 30조원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한국경제의 양호한 경제성장과 국가신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은 해외경제여건의 변화로 증권투자 포트폴리오 구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올해 9월까지 채권에는 54.8조원을 순투자하여 채권투자의 비중은 확대
- 원/달러 환율(월평균):('21.7월)1,145→(8월)1,161→(9월)1,170
- 외국인국내증권순매수(조원):('21.7월)5.5→(8월)-6.1→(9월)7.3

[그림 37] 원/달러 환율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8]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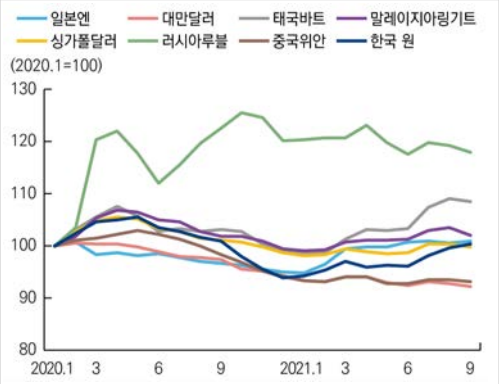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주요국의 최근 3개월 환율동향을 보면 미국 달러화는 주로 선진국 통화에 대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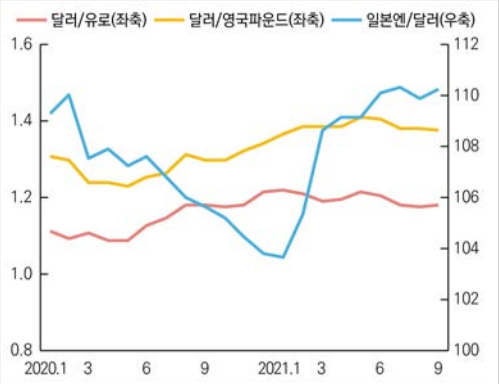
- 신흥개도국의 경우 태국 바트화를 제외하면 대미 달러에 대한 환율이 원화에 비해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일본 엔화를 제외한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 강세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한국과 선진국 증권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데 비롯된 것으로 보임

[그림 39] 신흥개도국들의 대미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40] 선진국의 대미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불안이 국제투자자들의 투자조정을 유인하는 요인**

- 최근 들어 가중되는 중국과 유럽의 전력난이 천연가스가격, 석탄가격, 원유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물류의 어려움도 물가압력을 높이고 있음
- 9월 들어 미국금리의 급등, 중국 헝다(Evergrande)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

다. 주가

2021년 9월말 우리나라 주가는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주가도 대외불확실성 확대 우려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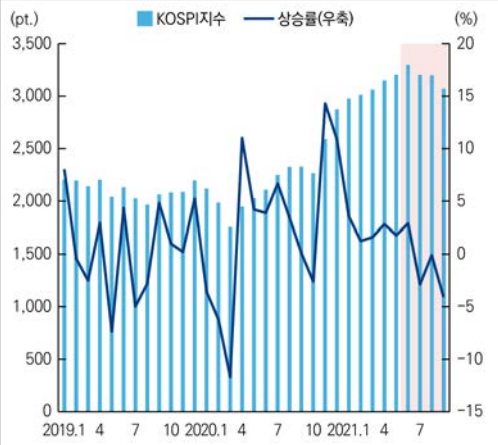
■ **2021년 9월 국내 주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3개월 연속 전월말 대비 하락**

- 9월말 KOSPI지수는 전월말(3,199) 대비 4.1%(130pt) 하락한 3,069를 기록
- 우리나라 KOSPI지수의 3개월 연속 하락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3월 이후 처음

■ **한편 개인 투자자는 2020년 1월 이후 2020년 11월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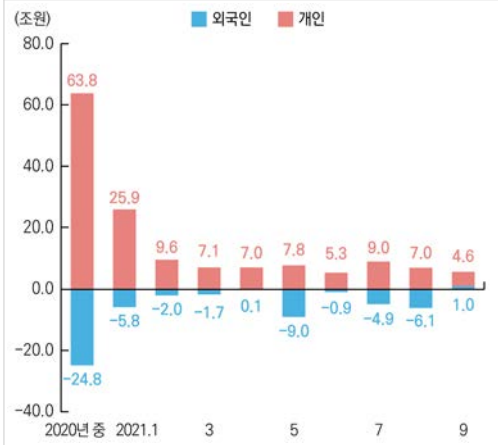
- 개인 투자자는 2020년 중 63.8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며, 2021년 1~9월에도 70.9조원, 월평균 7.9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 외국인 투자자는 2020년 중 24.5조원, 2021년 1~8월 중 29.0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9월에는 1.0조원을 순매수

[그림 41]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2]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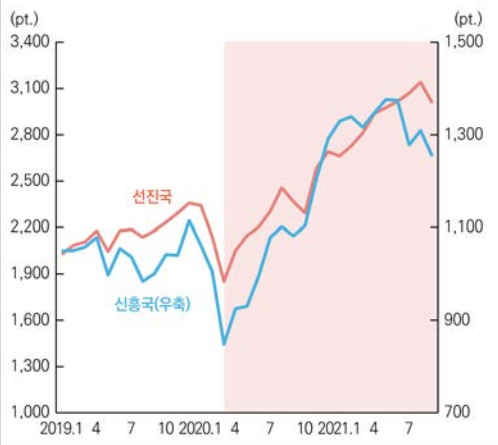


주: 주식시장 전체 기준(KOSPI+KOSDAQ)
자료: 한국거래소

■ **9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 등으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전반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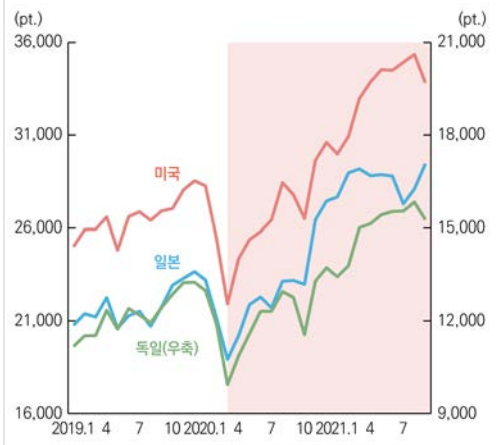
- 9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4.3%, 신흥국 주가는 4.2% 하락
- 한편 9월말 기준 미국, 독일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4.3%, 3.6% 하락한 반면 일본 주가는 신정부 출범 기대 등으로 4.9% 상승

[그림 43]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4]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1년 9월 우리나라 및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 우려, 대외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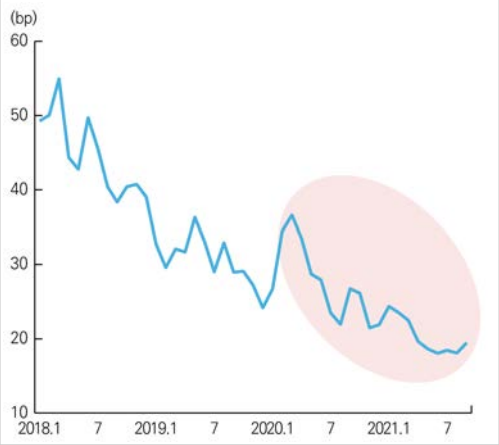
■ **2021년 9월 한국의 신용위험지표는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

- 2021년 9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4]은 전월대비 1.4bp 상승한 19.5bp를 기록
-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월말기준으로 19bp를 상회한 것은 2021년 4월말 19.7bp 이후 처음

■ **2021년 9월 신흥국 채권가산금리[5]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보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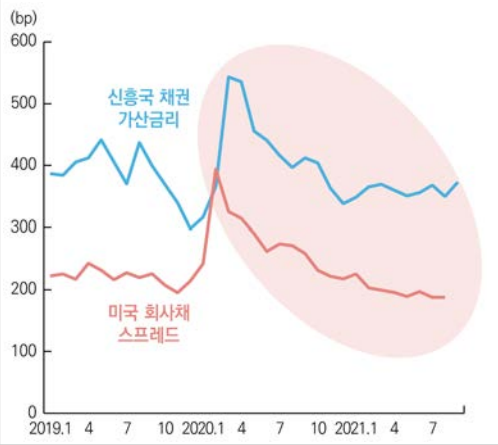
- 2021년 9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23.4bp 상승한 373.1bp를 나타냈으나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과 동일한 187.8bp를 기록

[그림 45]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6]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4)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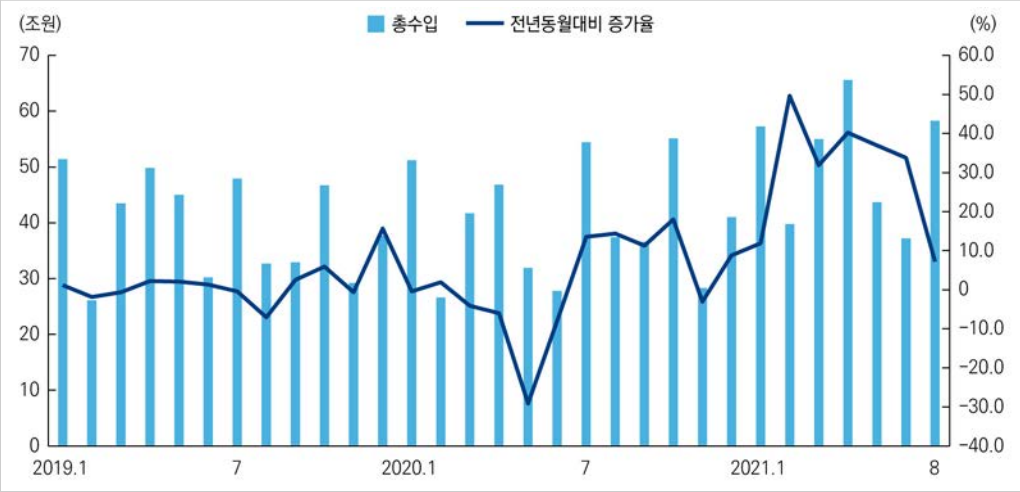
5)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법인세와 기금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8월 총수입은 40.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조원(9.4%) 증가**

[그림 47] 총수입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 **국세수입은 24.6조원으로,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6조원 증가**

- 법인세는 13.2조원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6]로 전년동월대비 2.2조원 증가
- 소득세는 7.8조원으로, 부동산·주식시장 호조[7][8]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특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6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는 -3.2조원으로, 수출 증가[9]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0.7조원 감소

■ **세외수입은 1.7조원으로,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1조원 증가**

6)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20년 상반기 29.6조원에서 2021년 상반기 50.1조원으로 69.1% 증가
7) 증권거래대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4,99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7.1% 증가하였으나 8월 576.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8) 주택매매량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90.5만호로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8.5만호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9) 참고로 수출액(통관기준)은 2021년 1월 480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1.4%), 2월 447억달러(9.3%), 3월 537억 달러(16.3%), 4월 512억 달러(41.2%), 5월 507억 달러(45.6%), 6월 548억 달러(39.7%), 7월 555억 달러(29.7%), 8월 532억 달러(34.8%)로 연속 증가세를 보임

■ **기금수입은 14.3조원으로, 재산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5조원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은 9.4조원으로,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의 증가(+1.3조원)[10]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료 증가(+446억원)[11]로 전년동월대비 1.7조원 증가

[표 1]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8월	1~8월	추경	8월	1~8월	8월	1~8월
총수입	470.7	478.8	37.4	317.8	514.6	40.6	397.5	3.2	79.7
국세수입	279.7	285.5	24.0	192.5	314.3	24.6	248.2	0.6	55.7
- 소득세	88.5	93.1	9.5	58.4	99.5	7.8	79.2	△1.6	20.8
- 법인세	58.5	55.5	11.0	41.8	65.5	13.2	54.9	2.2	13.1
- 부가가치세	64.6	64.9	△2.6	45.8	69.3	△3.2	54.1	△0.7	8.3
- 기타	68.1	72.0	6.1	46.5	80.0	6.8	60.0	0.7	13.5
세외수입	29.1	26.9	1.6	17.6	29.3	1.7	19.5	0.1	1.9
기금수입	161.9	166.2	11.8	107.6	171.0	14.3	129.7	2.5	22.1
-사회보장기여금	95.8	100.0	7.7	64.5	99.5	9.4	84.1	1.7	19.5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2차 추경사업 집행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8월 총지출은 49.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0조원(52.0%) 증가**

[그림 48] 총지출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10)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1.6조원에서 25.1조원으로 13.6조원(117.7%) 증가
11)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21년 8월 기준 1,443.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예산은 32.8조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6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2.4조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조원 증가

■ 기금은 16.9조원으로, 소상공인성장지원(+4조원), 공무원 퇴직급여(+1조원)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5조원 증가

[표 2]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8월	1~8월 누계	추경	8월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총지출	554.7	549.9	32.7	388.7	604.9	49.7	427.3	17.0	38.6
예산	377.5	374.4	21.3	277.2	409.7	32.8	292.3	11.5	15.1
일반회계	323.5	320.8	18.8	237.9	348.8	30.5	247.4	11.8	9.5
특별회계	54	53.6	2.5	39.3	60.9	2.3	44.9	△0.2	5.6
기금	177.3	175.2	11.4	111.4	195.2	16.9	132.6	5.5	21.3
사회보장성기금	61.2	59.1	5.1	39.4	63.2	5.3	43.7	0.2	4.3
세입세출외	-	0.4	0.0	0.1	-	0.0	2.4	△0.0	2.2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II

산업·고용동향

8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 **반도체와 철강, 무선통신기기 등 조선을 제외한 10개 주요 산업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제조업 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 반면, 전월대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화학과 일반기계, 철강, 조선 등의 생산은 감소하여, 제조업 전체 생산은 0.4% 감소

9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증가

■ **반도체와 석유, 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이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여 지난 7월에 달성한 월별 최고 수출실적을 갱신(20.8%증가)**

- 전월대비로도 화학, 조선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제조업 전체 수출이 5.4% 증가

8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5.2%)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5.6%), 금융 및 보험(6.3%) 등이 늘어 4.4% 증가**

- 전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1.0%) 등이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0.9%), 숙박 및 음식점(-5.0%) 등이 줄어 0.6% 감소

9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지수도 크게 상승

■ **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79.3%, 240.1%, 135.6% 상승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상승**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0.9%, 26.9%, 37.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하락**

9월 중 고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되며 전월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냄

■ **9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되며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51.8만명→67.1만명)**

-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둔화(37.7만명→32.3만명)되었음에도 청년층(14.3만명→21.9만명)과 50대(7.6만명→12.4만명)를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9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1.29%→1.24%) 및 지방(0.67%→0.63%)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은(0.96%→0.92%) 상승폭 소폭 축소**

Ⅱ. 산업·고용동향

1. 제조업

8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 **반도체와 철강,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11대 산업에서 조선을 제외한 10개 주요 산업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제조업 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 반도체 산업 호황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6.7% 생산이 증가하였고, 무선통신기기와 철강의 전년동월대비 생산증가율도 각각 29.4%, 14.6%로 나타나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다만, 조선 생산이 9개월 연속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감소(-22.1%)

■ **반면, 전월대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화학과 일반기계, 철강, 조선 등의 생산은 감소하여, 제조업 전체 생산은 0.4% 감소**

- 무선통신기기의 전월대비 생산증가율은 16.6%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전월대비 각각 3.5%, 3.3% 증가
- 하지만 화학과 일반기계, 철강, 조선 생산이 각각 1.0%, 2.1%, 0.9%, 4.4% 감소하는 등 대부분 산업의 생산이 전월대비 감소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4.8	107.9	99.3	117.2	115.8	109.3	-0.4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3	-2.6	-3.8	11.8	7.3	10.1	
반도체	22.3	16.8	20.4	25.8	34.5	36.7	3.5
자동차	-15.4	-8.1	-10.6	20.4	-3.4	6.5	3.3
화학	-5.3	-8.2	-5.4	16.3	11.6	9.5	-1.0
일반기계	4.3	8.0	2.3	17.5	8.4	11.2	-2.1
철강	-17.5	-16.0	-9.9	20.9	19.3	14.6	-0.9
조선	19.1	8.5	6.0	-22.3	-21.3	-22.1	-4.4
석유	-7.2	-6.2	-9.4	2.2	0.9	5.7	3.6
섬유	-17.0	-13.4	-13.5	20.7	12.6	8.0	-7.0
무선통신기기	-14.6	-11.6	-37.3	21.3	16.0	29.4	16.6
가전	13.3	28.2	29.8	8.6	8.8	4.7	-12.5
컴퓨터 주변장치	-1.9	-10.7	-15.9	8.9	3.6	-2.9	-10.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021년 9월 주요 11대 산업[1]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8% 증가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5.4% 증가

■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 모두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여 지난 7월에 달성한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다시 갱신**

- 석유 산업의 수출증가율이 78.7%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최근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는 화학 산업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51.9% 증가하여 여전히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요 산업의 수출 호조세 지속
- 전월대비로는 화학과 조선 산업만 수출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제조업 전체 수출 5.4% 증가에 기여

[표 2]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9월	전월대비
11대산업	-15.5	-10.6	-15.1	1.9	43.2	33.6	39.9	-3.9	20.8	5.4
반도체	0.0	5.6	2.8	11.8	34.4	39.6	43.0	6.6	28.2	3.9
자동차	-37.0	-12.6	-18.1	18.0	75.0	18.8	18.7	-24.4	-5.8	17.4
화학	-11.6	-21.3	-21.8	-5.7	68.4	60.1	81.4	5.1	51.9	-3.9
일반기계	-7.0	-15.9	-17.5	0.3	21.4	18.3	23.4	-8.5	7.9	10.2
철강	-20.5	-18.6	-19.2	1.5	51.7	41.5	53.6	0.3	41.8	8.3
조선	-28.3	18.2	-34.8	-3.6	41.2	9.3	38.0	-17.0	-40.4	-36.1
석유	-45.7	-42.2	-44.2	-45.0	80.1	75.6	54.9	-14.3	78.7	12.1
섬유	-22.8	-15.2	-17.4	11.2	36.9	17.6	19.0	-17.6	-3.6	9.0
무선통신기기	-11.7	4.3	-32.0	-13.0	3.6	4.9	62.1	15.9	19.9	4.7
가전	-5.4	5.3	14.4	30.0	47.5	29.7	12.4	-19.8	-4.1	8.4
컴퓨터 주변장치	15.2	-0.4	7.9	17.6	22.5	32.5	24.8	8.7	30.2	12.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산업의 8월 생산과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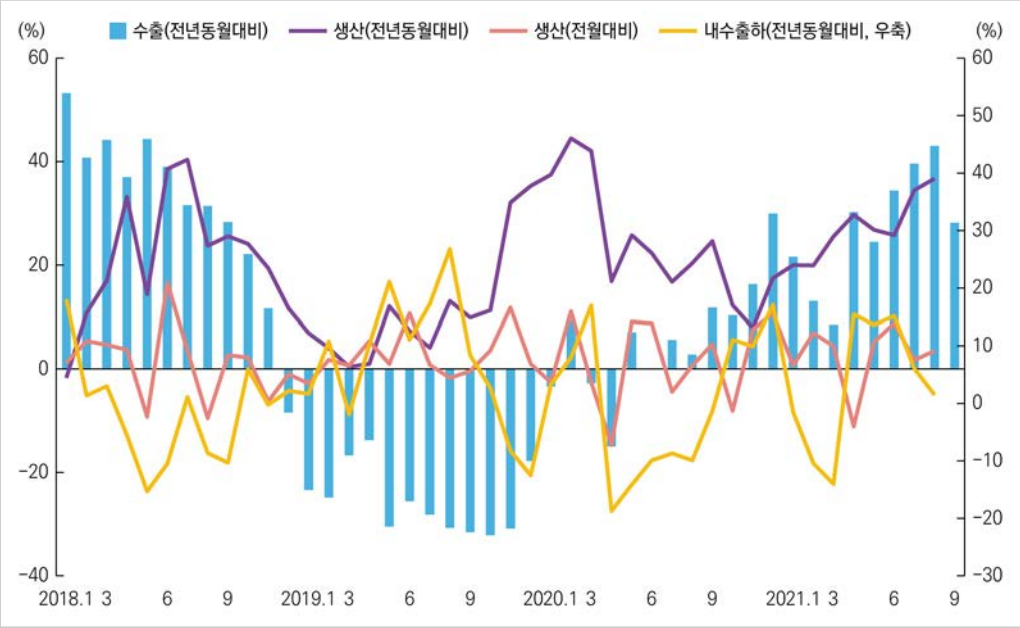
■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8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6.7% 증가하고 전월대비 3.5%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5.8→(7월)34.5→(8월)36.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6월)8.8→(7월)1.7→(8월)3.5
- 내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15.2→(7월)6.1→(8월)1.5

■ **9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8.2% 증가하면서 지난 3월을 제외하고 2020년 9월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율 유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34.4→(7월)39.6→(8월)43.0→(9월)28.2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산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나,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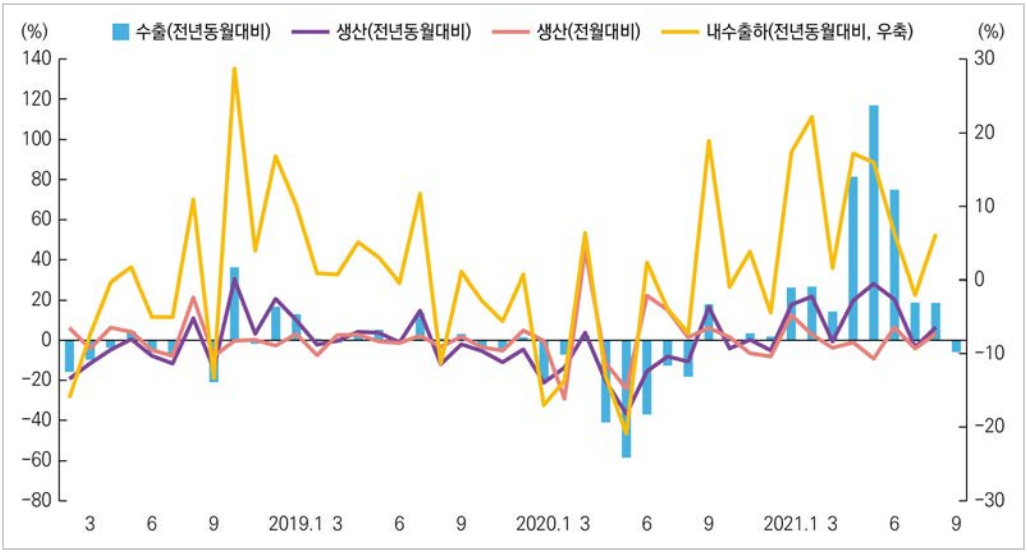
■ **8월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여 전년동월대비 6.5%, 전월대비 3.3% 증가**

-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은 1.1% 증가하였고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부문은 1.5%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12.3%로 크게 증가
- 전월대비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1.1%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에서 각각 6.9%, 8.6% 큰 폭으로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0.4→(7월)-3.4→(8월)6.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6.5→(7월)-4.1→(8월)3.3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6.3→(7월)-2.0→(8월)6.2

■ **9월 수출은 추석연휴기간 동안의 휴무와 차량용반도체 수급 문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 세부 부문별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부문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6.1%, 5.1%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75.0→(7월)18.8→(8월)18.7→(9월)-5.8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의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과 9월 수출은 8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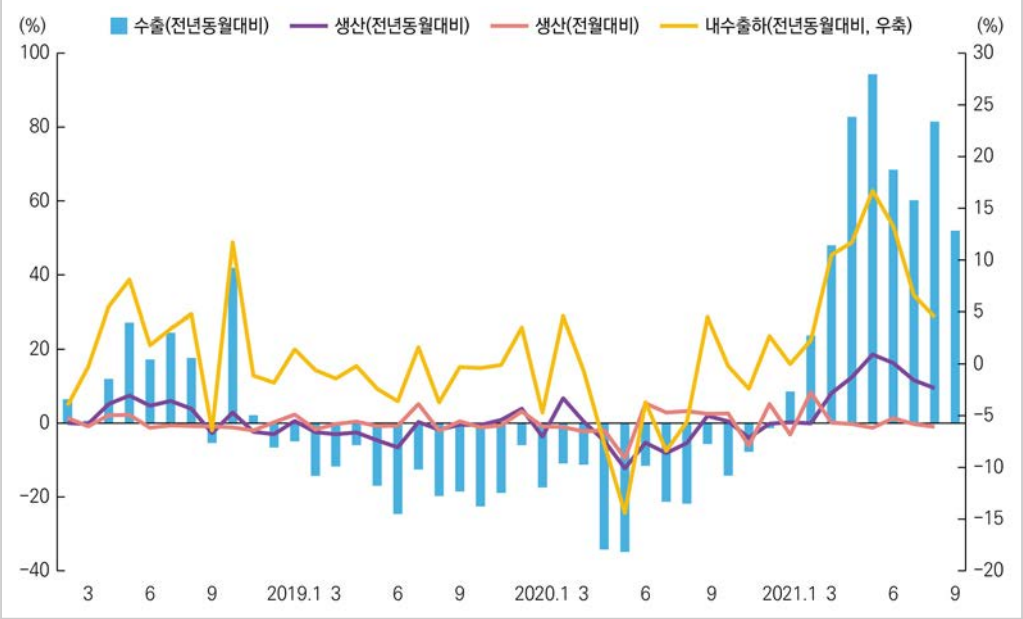
■ **해외시장에서 비대면 생활을 위한 제품 수요와 중간재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의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화학 산업의 8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9.5% 증가하였으나, 최근 몇 개월간 급격히 증가한 내수의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월대비 생산은 1.0%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 16.3→(7월)11.6→(8월)9.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6월)1.3→(7월)-0.3→(8월)-1.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13.3→(7월)6.6→(8월)4.5

■ **해외시장에서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9월 수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51.9%로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68.4→(7월)60.1→(8월)81.4→(9월)51.9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8월 생산은 내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졌고 9월 수출도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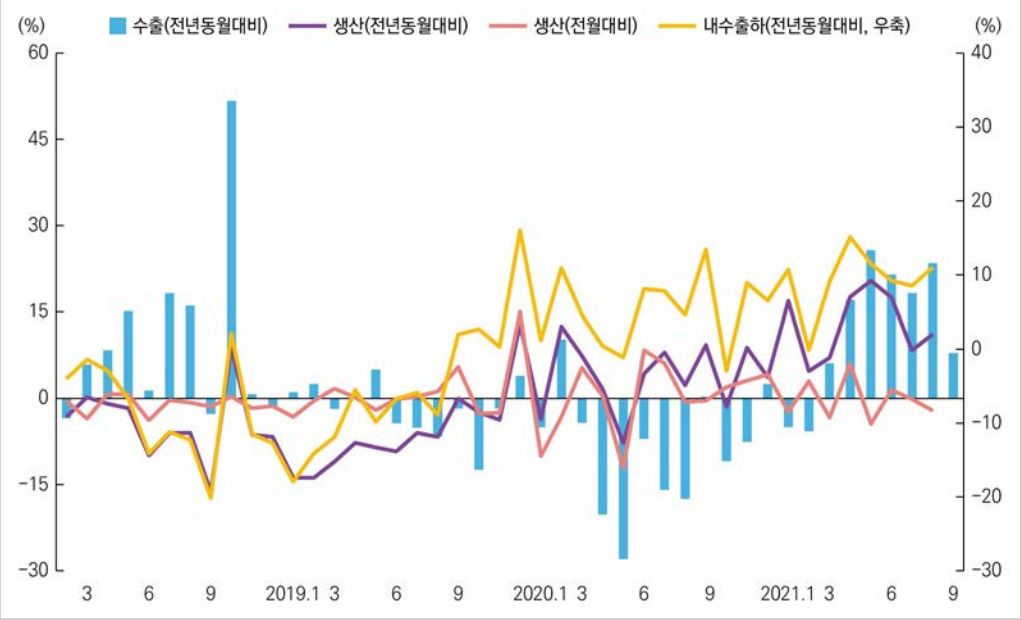
■ **8월 중 생산은 기계수주가 전년동월대비 민간(18.1%) 및 공공(132.4%) 부문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1%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17.5→(7월)8.4→(8월)11.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1.5→(7월)-0.1→(8월)-2.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9.2→(7월)8.5→(8월)11.0

■ **9월 중 수출은 일반기계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출비중(14.0%)을 차지하는 원동기 및 펌프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하였으나,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 및 경기부양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로 공작기계와 건설기계 부문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32.3%, 20.9% 증가하면서 7.9%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1.4→(7월)18.3→(8월)23.4→(9월)7.9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과 9월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월대비 생산은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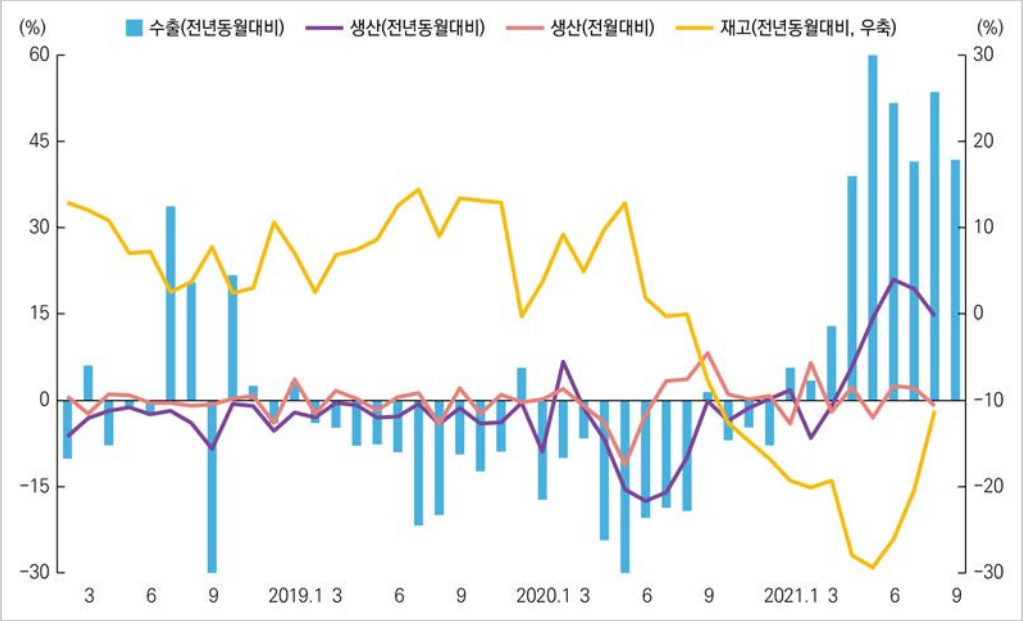
■ **지난해 크게 위축되었던 건설 부문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11.2% 감소하고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14.6%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생산은 소폭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0.9→(7월)19.3→(8월)14.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2.5→(7월)2.2→(8월)-0.9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6.1→(7월)-20.4→(8월)-11.2

■ **해외시장에 중국산 철강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철강 산업의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1.8%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51.7→(7월)41.5→(8월)53.6→(9월)41.8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선 산업의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고, 9월 수출도 통관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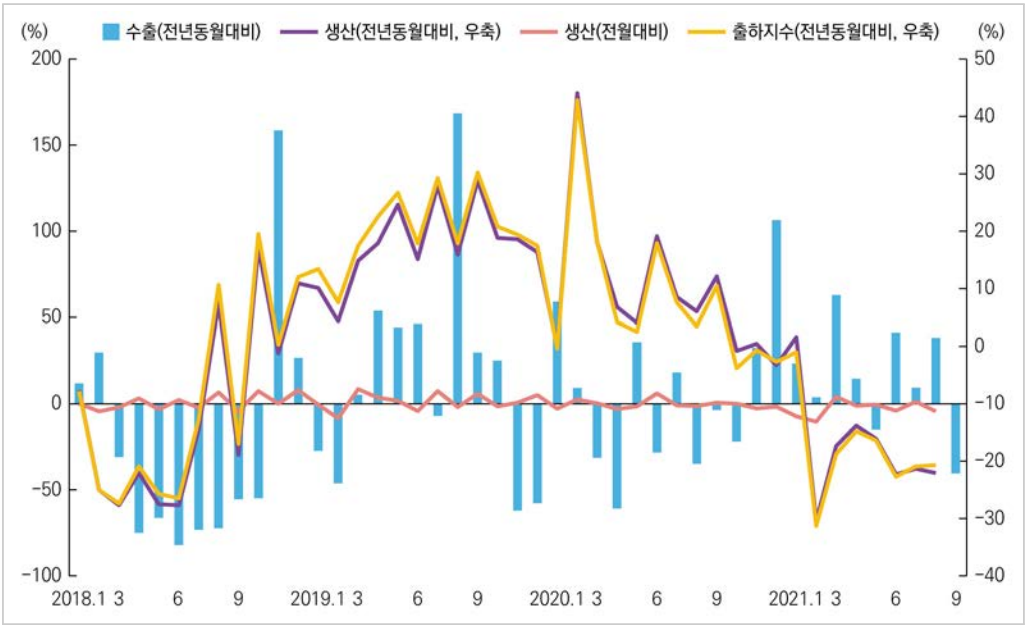
■ **8월 중 생산은 2020년 6월~8월간 국내 수주(162만 CGT)가 전년동기대비 19.0% 줄어든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1% 감소하였으며, 출하도 20.7% 감소**

- 반면, 8월 중 수주는 LNG선 2척, 컨테이너선 11척 등 총 16척의 수주가 이루어져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한 77만 9,000CGT(Compensated Gross Tonnage)를 기록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2.3→(7월)-21.3→(8월)-22.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4.1→(7월)1.1→(8월)-4.4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2.7→(7월)-20.9→(8월)-20.7

■ **9월 중 수출은 2~3년 전에 수주한 선박들이 지난달 다수 통관되면서 일시적 감소로 이어져 전년동월대비 40.4% 감소**

- 9월에 탱커(tanker)선 5척, 컨테이너선 2척, LNG 운반선 1척, LPG 운반선 1척 등 총 9척이 통관되어 10.4억 달러 수출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41.2→(7월)9.3→(8월)38.0→(9월)-40.4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석유 산업의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9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7개월 연속 증가

■ **석유 산업의 8월 생산은 국제유가 상승 및 정제마진※ 상승세, 항공유 등 수요 회복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7%, 전월대비 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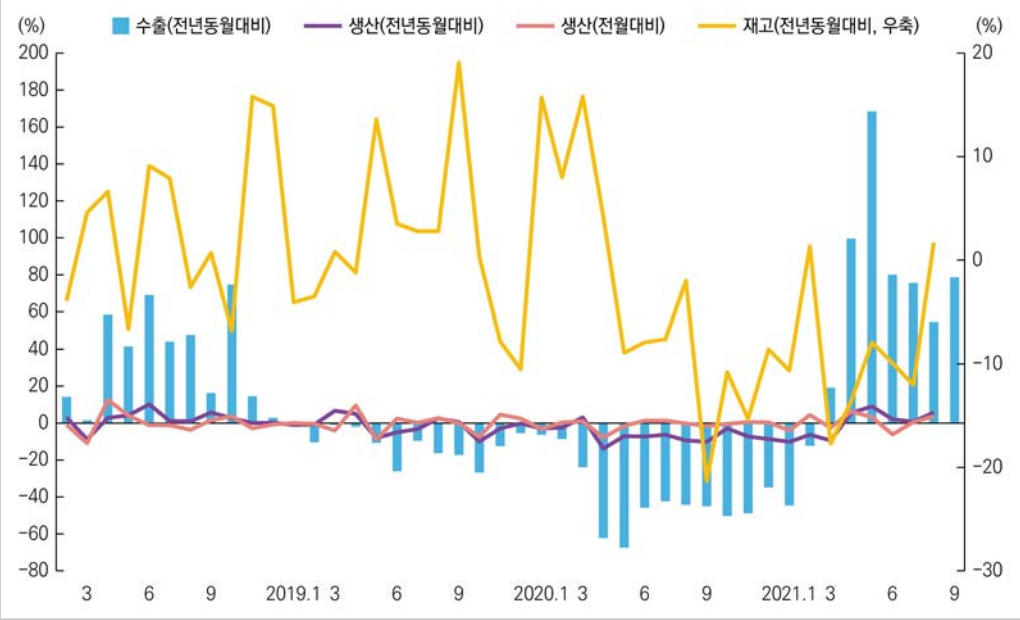
- 주요 석유제품별 8월 생산량: 휘발유(1,469만 배럴), 경유(2,979만 배럴), 벙커C유(694만 배럴), 항공유(932만 배럴)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2→(7월)0.9→(8월)5.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6.0→(7월)0.6→(8월)3.6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9.9→(7월)-12.0→(8월)1.7

※ 정제마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유사들이 핵심 수익지표로 사용

■ **9월 수출은 국제유가와 연료 소비량이 동반 상승, 수출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78.7% 큰 폭으로 증가**

- 석유제품 수출 단가($/B): ('20.9월)45.4→('21.9월)78.5(전년동월대비 72.9% 상승)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80.1→(7월)75.6→(8월)54.9→(9월)78.7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9월 수출은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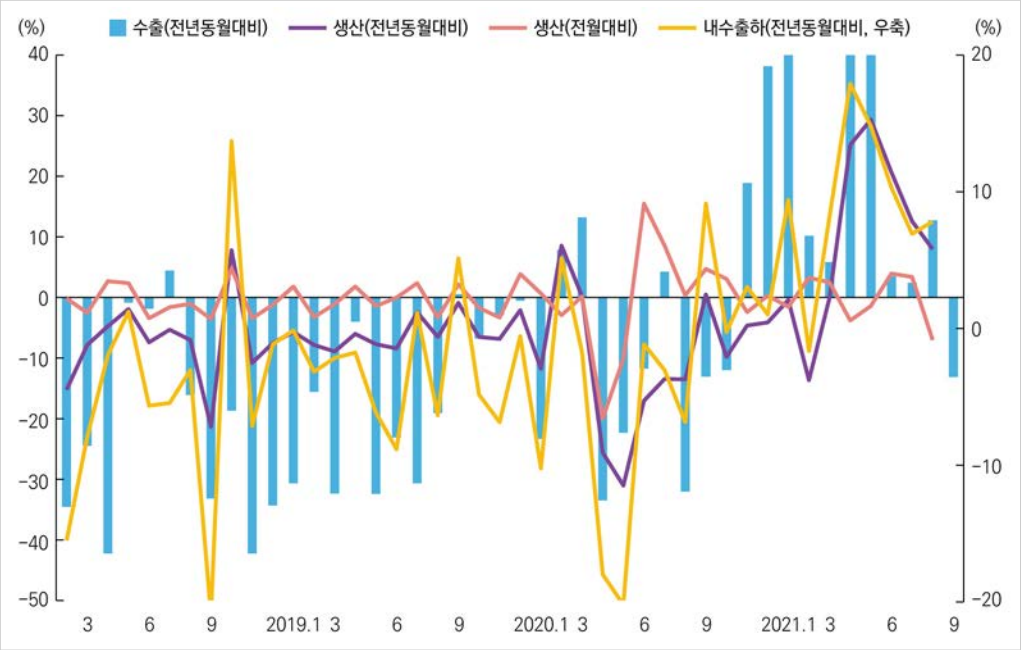
■ **국내 시장의 수요 증가세는 계속되어 내수출하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고 수출이 12.7% 증가함에 따라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7.0%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0.7→(7월)12.6→(8월)8.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4.0→(7월)3.4→(8월)-7.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10.3→(7월)6.9→(8월)7.8

■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시장 수출이 위축되고 국제 물류 지연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해 9월 섬유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36.9→(7월)17.6→(8월)19.0→(9월)-3.6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8월 생산은 내수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고, 9월 수출도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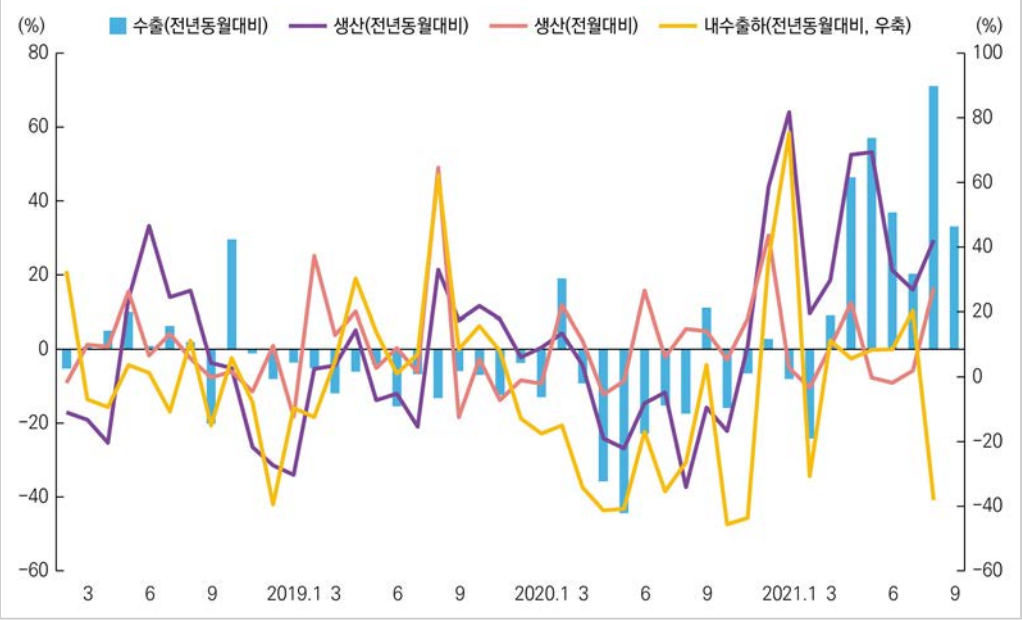
■ **8월 중 생산은 이번 달 출시 예정인 외국산 스마트폰의 부품생산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29.4%, 16.6% 증가**

- 내수출하는 작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낮아지자 5G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작대비 가격을 낮춘 신제품을 출시하여 내수소비가 증가한 것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38.1%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1.3→(7월)16.0→(8월)29.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9.0→(7월)-5.7→(8월)16.6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8.6→(7월)20.4→(8월)-38.1

■ **9월 중 수출은 대중 수출이 외국산 제품에 투입되는 스마트폰 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19.9% 증가하며 11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3.6→(7월)5.0→(8월)62.1→(9월)19.9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전 산업의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9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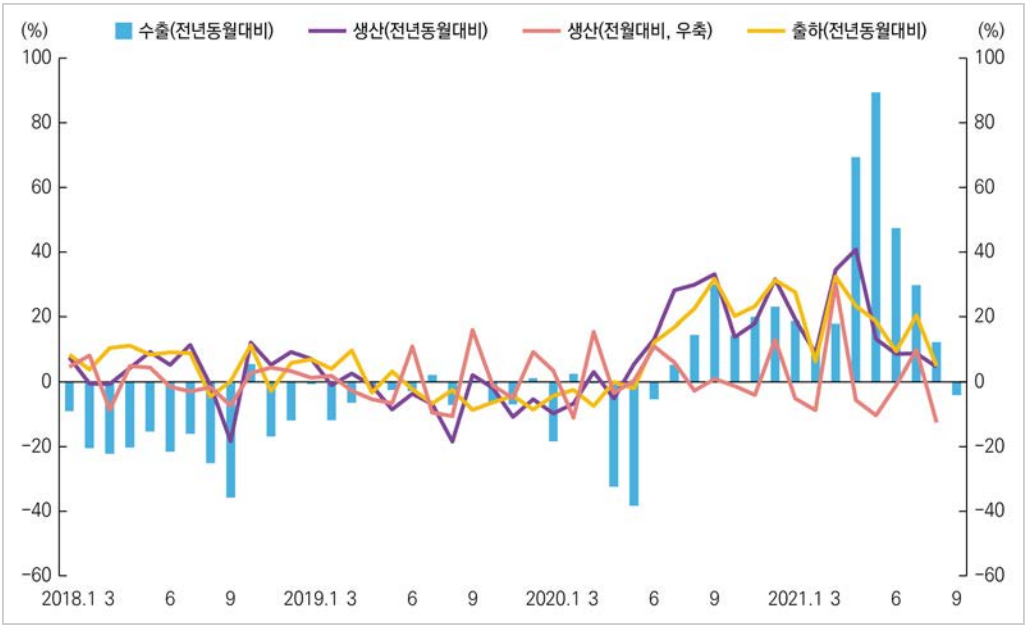
■ **8월 중 생산은 소비회복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고, 출하도 4.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에어컨 등 계절가전 수요 감소로 12.5%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8.6→(7월)8.8→(8월)4.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1.0→(7월)10.0→(8월)-12.5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9.5→(7월)20.4→(8월)4.9

■ **9월 중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작년 9월이 연중 최고 수출액(7억 5,600만 달러)을 기록한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47.5→(7월)29.7→(8월)12.4→(9월)-4.1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컴퓨터 주변장치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가파른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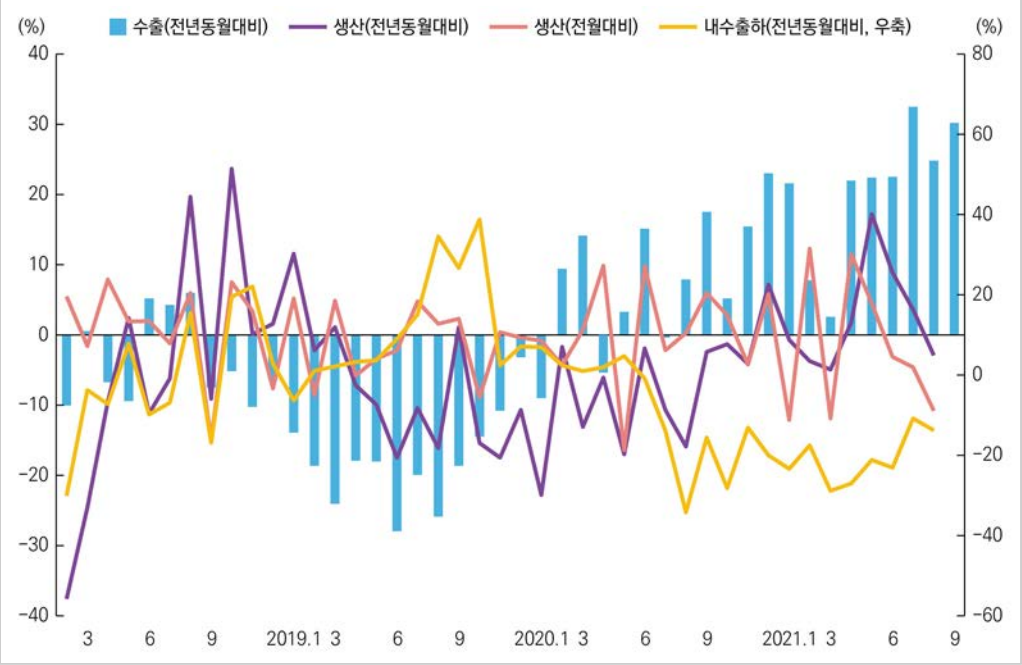
■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내수침체와 재고증가로 8월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되고 전월대비로도 감소세를 지속**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8.9 →(7월)3.6 →(8월)-2.9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6월)-3.1 →(7월)-4.6 →(8월)-10.8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3.1 →(7월)-10.8 →(8월)-13.8

■ **다만, 해외시장에서 국내 생산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컴퓨터 주변장치의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2% 크게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22.5 →(7월)32.5 →(8월)24.8 →(9월)30.2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8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 금융 및 보험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5.2%)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5.6%), 금융 및 보험(6.3%) 등이 늘어 4.4%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 4.9→(7월) 4.0→(8월) 4.4

■ **전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1.0%) 등이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0.9%), 숙박 및 음식점(-5.0%) 등이 줄어 0.6%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 1.6→(7월) 0.1→(8월) -0.6

[표 3]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0			2021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8.2	106.7	104.1	113.5	111.0	108.7	-0.6
서비스업	0.0	-1.2	-3.8	4.9	4.0	4.4	
도매 및 소매	0.0	-2.0	-5.7	3.5	5.8	5.6	-0.9
금융 및 보험	16.4	14.5	15.1	9.9	7.5	6.3	1.0
교육	-2.2	-4.2	-3.5	1.1	2.5	1.3	-1.7
보건 및 사회복지	1.6	1.1	0.3	3.8	4.9	4.6	0.2
숙박 및 음식점	-12.1	-9.1	-16.9	-0.6	-8.0	-5.2	-5.0
운수	-15.8	-15.9	-19.6	9.4	6.4	7.7	-1.3
출판·영상·방송	2.0	1.2	-1.8	5.7	7.1	7.5	-0.8
전문, 과학 및 기술	5.6	-0.3	-5.3	3.2	-2.0	2.9	1.4
사업시설관리지원	-11.9	-11.0	-9.5	5.8	4.6	2.6	-1.9
협회·수리·기타개인	-0.7	-4.3	-8.1	-2.4	1.5	-2.6	-5.4
부동산 및 임대	11.9	12.6	2.8	3.1	-3.9	4.3	3.0
예술·스포츠·여가	-34.6	-29.4	-36.8	12.0	1.6	6.5	0.3
하수, 폐기물 처리	10.7	-1.4	-4.4	5.2	9.7	5.3	-6.2

주: 1.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8월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업, 소매업 등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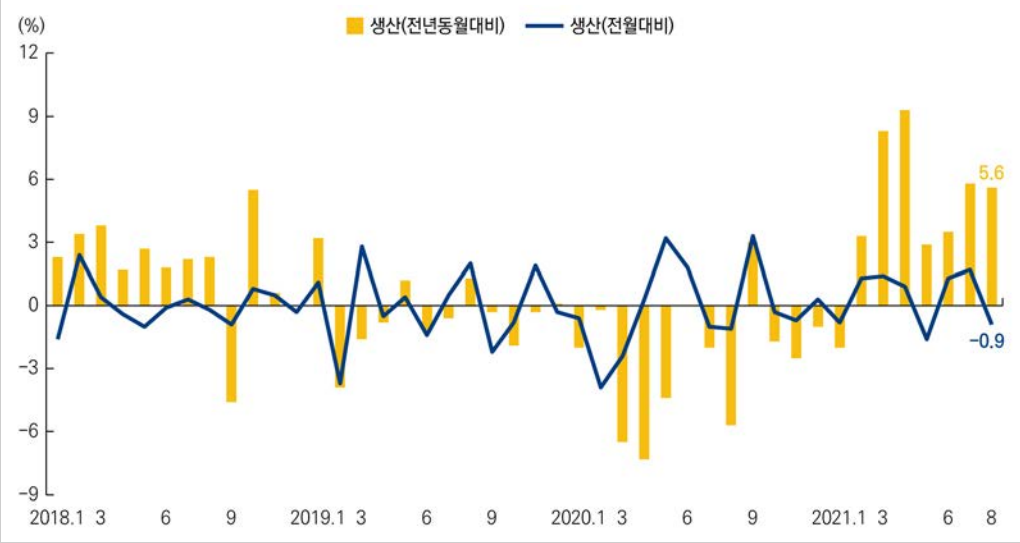
■ **8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4.3% 증가하고,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6.7%, 4.1% 증가함에 따라 5.6%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3.5→(7월)5.8→(8월)5.6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 생산은 자동차 판매업 부문과 자동차 부품 및 이륜차 판매업 부문 등이 각각 3.8%, 5.3%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도매업 부문 생산은 컴퓨터 및 통신장비 부문과 가전 및 전기장비 도매업 부문 등이 각각 2.1%, 3.1% 감소하였으나,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부문과 기타 기계장비 부문 등이 각각 10.6%, 9.2%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부문이 3.5%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 부문과 통신판매업 등의 무점포 소매업 부문 등이 각각 17.3%, 6.1%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전월대비로는 소매업 부문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도매업 부문과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이 각각 1.1%, 3.9% 감소함에 따라 0.9%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1.3→(7월)1.7→(8월)-0.9

[그림 12]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월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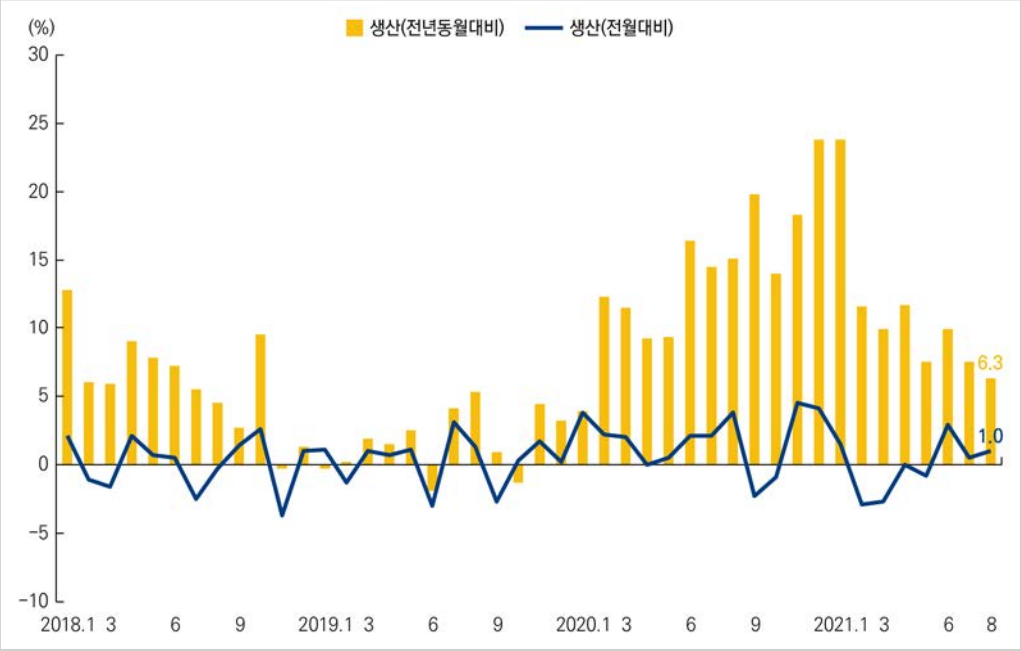
■ **8월 중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했는데, 금융업에서는 10.3%, 보험업에서는 5.9%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3.5% 감소**

- 세부 부문 중 공제업 부문에서 작년동월대비 29.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명 보험업 부문에서는 6.1%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9.9→(7월)7.5→(8월)6.3

■ **전월대비로는 1.0% 증가하였는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 2.5%, 금융업 부문에서 0.9% 증가한 반면, 보험업 부문에서는 1.3% 감소**

- 세부 부문 중 공제업 부문이 7.4%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 6.0%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2.9→(7월)0.5→(8월)1.0

[그림 13]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월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학원 운영중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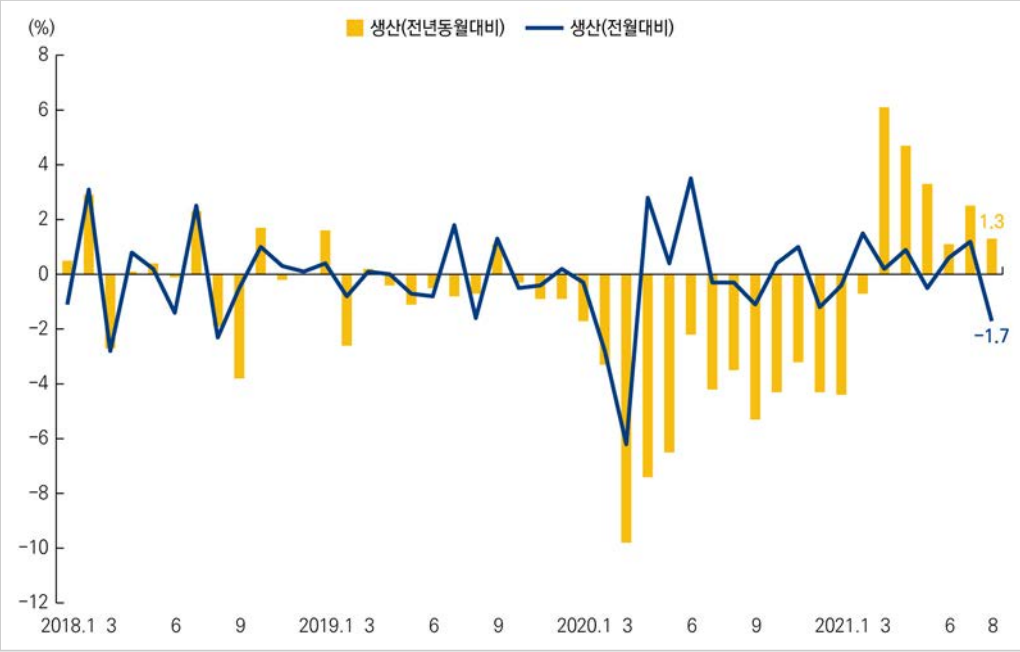
■ **8월 중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중등·고등 교육기관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7.0% 감소하였으나, 초등 교육기관이 1.3% 증가하고 작년 8월 수도권 방역조치 연장으로 모든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며 학원 생산이 감소(-22.2%)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학원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9.7% 증가함에 따라 1.3%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1.1→(7월)2.5→(8월)1.3

■ **전월대비로는 방학 등의 영향으로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이 각각 0.1%, 0.4%, 8.3% 감소함에 따라 1.7%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0.6→(7월)1.2→(8월)-1.7

[그림 14] 교육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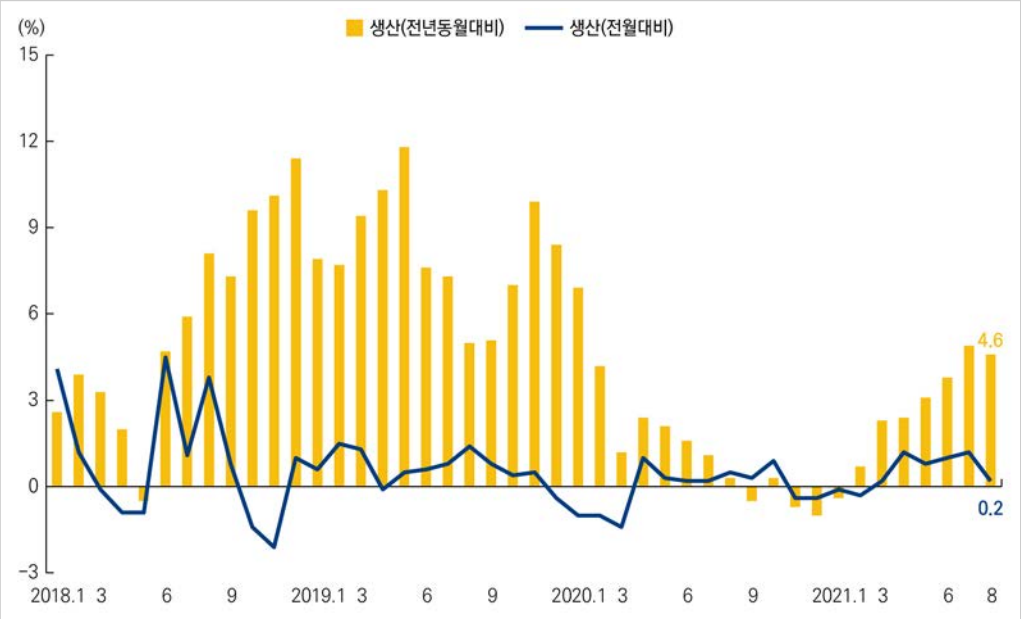
■ **지난 해 급격히 위축되었던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 생산지수(불변, 2015=100): ('21.6월)138.4→(7월)139.9→(8월)41.5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3.8→(7월)4.9→(8월)4.6

■ **전월대비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부문의 생산이 전월대비 다소 위축되었으나,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부문의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병원 및 의원 부문의 생산은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2% 증가**

- 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0): ('21.6월)137.9→(7월)139.5→(8월)139.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1.0→(7월)1.2→(8월)0.2

[그림 15]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의 영향이 계속되어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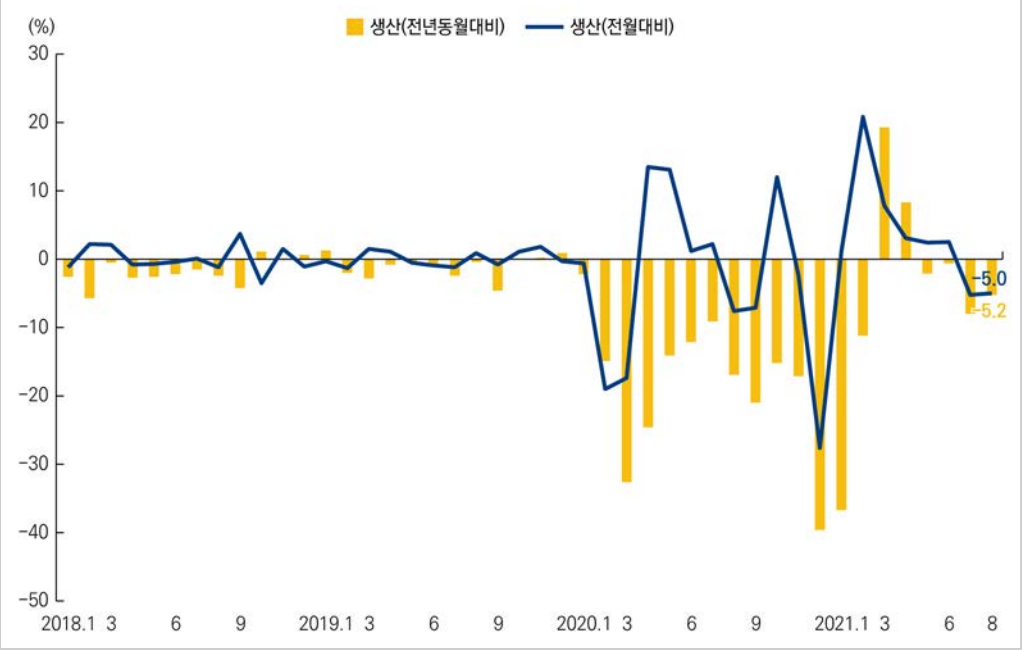
■ **8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했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3.4%,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5.5% 감소**

-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국식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문은 각각 6.6%, 5.9% 증가한 반면, 주점업 부문에서는 40.6% 큰 폭으로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6월)-0.6→(7월)-8.0→(8월)-5.2

■ **전월대비로는 5.0% 감소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3.5%,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5.2% 감소**

- 세부 부문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문에서 8.4%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6월)2.5→(7월)-5.2→(8월)-5.0

[그림 16]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9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큰 폭 상승

■ **9월 원유 가격은 배럴당 72.8달러로 전월대비 5.7%, 전년동월대비로는 79.3% 상승**

-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여파로 미 멕시코만 원유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미국 원유 재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 상승
- 미국 원유 재고(배럴): ('20.09.25.)4억 9,242만 6,000 배럴→('21.09.24.)4억 1,854만 2,000 배럴 (전년동기대비 15%감소)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1.7월)73.3→(8월)68.9→(9월)72.8

■ **9월 석탄 가격은 톤당 185.7달러로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로는 240.1% 크게 상승하였고, 이 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

-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발생한 중국의 석탄 수급 문제[2]와 글로벌 석탄 가격 상승은 중국 전력대란을 야기했고, 이는 다시 석탄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짐[3]
- 석탄 가격(달러/톤): ('08.7월)180.0→('21.7월)152.0→(8월)169.6→(9월)185.7

■ **9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13.9달러로 전월대비 28.4%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35.6%로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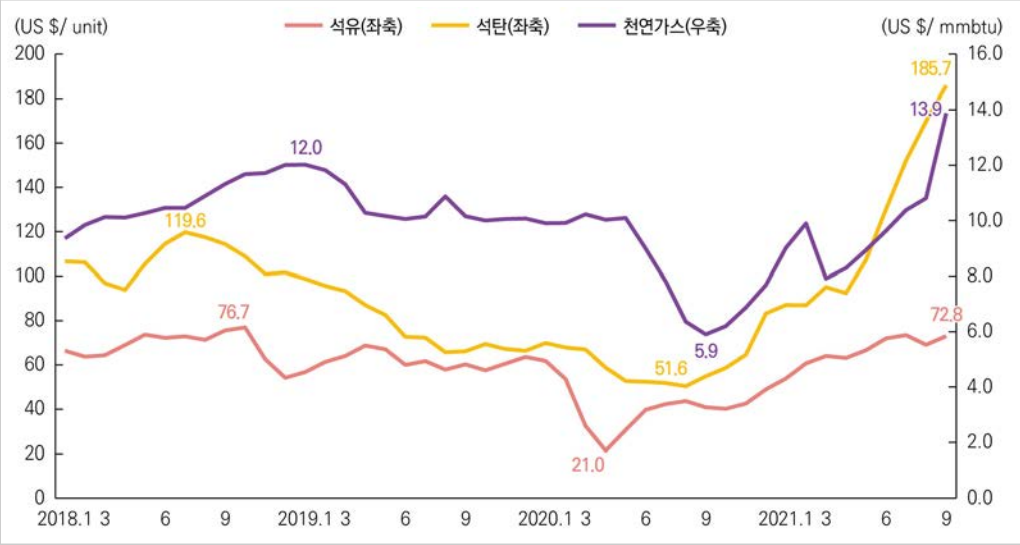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전년의 1.92달러에서 5.11달러로 165.7% 상승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의 3.95달러에서 22.84달러로 477.9% 상승
-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 문제, 유럽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연료로서 수요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1.7월)10.4→(8월)10.8→(9월)13.9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2) 최근 글로벌 석탄 가격 상승은 근본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증가한 석탄 수요를 생산·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조치가 직접적으로 글로벌 석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호주를 대체하는 석탄 수입처를 찾는 과정에서 글로벌 석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더불어 호주산 석탄은 수출선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여 한국,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로 바로 수출되지 못하였고, 지난 3월 역대급 폭우로 석탄 생산에 차질 발생.

3) 전력대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산업계에 감산 또는 생산 중지를 명령함. 이에 따라 각종 원료와 원부자재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고,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에 충격과 가격 폭등을 야기함.

[그림 17]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전월대비 9월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모두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귀금속 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 9월 농산물 지수는 전월대비 0.7%, 식품 지수는 전월대비 1.5%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20.9%, 26.9% 상승

- 농산물 중 유채씨유, 고기·닭고기, 대두유, 설탕, 야자유, 목화, 커피 등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73.7%, 61.6%, 54.4%, 53.4%, 48.4%, 46.4%, 43.7% 크게 상승
- 농산물 지수: ('21.7월)107.6→(8월)108.4→(9월)107.7
- 식품 지수: ('21.7월)121.1→(8월)120.9→(9월)1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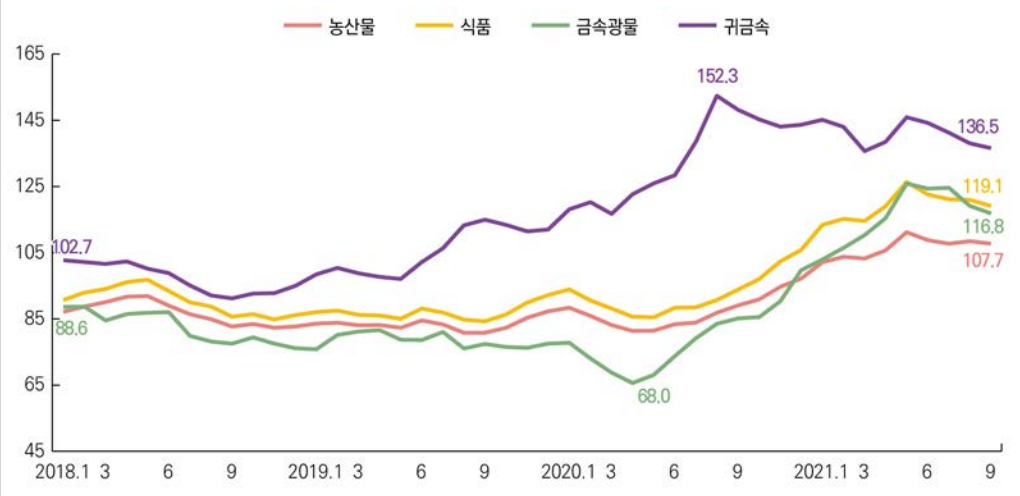
■ 9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1.9%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7.2% 상승

- 주석,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등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94.3%, 62.6%, 39.1%, 30.4%, 24.3% 큰 폭으로 상승
- 알루미늄 생산 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세계 최대 매장국인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9월 5일 발생한 쿠데타로 알루미늄 가격 폭등
- 금속·광물 지수: ('21.7월)124.5→(8월)119.0→(9월)116.8

■ **9월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1.1%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7.8% 하락**

- 금, 백금, 그리고 은의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각각 0.6%, 3.5%, 3.3% 하락
- 귀금속 지수: ('21.7월)141.2→(8월)138.0→(9월)136.5

[그림 18]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1년 7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작년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반영하는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또한 증가

■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서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열 에너지원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전체는 8.1% 증가**

- 특히, 신재생 및 기타, 전력,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에너지원 소비가 많이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산업, 공공, 가정·상업, 수송 모든 부문에서 최종에너지소비가 증가하여, 작년 7월에 비해 올 해 7월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에너지원별 소비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신재생 및 기타(9.6), 전력(9.5), LNG(8.9), 석유(8.4), 도시가스(7.1), 석탄(5.2), 열(-1.0)
- 부문별 소비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산업(10.7), 공공(8.7), 가정·상업(3.6), 수송(2.4)

■ **전월대비로는 계절적 특성상 난방 수요 감소로 열, 도시가스 소비가 많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에너지원 소비가 모두 증가하여 전체는 3.8% 증가**

- 부문별로는 전월대비 공공, 산업, 가정·상업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고, 수송 부문 소비는 감소
- 에너지원별 소비 증감률(전월대비, %): LNG(10.8), 전력(9.4), 석탄(8.7), 신재생 및 기타(4.3), 석유(2.0), 도시가스(-8.1), 열(-17.8)
- 부문별 소비 증감률(전월대비, %): 공공(9.1), 산업(6.1), 가정·상업(0.8), 수송(-2.6)

※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표 4]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 1,000 toe)

	2018	2019	2020	2021*			
				7월	6월	7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1,892	17,522	18,249	18,944	8.1	3.8
전년동월대비	1.2	-0.9	-4.1	-5.4	7.2	8.1		
석탄	32,480	32,057	30,457	2,558	2,475	2,691	5.2	8.7
석유	116,831	116,125	109,484	9,071	9,642	9,838	8.4	2.0
액화천연가스	2,038	2,909	3,602	318	313	347	8.9	10.8
도시가스	24,979	23,943	23,105	1,132	1,319	1,212	7.1	-8.1
전력	45,249	44,763	43,797	3,618	3,621	3,960	9.5	9.4
열	2,682	2,646	2,657	77	93	76	-1.0	-17.8
신재생 및 기타	9,110	8,910	8,789	748	786	820	9.6	4.3

주: 2021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5]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 1,000 toe)

	2018	2019	2020	2021*			
				7월	6월	7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1,892	17,522	18,249	18,944	8.1	3.8
전년동월대비	1.2	-0.9	-4.1	-5.4	7.2	8.1		
산업	143,498	142,903	137,141	11,436	11,928	12,657	10.7	6.1
수송	42,959	42,975	38,929	3,331	3,500	3,500	2.4	-2.6
가정·상업	41,343	40,088	40,650	2,345	2,411	2,411	3.6	0.8
공공	5,567	5,388	5,173	410	409	409	8.7	9.1

주: 2021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다. 전력수급 동향

9월 전력 수급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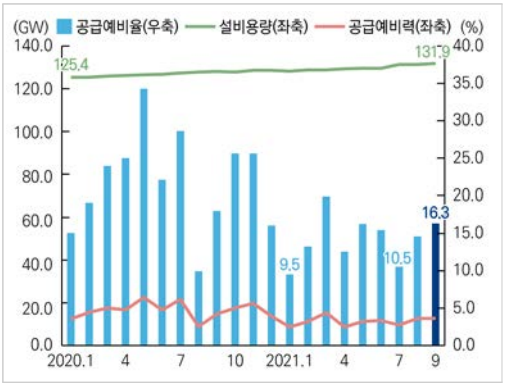
■ **9월 발전설비용량은 131,196MW이며, 전월대비 546MW증가했으며 태양광 409MW, 바이오 100MW, 연료전지 20MW가 신규 설치됨**

- 석탄화력은 2021년 6월이후, 가스화력은 2020년 1월이후 신규 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9월 평균 최대전력은 69.3GW로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최대전력량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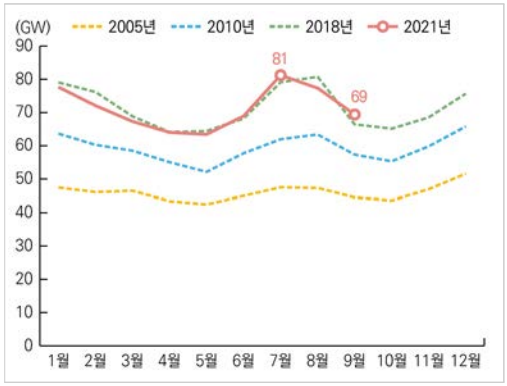
- 9월 전국 평균기온은 21.3℃로 평년(20.5℃)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산업생산 증가에 따라 최대전력 수요가 증가

[그림 19]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0] 월별 평균 최대전력



자료: 전력거래소

9월 발전량은 전월대비로는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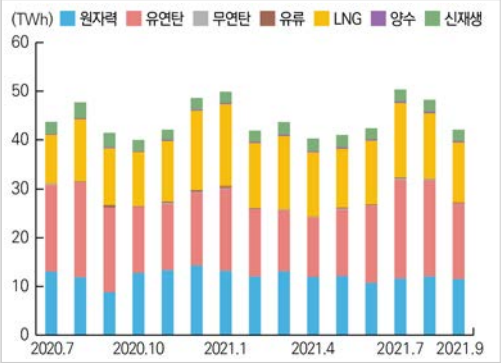
■ **9월 발전량은 냉방수요 감소로 전월대비 12.7% 감소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6% 증가**

- 역대 9월 중 가장 많은 발전량을 기록하여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상화 단계에서 추가적인 전력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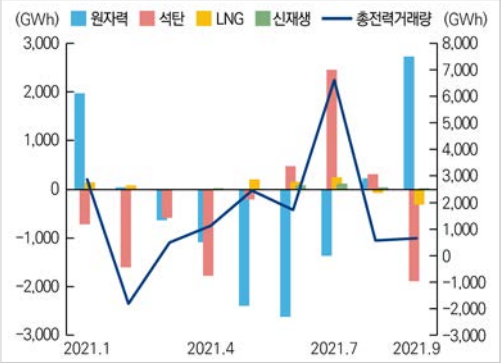
■ **9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주요 발전원이 모두 감소하여 원자력은 4.8%,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은 각각 27.3%, 9.6% 감소**

- 전년동월대비 원자력은 30.8%, 가스발전 5.8% 증가했으나, 석탄발전은 12.1% 감소

[그림 21] 전력거래량



[그림 22] 전월대비 에너지원별 전력거래량



주 :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의 연료원별 전력거래량으로 PPA 거래량은 미포함
자료: 전력거래소

9월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했으나,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감소로 전월대비 발전량은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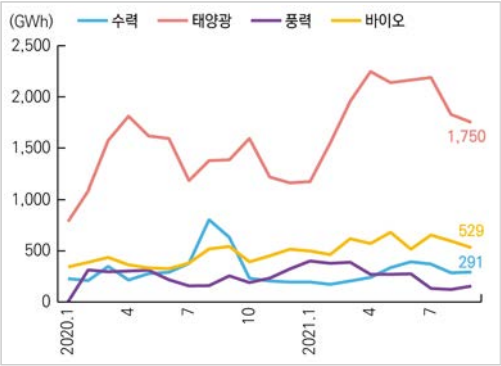
■ **9월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409GWh로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는 2.1% 감소**

- 전년동월대비 태양광은 10.0%, 바이오는 34.9% 증가한 반면, 풍력은 7.8% 감소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51.3%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기타(18.4%), 바이오(15.5%), 수력(8.5%), 풍력(6.2%)로 구성

■ **9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31,511원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31.0% 하락했으나, 전월대비로는 5.3% 상승하여 3만원대를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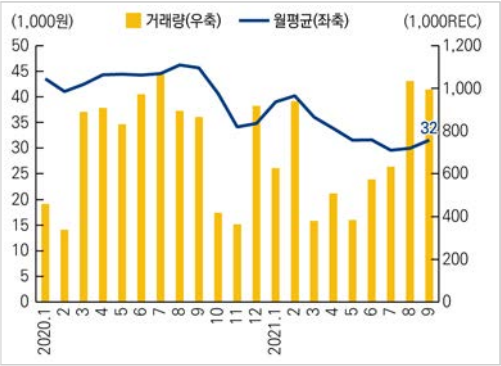
- REC 공급량이 수요량인 REC 의무공급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하락

[그림 23]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자료: 한국전력

[그림 2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자료: 한국전력

2021년 8월 전력수요는 냉방 증가와 산업부문 생산활동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가정부문의 소비가 25.8% 증가하였고, 서비스부문은 8.6%, 산업부문은 6.0% 증가**

■ **전월대비로는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해 가정과 서비스부문의 증가율이 각각 33.4%와 9.8%로 높았으나, 산업부문은 2.3% 하락**

- 7월 평균기온은 평년값(최근 30년 평균)보다 1.4℃ 높았으며,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최고기온 기준 6.0일로 작년의 0.1일보다 매우 빈번히 발생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8	2019	2020	2021*			
				8월	7월	8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26,149	520,499	509,270	44,599	45,972	48,930	9.7	6.4
전년동기대비	3.6	-1.1	-2.2	-6.2	9.3	9.7		
가정부문	70,687	70,455	74,073	7,171	6,764	9,022	25.8	33.4
공공부문	24,569	24,458	23,623	2,113	2,117	2,136	1.1	0.9
서비스부문	147,189	145,816	142,881	12,782	12,652	13,886	8.6	9.8
산업부문	283,704	283,705	268,692	22,533	24,439	23,885	6.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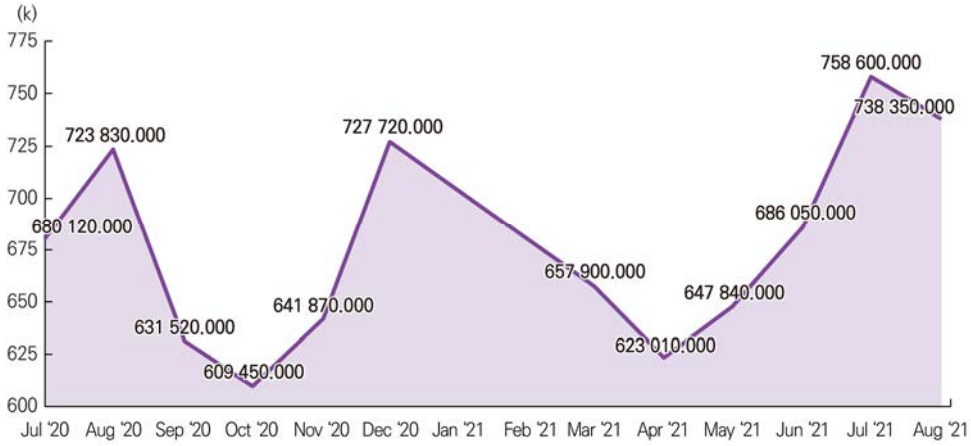
주 :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1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전력통계월보

[최근 중국의 전력수급 현황]

■ **최근 중국의 전력수급 불안은 전력수요 증가와 발전용 에너지 공급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중국의 전력수요는 산업용이 60% 이상으로 산업생산활동의 영향이 크며, 최근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수요가 크게 증가
  - 8월 전력생산량은 738TWh로 전월대비로는 9.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0.2%, 2019년 8월대비로는 7.1% 증가한 수준
  - 1~8월 누적 전력생산량은 5,389GWh로 전년대비 11.3%, 2019년대비 11.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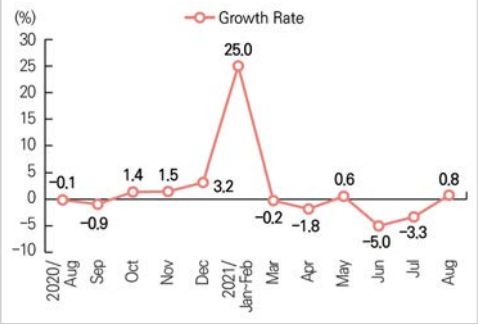


자료: CEIC, *China Electricity Production*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china/electricity-production

- 중국 전력생산은 석탄발전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자국 석탄 생산감소와 수입물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석탄수급 불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중국 통계청은 1~8월에는 중국내 석탄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으나, 상반기 중 6~7월 석탄생산은 다소 부진한 반면 8월에는 0.8%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힘
  - 석탄수입량은 1~6월에는 전년대비 15% 감소하여 중국 내 석탄 재고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8월에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산 수입을 확대함

※ 중국의 2018~2019년 기준 주요 석탄 수입국은 인도네시아(45.3%), 호주(27.1%), 몽고(12.5%), 러시아(10.3%) 였음

중국의 석탄생산량 변화율



중국의 석탄수입량

자료 :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2108/t20210817_1820687.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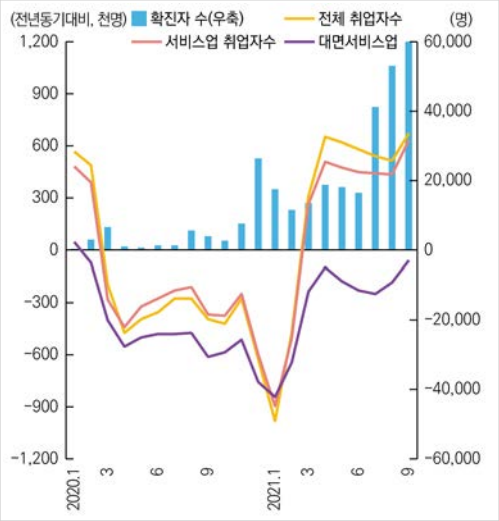
4. 고용

9월 중 고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되며 전월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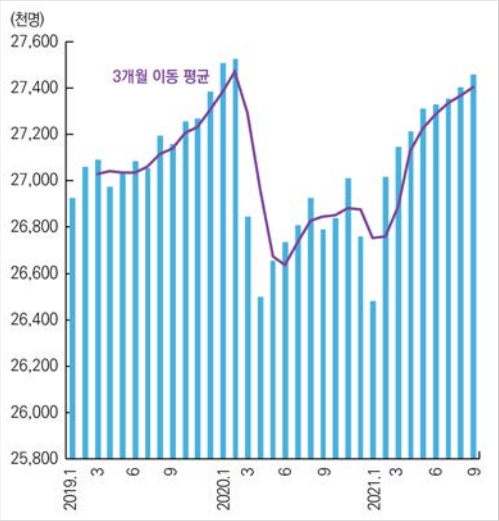
■ **9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었으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 등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되며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

- 9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68.3만명)는 전년동월대비 67.1만 명(2.5%) 증가하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9월 중 6.0만명으로 전월(5.3만명)에 비해 늘며 확산세가 지속되었으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의 취업자수 감소폭(8월 -18.4만명→9월 -6.0만명)이 둔화되며 서비스업(8월 43.6만명→9월 63.2만명)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 보다 큰 폭으로 확대
-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둔화(37.7만명→32.3만명)되었음에도 청년층(14.3만명→21.9만명)과 50대(7.6만명→12.4만명)를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그림 25] 코로나19 확진자수와 대면서비업 취업자 증감



[그림 26] 전체 취업자수 추이



주: 1)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
2) 전체 취업자수는 계절조정치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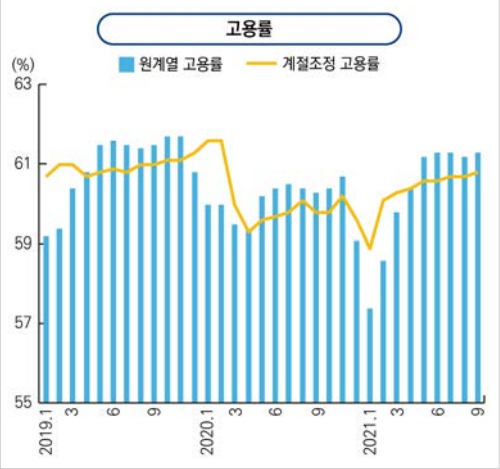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하여 전월(61.2%, 0.8%p)보다 상승폭 확대**

- 청년층(45.3%, 3.2%p)과 30대(75.4%, 1.3%p), 50대(75.8%, 1.4%p), 40대(77.6%, 0.8%p), 60세 이상(44.5%, 0.3%p) 등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
- 계절조정 고용률은 60.8%로 전월보다 0.1%p 상승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2%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자는 75.6%(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자는 58.5%(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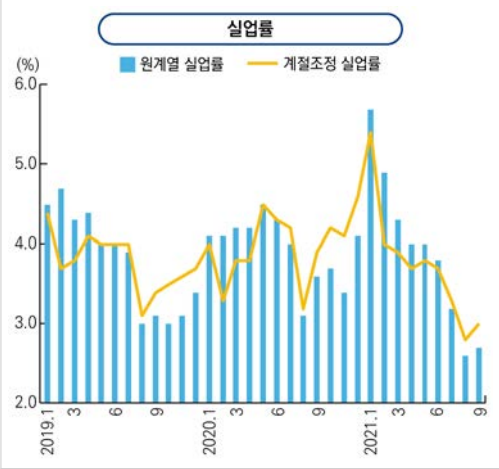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2.7%로 전월(2.6%)에 이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9%p 하락**

- 청년층(5.4%, -3.5%p), 30대(2.5%, -1.1%p), 40대(1.9%, -0.5%p), 50대(2.2%, -0.2%p), 60세이상(2.2%, -0.1%p) 등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0%로 전월대비 0.2%p 상승
- 실업자는 75.6만명으로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4.4만 명(-24.4%) 감소

[그림 27]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건설업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7만 명 증가하며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었으나, 2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14.1→(5월)13.2→(6월)14.0→(7월)9.2→(8월)12.3→(9월)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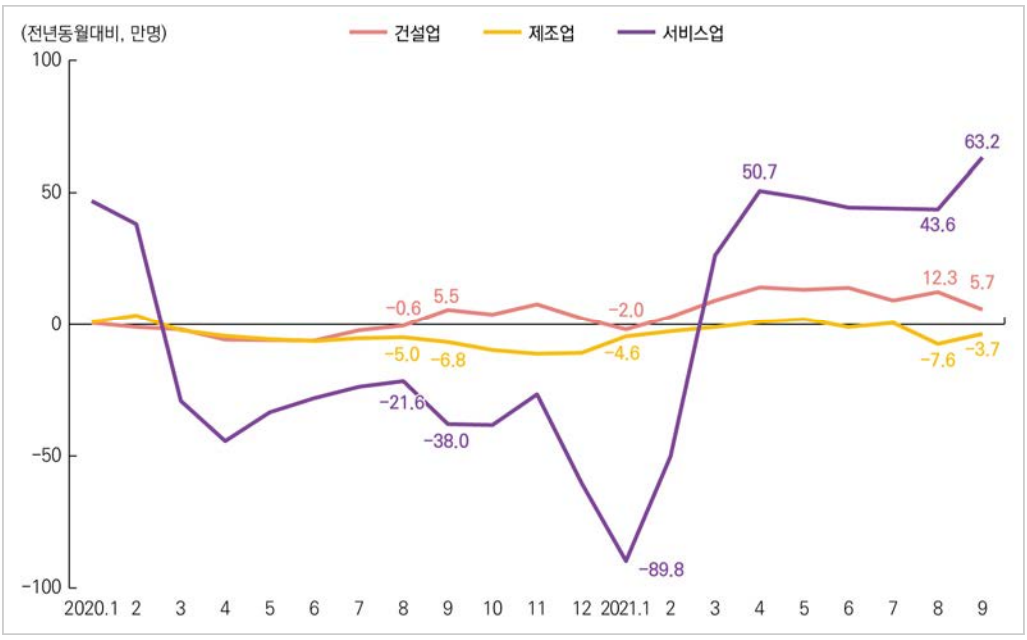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0.9→(5월)1.9→(6월) - 1.0→(7월)0.6→(8월) - 7.6→(9월)-3.7

■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되며 양호한 상황**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50.7→(5월)47.9→(6월)44.4→(7월)44.1→(8월)43.6→(9월)63.2
- 2020년의 9월은 코로나19 2차 확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이 위축되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2021년 9월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 확대에는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21.8월 - 3.8만 명→9월 3.9만 명)
- 다만, 도소매업(- 12.2만 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3.4만 명), 협회·수리·기타개인서비스(- 4.1만 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

[그림 28]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과 40~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60세 이상의 증가세는 축소되었으며,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9만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17.9→(5월)13.8→(6월)20.9→(7월)18.4→(8월)14.3→(9월)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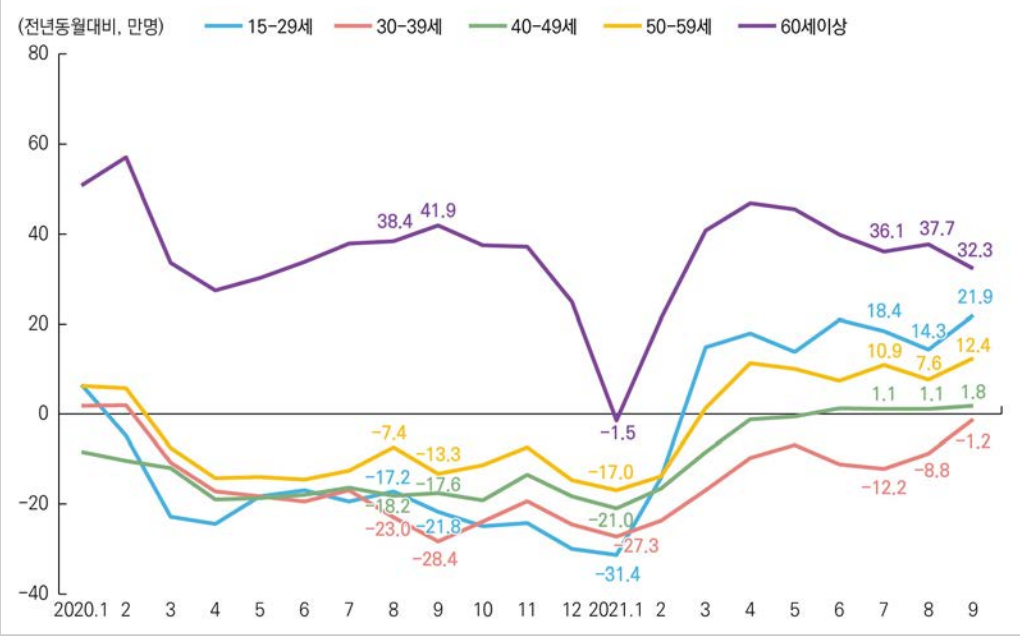
■ **핵심 노동연령대인 30~50대 취업자 수는 2021년 6~8월에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9월에는 13.0만 명 증가하며 증가 전환**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0.3→(5월)2.5→(6월) - 2.6→(7월) - 0.2→(8월) - 0.1→(9월)13.0
- 30대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축소되었지만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감소세가 지속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전년동월대비 32.3만 명 증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46.9→(5월)45.5→(6월)39.9→(7월)36.1→(8월)37.7→(9월)32.3

[그림 29]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용직은 감소하였고, 자영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취업자 수는 51.5만 명, 임시직 취업자 수는 34.0만 명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31.1→(5월)35.5→(6월)32.1→(7월)36.1→(8월)32.4→(9월)51.5
-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37.9→(5월)30.7→(6월)36.0→(7월)35.2→(8월)31.2→(9월)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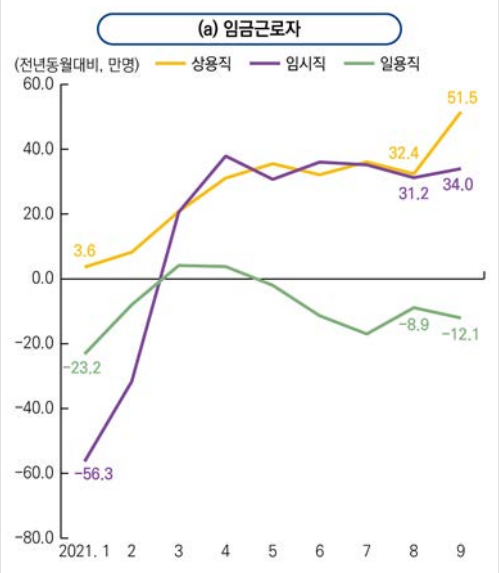
■ **반면, 일용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1만 명 감소하며 2021년 5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3.8→(5월) - 2.0→(6월) - 11.4→(7월) - 17.0→(8월) - 8.9→(9월) -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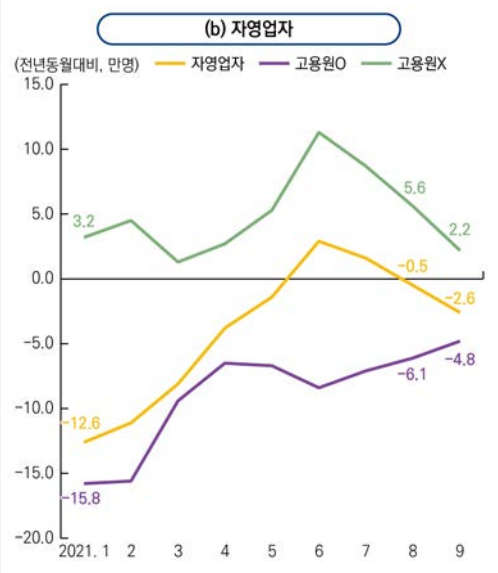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완화되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세 둔화가 이를 능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명 감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 - 6.5→(5월) - 6.7→(6월) - 8.4→(7월) - 7.1→(8월) - 6.1→(9월) - 4.8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2.7→(5월)5.3→(6월)11.3→(7월)8.7→(8월)5.6→(9월)2.2

[그림 3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그림 3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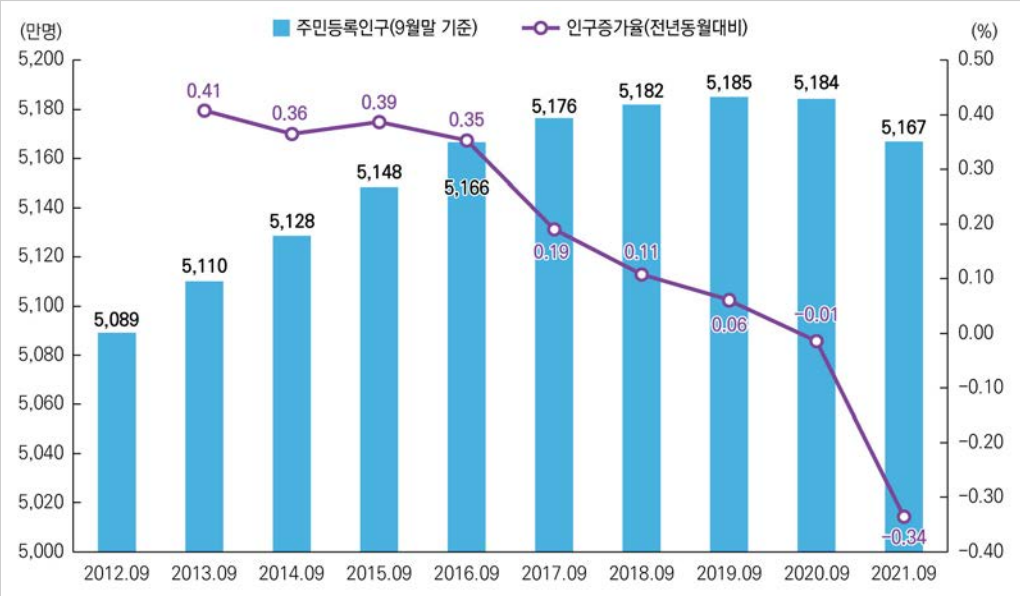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인구

2021년 9월 주민등록인구는 5,16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명(-0.34%) 감소

■ 각 연도 9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3년 0.41%, 2015년 0.39%, 2019년 0.06%, 2020년 -0.01%, 2021년 -0.34%로 하락

[그림 31]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9~2021.9)



주: 각 연도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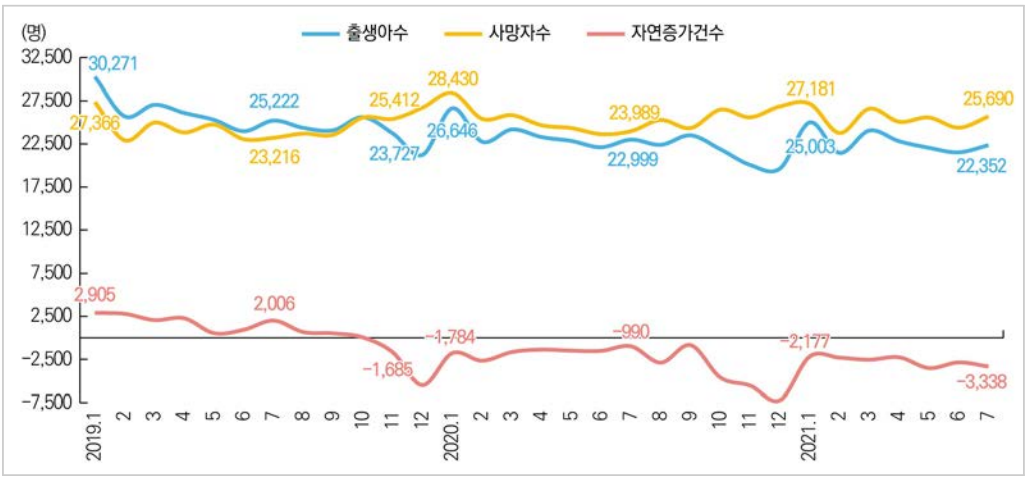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1개월째 지속

■ 2021년 7월 출생아 수는 22,352명, 전년동월대비 647명(-2.8%) 감소

■ 2021년 7월 사망자 수는 25,690명, 전년동월대비 1,701명(7.1%) 증가

■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338명 많아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 째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32]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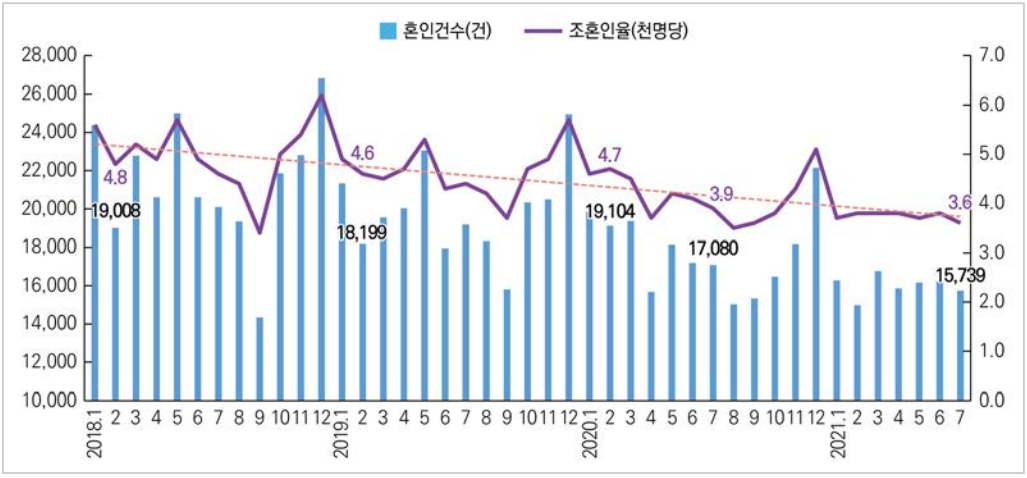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7월의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전년동월 감소

- **2021년 7월 혼인건수는 15,73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41건(-7.9%) 감소,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률은 3.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2건 감소**

- **2021년 1~7월까지의 총혼인건수는 112,0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363건(-11.4%) 감소**

[그림 33]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8.01~2021.07)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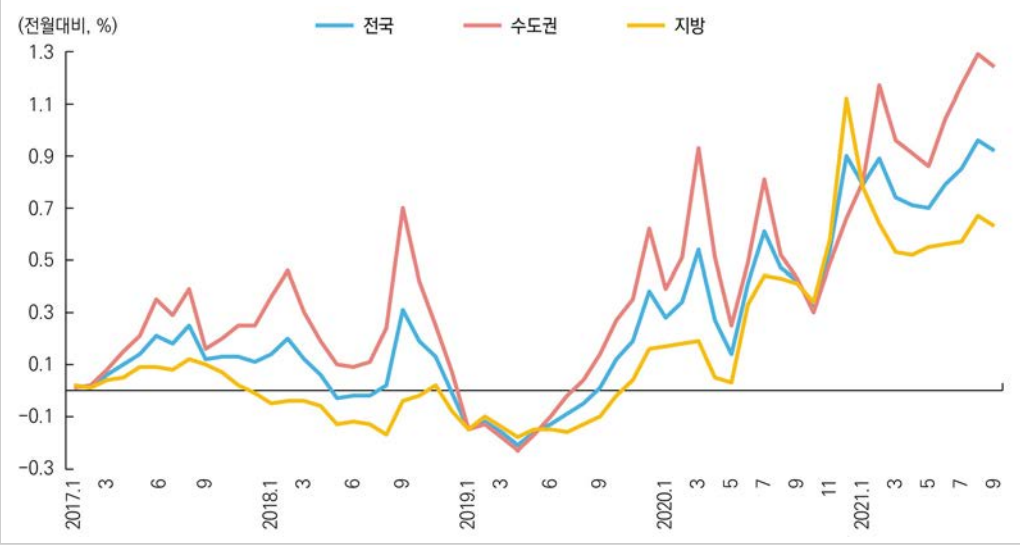
6. 부동산

2021년 9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92%, 수도권 1.24%, 지방은 0.63%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축소**

- 수도권은 서울의 재건축 등 인기단지와 중저가 위주로, 경기 지역은 교통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주거환경 양호 지역 대단지 위주로 상승
- 지방은 울산 0.67%, 대전 0.60%, 충북 0.59%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34]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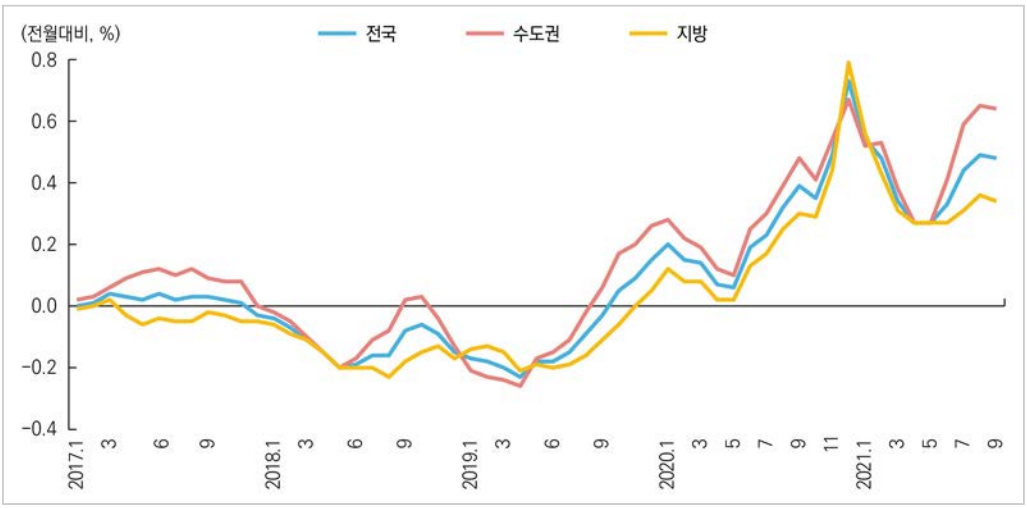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전국 0.48%, 수도권 0.64%, 지방 0.34%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

- 수도권 및 지방의 전세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나, 월세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통합지수 상승폭이 소폭 축소

[그림 35]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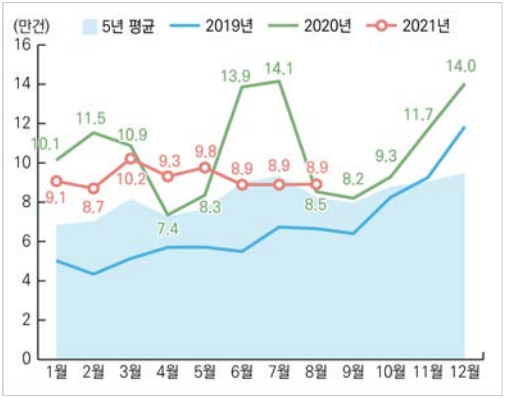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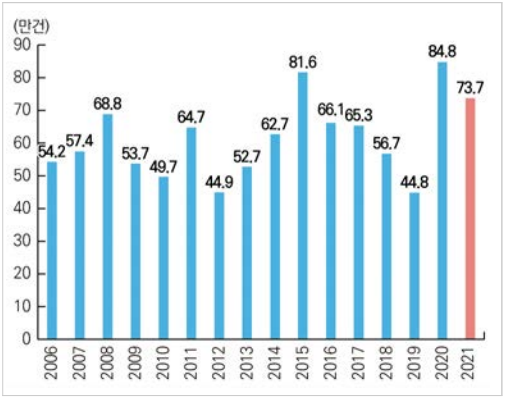
■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 9,057건으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수도권(4.2만건)은 전월대비 1.0% 감소, 전년동월대비 3.3% 감소
- 지방(4.7만건)은 전월대비 1.1% 증가,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그림 36]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그림 37] 연도별 8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1,462건으로 전월대비 4.0% 증가,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4.9%로 전월대비 0.9%p 증가, 전년동월대비 4.5%p 증가

[그림 38]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39]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III

해외경제 동향

최근 미국 경제는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증가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애로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지속

- 8월 중 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며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되었으나,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전월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 8월 중 PCE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애로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영향 등이 지속되며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 흐름이 이어짐

중국 경제는 원자재가격 상승, 전력난 발생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 8월 중국의 산업생산(6.4%), 소매판매(0.9%), 고정자산투자(8.9%)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
- 8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외 물가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8월 중국의 종합PMI는 원자재가격 상승, 전력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기준선(50.0)보다는 소폭 높은 51.7 기록

유로지역은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실물지표가 회복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 7월 중 산업생산과, 8월 중 소매판매가 모두 증가하며 실물지표가 차츰 회복
- 2021년 들어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신규 확진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상승세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8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3.2%)과 소매판매액(-4.1%)은 모두 전월대비 감소
- 8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통신비 인하에 따른 효과로 교통·통신(-6.6%) 물가가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0.4% 하락
- 8월 비농업취업자수는 도소매업(17만명),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업(33만명)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

III.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증가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지속

■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9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인구의 56.0%가 백신접종 완료**

-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7일 이동평균, 만명): (8.6일)10.7→(8.16일)14.2→(8.23일)15.1→(9.1일)16.6→(9.13일)17.6→(9.22일)13.1→(10.1일)10.9
- 백신접종율은 10.4일 기준(미국 질병관리센터) 전체 인구대비 65.0%(2억1,574만 명)가 최소 1회 접종하였으며, 접종 완료는 56.0%(1억8,606만 명)로 전월대비 3.3%p 증가(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67.4% 접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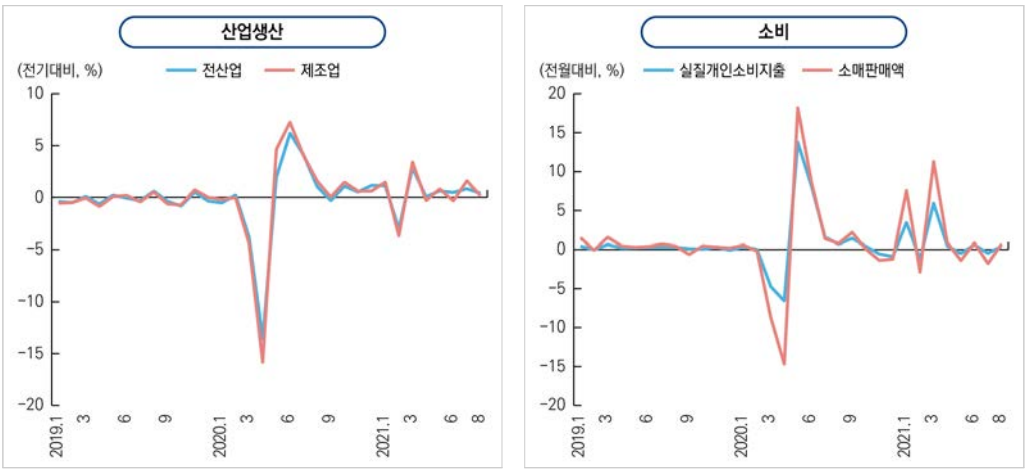
■ **8월 중 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부품(7월 9.5%→8월 0.1%), 광업(7월 1.0%→8월 -0.6%) 등을 중심으로 위축되며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5개월 연속 60을 상회하며 호조세를 나타냄**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6월)0.5→(7월)0.8→(8월)0.4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6월)-0.3→(7월)1.6→(8월)0.2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구매자지수(기준치=50)는 9월 중 61.1으로 전월(59.9)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감

■ **8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전월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 실질개인소비지출은 비내구재소비(1.7%)와 서비스소비(0.3%)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증가하였고, 소매판매도 전월(-1.8%)의 감소에서 벗어나 전월대비 0.7% 증가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9월 중 109.3로 전월(113.8)에 비해 하락하였고, 지난 6월(128.9) 이후 3개월 연속 둔화

[그림 1] 미국의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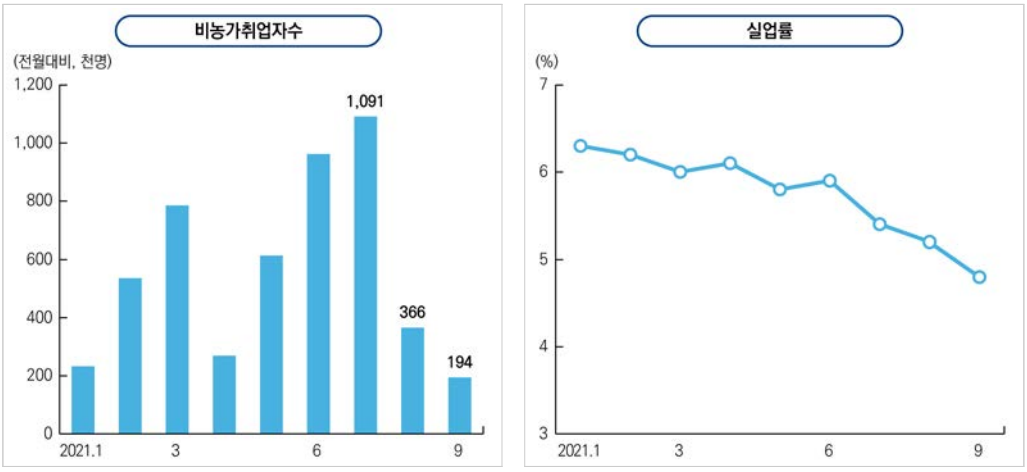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9월 중 실업률은 전월에 이어 하락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비농가취업자수 증가폭은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축소**

- 9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9.4만 명 증가하여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실업률은 4.8로 전월대비 0.4%p 하락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1.7월)109.1→(8월)36.6→(9월)19.4
- 실업률(%): ('21.7월)5.4→(8월)5.2→(9월)4.8

[그림 2] 비농가취업자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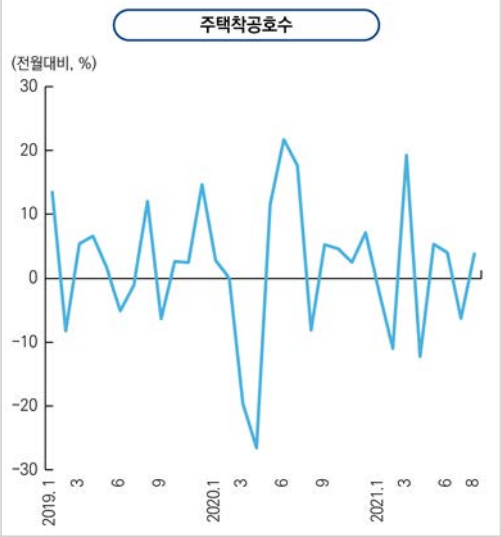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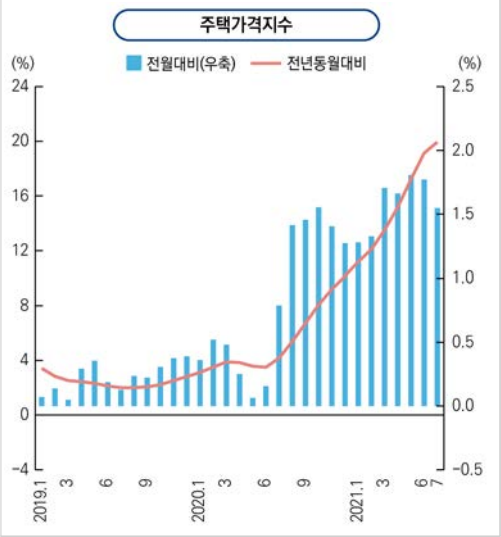
주: 월간 구인건수는 비농가기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주택시장은 8월 중 주택착공호수가 증가 전환되었고, 7월 중 주택가격은 전월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됨**

- 8월 중 주택착공호수는 전월(-6.2%)의 감소에서 벗어나 전월대비 3.9% 증가
- 7월 중 주택가격(S&P/Case-Shiller지수기준)은 전월대비 1.5% 상승하여 전월(1.8%)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9.9% 상승하며 전월(19.1%)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

[그림 3] 주택착공호수 및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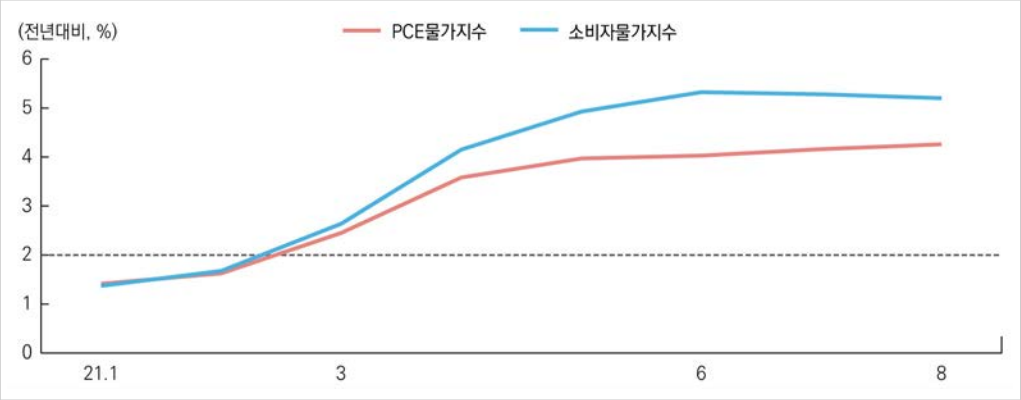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8월 중 PCE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 증가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애로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영향 등이 지속되며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 흐름이 이어짐**

- 8월 중 PCE물가는 4.3% 상승하여 전월(4.2%)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물가는 자동차연료(42.5%), 내구재(12.8%), 대중교통(8.4%) 등을 중심으로 5.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5%를 상회
- 근원PCE물가상승률은 3.6%로 3개월 연속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연준의 장기목표 수준(2.0%)을 5개월 연속 1%p 이상 상회하는 모습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1.7월)4.7→(8월)4.6→(9월)4.6

[그림 4]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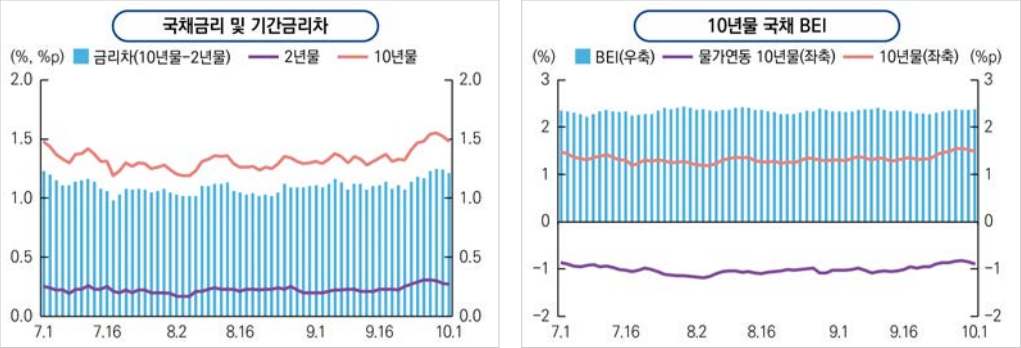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9월 중 시장금리는 연준의 FOMC회의 이후 양적 완화 축소 시기 임박 시사 및 정책금리 인상횟수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 2년물 금리는 9월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정책금리 인상횟수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0.22%에서 0.31%까지 상승하며 월간으로는 전월(0.22%)보다 0.02%p 상승한 0.24%를 기록
-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FOMC 회의 직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단기금리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며 9월 중 월평균 1.37%(전월대비 0.09%p 상승)를 기록함에 따라 2년물과의 기간금리차는 1.13%p로 전월보다 0.07%p 확대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21.7월)1.10→(8월)1.06→(9월)1.13
-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9월 중 2.34%로 전월(2.35%)에 비해 소폭 하락

[그림 5] 미국 기간금리차 및 10년물 국채 BEI[1)]의 일별 추이



주: 1) BEI(break-even inflation rate) = 10년 일반국채금리 - 물가연동채권 10년물 금리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미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 및 수정경제전망]

■ **미 연준은 9.21~22일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재 수준(0.00~0.25%)에서 유지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도 지속하기로 결정**

- 최근 미국 경제는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팬데믹의 악영향을 받는 부문은 회복세가 느려졌다고 평가
- 인플레이션은 주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높아진 상태(Inflation is elevated, largely reflecting transitory factors)라고 진단
-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룰 때가지 매월 최소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정부기관 MBS 보유 확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함
- 또한 향후 연준의 정책목표를 향한 진전이 예상대로 지속된다면 자산매입 속도의 완화(a moderation in the pace of asset purchases)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수정전망에서는 2021년 실질GDP 성장률이 이전(6월)에 비해 상당폭 하향 조정된 반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상향 조정됨**

- 실질GDP 성장률(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2021년 5.9%에서 2022년 3.8%로 하락하고, 이후 2024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21년 4.8%(4/4분기 기준)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장기 전망수준(4.0%)을 하회하고 2024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PCE물가상승률은 2021년 4.2%(4/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까지 상승한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장기균형 수준 (2.0%)을 소폭 상회한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미 연준의 수정 경제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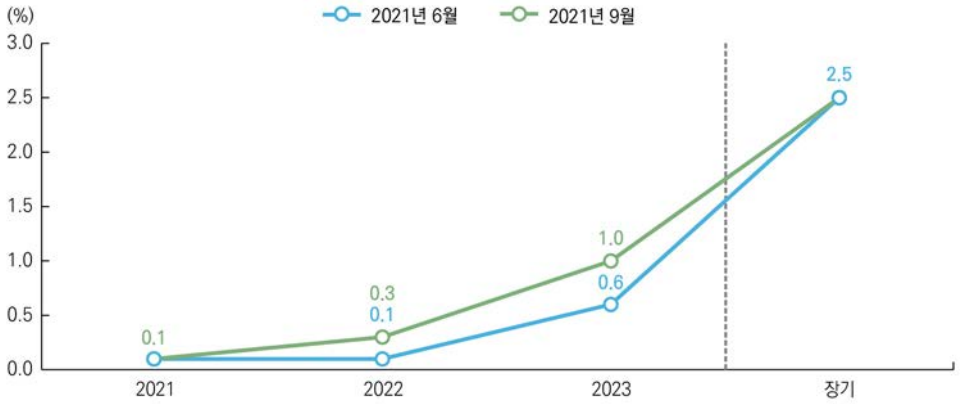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장기
실질GDP성장률	5.9	3.8	2.5	2.0	1.8
('21년 6월전망)	7.0	3.3	2.4		1.8
실업률	4.8	3.8	3.5	3.5	4.0
('21년 6월전망)	4.5	3.8	3.5		4.0
PCE물가상승률	4.2	2.2	2.2	2.1	2.0
('21년 6월전망)	3.4	2.1	2.2		2.0
근원 PCE물가상승률	3.7	2.3	2.2		
('21년 6월전망)	3.0	2.1	2.1		

주: 회의참석자 예측치의 중간값(median) 기준임

■ **정책금리는 2022년 말 0.3%로 상승하고,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각각 1.0%, 1.8%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2021년 말 정책금리는 회의 참석자 전원(18명)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
- 회의 참석자 중 2022년 정책금리 인상 예상자는 지난 6월의 7명에서 9명으로, 2023년은 13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증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



주: 회의참석자의 연말 정책금리 예측치의 중간값 기준임

2. 중국

중국 경제는 원자재가격 상승, 전력난 발생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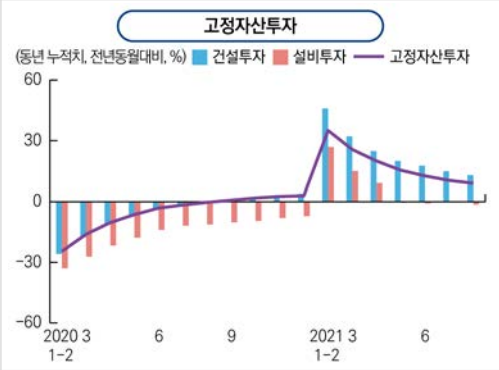
■ **8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광업(2.5%), 제조업(5.5%), 전기·가스·수도업(6.3%) 등에서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6.4% 증가**

■ **8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재화(3.3%)부문의 증가세가 전월(7.8%)보다 둔화되는 한편, 외식업(-4.5%)에서는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0.9% 증가에 그침**

■ **8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설비투자(-1.4%)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건설투자(12.9%)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8.9% 증가**

[그림 6] 중국 실물지표 추이

자료: CEIC



자료: CEIC

■ **8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물가(-4.1%)의 하락폭이 전월(-3.7%)보다 확대되었으나 식료품외 물가가 1.9%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8월 중국 생산자물가는 전력난의 영향으로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의 생산가격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9.5% 상승

  * 전력난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업종의 공장가동이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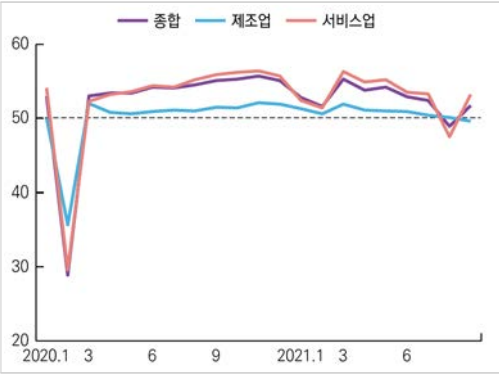
■ **8월 중국의 종합PMI는 원자재가격 상승, 전력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기준선(50)보다는 소폭 높은 51.7를 기록**

- 8월 중국의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49.3을 기록하며 전월(49.6)보다 감소
- 8월 중국의 제조업PMI는 49.6을 기록하며 기준선(50)을 하회하였으며, 서비스업PMI는 53.2를 기록
- 종합PMI: ('21.7월)52.4→(8월)48.9→(9월)51.7

[그림 7]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중국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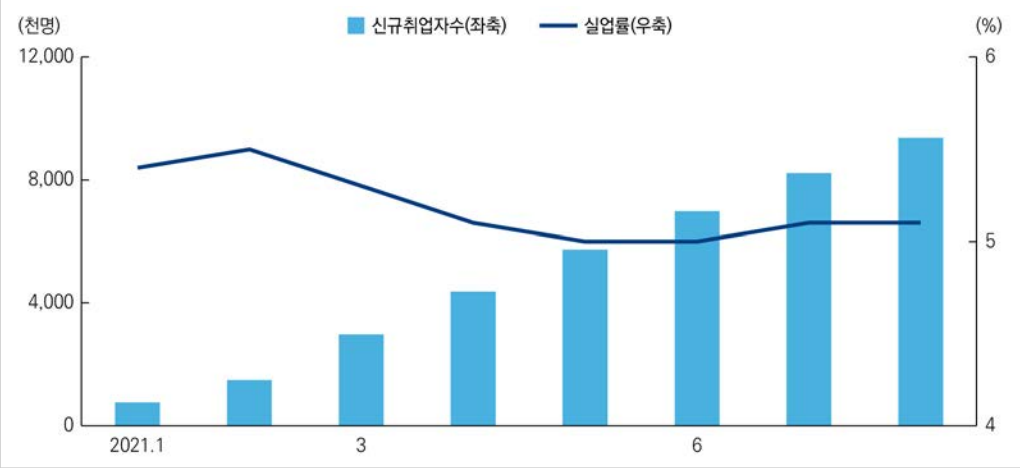


자료: CEIC

■ **8월 중국의 도시실업률은 5.1%를 기록(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8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93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증가

[그림 9] 중국 도시실업률 및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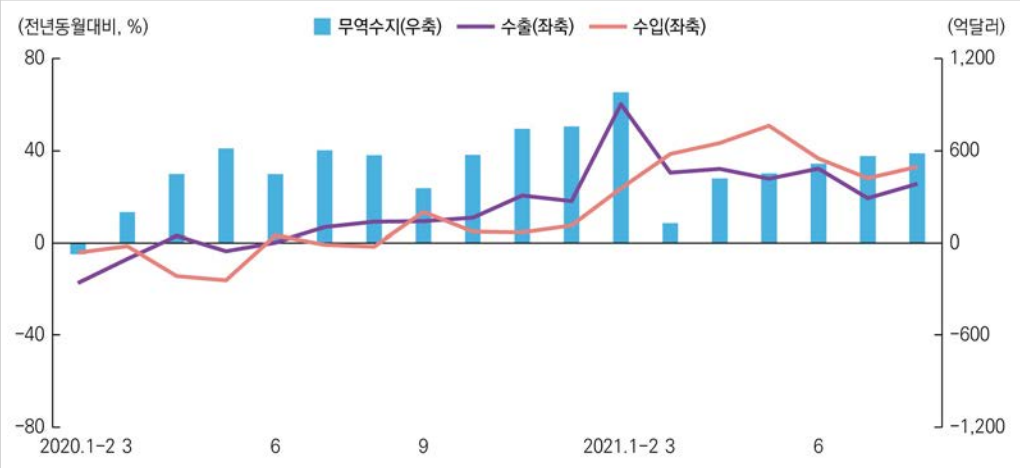


자료: CEIC

■ **8월 중국의 수출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수입의 경우 원자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 8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25.6%, 33.1%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년동월(571.0억 달러)보다 2.2% 증가한 583.3억 달러 흑자를 기록

[그림 10]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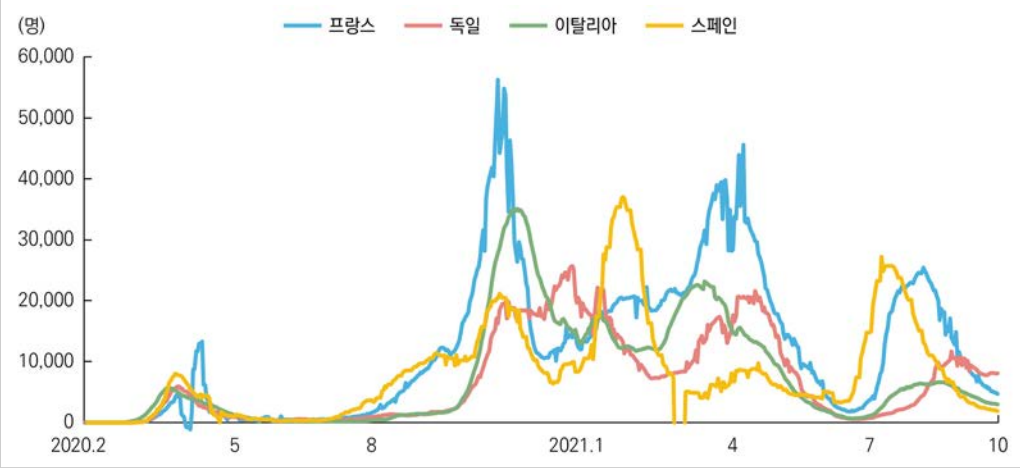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실물지표가 회복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 **유로지역은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유로지역 주요국 인구당 접종완료율(%): 스페인(78.7), 아일랜드(74.2), 벨기에(72.5), 프랑스(66.2), 독일(64.3), 이탈리아(68.5)[1)]

[그림 11] 유로지역 주요국 신규 확진자수 추이



주: 7일 이동평균
자료: Our World In Data

■ **산업생산은 5~6월 중 에너지부문과 자본재 생산이 줄면서 감소하였으나, 7월 중 자본재 생산이 2.7% 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 전환**

- 산업생산(전월대비, %): ('21.5월)-1.1→(6월)-0.3→(7월)1.5
- 국가별 산업생산(전월대비, %): 벨기에(5.0), 덴마크(3.2), 오스트리아(1.2), 그리스(2.4), 독일(1.0), 이탈리아(0.8), 스페인(0.3)

■ **8월 중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판매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음식료품 제외 상품의 판매가 1.8% 늘면서 전월대비 0.3%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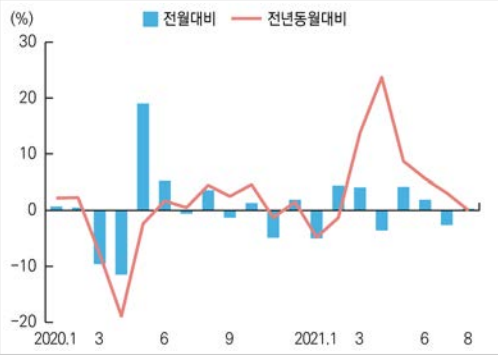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6월)1.9→(7월)-2.6→(8월)0.3
- 국가별 소매판매(전월대비, %): 벨기에(1.6), 독일(1.1), 네덜란드(1.0), 스페인(-0.4), 프랑스(-1.2)

1) 자료: Our World in Data, 2020.10.5일 기준)

[그림 12]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3]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9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오름세 등으로 3.4% 상승하여 13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

-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9월 큰 폭 하락(-8.2%)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17.4% 상승
-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도 상승폭을 확대하여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9월 1.9%까지 상승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7월)0.7→(8월)2.6→(9월)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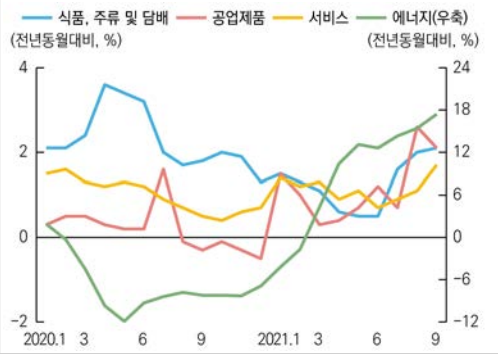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7월)0.9→(8월)1.1→(9월)1.7

- 특히 독일의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 종료[2]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하여 2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5]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2) 독일정부는 2020년 7월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

■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2020년 8월 중 정점(8.6%, 19.6%)을 기록한 후 개선세를 지속하여 2021년 8월 중 각각 7.5%,16.4%까지 하락**

- 유로지역 실업률(계절조정, %): ('21.6월)7.8→(7월)7.6→(7월)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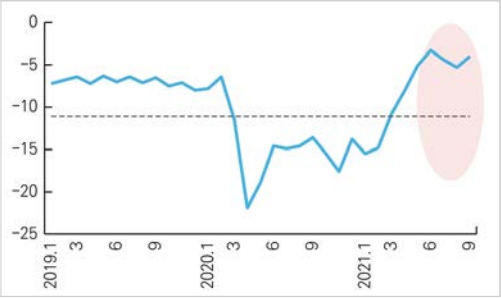
■ **2021년 들어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3]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신규 확진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상승세**

- 7~8월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제조업 공급망 차질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9월 들어 상승하여 -4.0을 기록

[그림 16]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7]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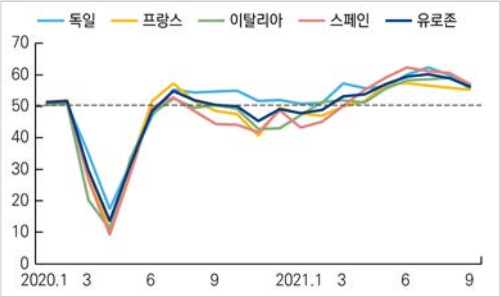
■ **9월 중 유로지역의 종합PMI는 빠른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기준선(50)을 큰 폭으로 상회**

- 유로지역 종합 PMI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2.8p 하락한 56.2를 기록
- 제조업 PMI는 일부 제조업체의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2.8p 하락한 58.6을 기록
- 서비스업 PMI는 9월 중 전월보다 2.6p 하락한 56.4를 기록하였으나, 6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그림 18]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9]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답변한 소비자의 비중 차이에 따라 산출됨.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등락폭이나 장기평균치와의 차이 등으로 판단

4. 일본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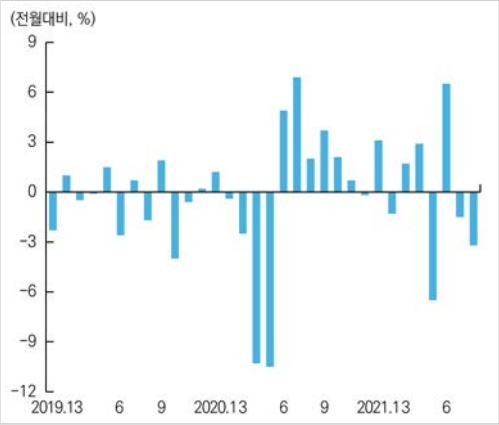
■ **8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무기·유기화학공업(1.3%), 석유·석탄 제품 공업(2.9%) 등에서 늘어났으나 전기·정보통신기계공업(-10.6%), 자동차공업(-15.2%)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3.2% 감소**

- 출하(-3.8%)와 재고(-0.3%)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며, 재고율은 3.4% 상승

■ **8월 일본의 수출은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크게 늘어나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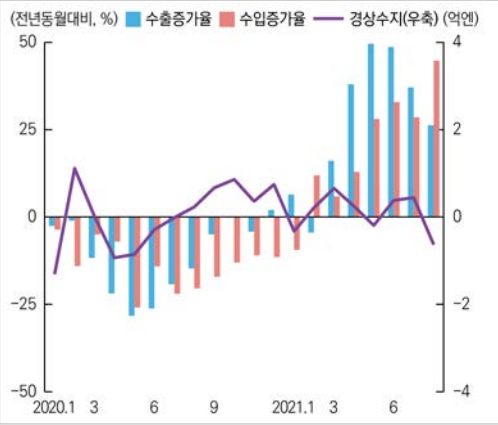
- 수출은 화학제품(28.5%), 일반기계(31.7%), 전기제품(17.1%)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6.2% 증가
- 수입은 원유제품(80.3%), 반도체 등 전자부품(65.6%), 자동차의 부분품(51.7%)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44.7% 증가
- 무역수지(억엔): ('21.6월)3,789→(7월)4,394→(8월)-6,372

[그림 20] 일본 광공업 생산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1]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재무성

■ **8월 일본 소매판매액은 일반상품(-6.4%), 직물·액세서리(-7.1%), 음식료품(-2.5%)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4.1% 감소**

- 8월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주거(9.6%), 가구·가사용품(7.8%) 등에서 늘어났으나 교통·통신(-4.2%), 식품(-4.8%) 등에서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3.2% 감소

■ **8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광열·수도(2.5%)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통신비 인하 효과로 교통·통신(-6.6%)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0.4% 하락**

- 근원물가(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며 전월(-0.6%)대비 하락폭 축소

[그림 22] 일본 가계실질소비지출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그림 23]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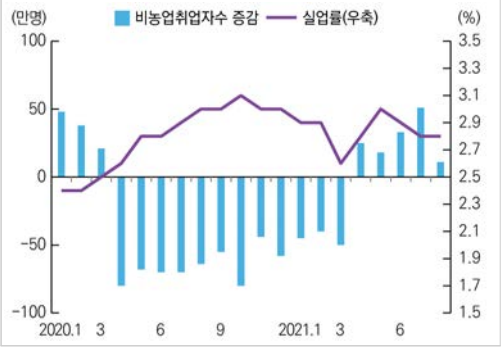
■ **8월 일본 비농업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20.8월: -64만명)하였으며, 실업률은 2.8%를 기록**

- 비농업취업자수는 금융·보험업(-6만명), 건설업(-12만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17만명),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업(33만명) 등에서 증가
-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1.6월) 33→(7월) 51→(8월) 11

■ **9월 일본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45.5)대비 소폭 상승한 47.7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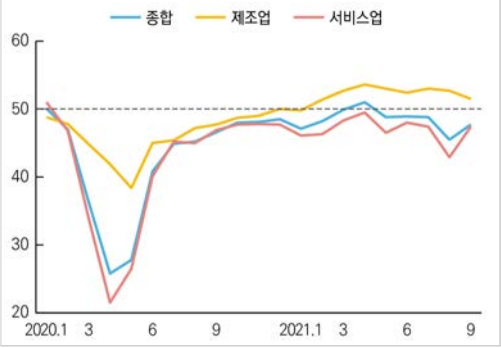
- 제조업PMI는 전월(52.7)대비 하락한 51.5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PMI는 전월(42.9)대비 상승한 47.4를 기록

[그림 24]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5]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 **2021년 10월 전세계 코로나19는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재확산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

- 10월 17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4,112만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약 41만명
  - 신규 확진자 수는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대륙별 백만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유럽 〉 북미 〉 오세아니아 〉 남미 〉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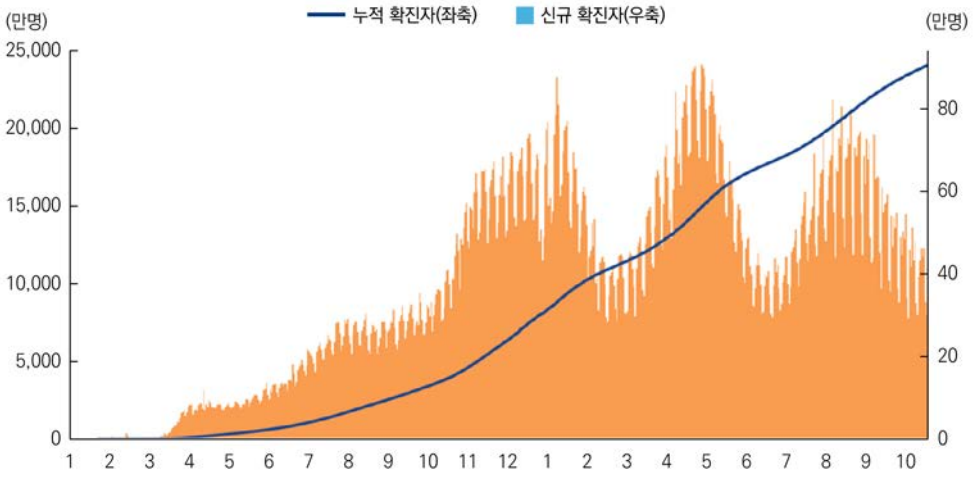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10.17.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241,119,208	62,138,139	54,178,461	78,015,605	38,117,860	8,438,357	229,200
(일일)	412,864	168,947	130,006	90,120	13,844	6,850	3,097
백만명당 확진	30,618	82,966	90,815	16,676	87,777	6,144	5,303
(일일)	52	226	218	19	32	5	72
사망	4,905,291	1,267,856	1,100,004	1,154,963	1,164,225	215,669	2,559
(일일)	6,410	2,391	2,257	1,201	338	165	58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10.17.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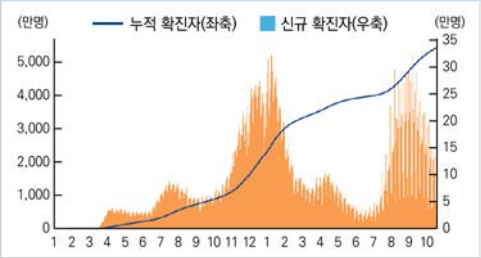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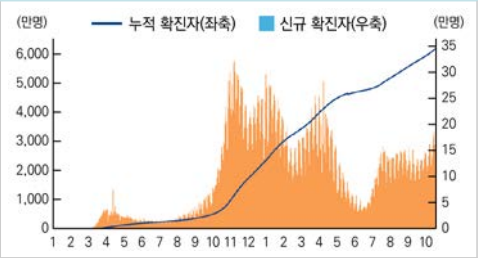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재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

- **(북미·유럽)**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의약품청(EMA)는 4일부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승인
- **(아시아)** 일본은 지난 8월 도쿄올림픽 직후 2만 5,000명을 웃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월 들어 2,000명 이하로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추진
- **(남미)** 7월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수 감소 추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델타변이에 이은 페루발 '람다 변이'와 콜롬비아발 '뮤 변이'의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아프리카)**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률과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백신 불평등 이슈가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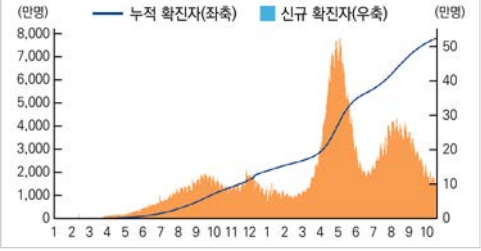
[북미 지역]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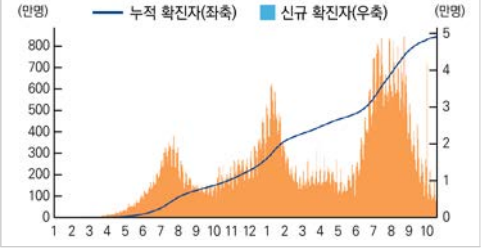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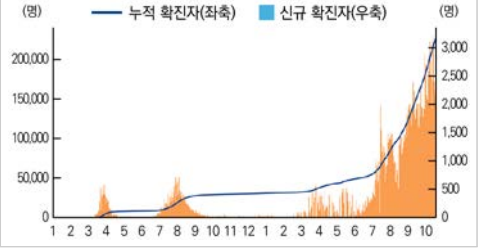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현황(10.17. 기준)]

순위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1	미국	45,050,910	116,553	135,323	726,196	1.6
2	인도	34,081,315	13,596	24,459	452,290	1.3
3	브라질	21,651,910	7,446	101,180	603,465	2.8
4	영국	8,537,650	48,965	125,172	139,042	1.6
5	러시아	7,903,963	33,434	54,169	220,323	2.8
6	터키	7,683,487	29,240	90,349	67,837	0.9
7	프랑스	7,190,716	1,150	106,428	118,232	1.6
8	이란	5,796,659	11,844	68,173	124,256	2.1
9	아르헨티나	5,273,463	912	115,631	115,704	2.2
10	스페인	4,988,878	4,492	106,725	87,030	1.7
11	콜롬비아	4,982,575	1,043	97,191	126,886	2.5
12	이탈리아	4,719,493	1,594	78,179	131,585	2.8
13	독일	4,388,581	6,562	52,307	94,720	2.2
14	인도네시아	4,235,384	626	15,326	142,999	3.4
15	멕시코	3,758,469	1,413	28,853	284,477	7.6
16	폴란드	2,941,126	1,536	77,814	76,115	2.6
17	남아공	2,916,803	210	48,579	88,619	3.0
18	우크라이나	2,767,743	10,415	63,675	64,797	2.3
19	필리핀	2,727,286	6,918	24,560	40,761	1.5
20	말레이시아	2,396,121	5,434	73,106	27,993	1.2
21	페루	2,190,396	387	65,661	199,882	9.1
22	네덜란드	2,090,522	3,378	121,732	18,684	0.9
23	이라크	2,037,012	1,559	49,467	22,785	1.1
24	타이	1,793,812	10,111	25,644	18,336	1.0
25	일본	1,715,745	230	13,612	18,129	1.1
26	체코	1,709,716	791	159,421	30,554	1.8
27	캐나다	1,693,364	5,481	44,483	28,616	1.7
28	칠레	1,672,065	1,315	87,031	37,620	2.2
29	방글라데시	1,565,827	339	9,416	27,778	1.8
30	루마니아	1,467,401	10,141	76,716	42,042	2.9
31	이스라엘	1,317,758	1,441	149,919	8,010	0.6
32	벨기에	1,289,033	9,164	110,815	25,780	2.0
33	파키스탄	1,265,650	603	5,620	28,300	2.2
34	스웨덴	1,161,933	669	114,362	14,956	1.3
35	포르투갈	1,080,097	291	106,226	18,100	1.7
36	세르비아	1,055,296	6,461	152,759	9,157	0.9
37	카자흐스탄	997,537	1,396	52,516	16,713	1.7
38	모로코	942,280	148	25,232	14,561	1.5
39	쿠바	936,809	1,844	82,775	8,079	0.9
40	베트남	867,221	3,168	8,834	21,269	2.5
76	대한민국	344,518	1,073	6,715	2,689	0.8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요 경제정책]

■ **산업통상자원부는 9.9.(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계 일등 조선 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1)]**

- 최근 세계선박 시장은 2016년을 저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및 스마트화로 조선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선박 발주량은 2016년 1,402만 CGT[2)]에서 2021년 1~7월 3,021만 CGT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비중이 증가 추세
- 한편 조선산업의 인력 미스매치, 초보단계의 차세대 조선기술,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신기술 투자 여건 미약 등이 당면과제로 제기됨
  - 연간 선박 수주실적의 편차가 심하고 수주에서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되면서 인력수급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조 및 생산공정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필요
  - 현재 국내기업의 경우 저탄소(LNG 등) 선박에 대해 경쟁우위에 있으나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등) 선박과 자율운항시스템의 경우 기술 수준이 초기 단계임
- 이에 정부는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 강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보급의 확대,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계의 수주경쟁력 강화 및 수요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인력수급 지원) 기존 숙련인력 고용유지 및 복귀지원과 신규 인력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조선업의 인력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할 계획
  -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 강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선소 야드 내 생산 및 물류의 공정과 기자재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조선소의 스마트 야드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
  -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확대) 저탄소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술을 국산화 및 고도화하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
  -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성능 실증센터 구축, Track Record의 확보, 자율운항선박 실증·보증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
  -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계의 수주경쟁력 강화)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계가 취약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등 친환경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품목 다양화 등을 추진
  -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계 수요기반 확대) 친환경 관공선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관공선 388척(전체 83%)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 기자재 수요를 확대

- (금융 수출 마테팅 물류 지원)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제도*와 제작금융**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고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거점을 증설하며 전시회·수출상담회·벤더등록·국제인증 등을 지원

* 선박의 경우 수주에서 제작,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건조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금융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환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하게 됨

** 선박의 경우 인도 시 건조대금의 60%가 지불되는 구조로 조선사에 제작금융(융자)이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수)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을 발표[3)]

-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계 기술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급변하는 기술전망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인재 수요를 도출
  - 조사 결과, 나노소재, 서비스형 플랫폼, 양자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순으로 기술인재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산업부는 미래사회의 기술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산학 간 접점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전망에 기반한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이에 따른 세부 과제는 ①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 촉진 ②대학의 환경변화 대응력과 혁신역량 강화 ③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임

■ 고용노동부는 9.30.(목)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4)]

- 신중년 고용률은 2020년 기준 66.2%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
- 이에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이에 따른 세부 과제는 ①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확대 ②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술 전문가의 기술이전 촉진 ③중장년 퇴직인력의 체계적 창업지원임

■ 정부는 10.8.(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발표[5)]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로 기존의 26.3% 보다 큰 폭의 상향을 제시
  - 최근 입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부대의견으로 감축목표를 40% 이상으로 제안
-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11월 중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후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 예정

-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모든 부문의 감축목표를 상향하며 특히 전환부문과 수송부문의 감축목표가 크게 상향됨
  - 전환(발전)부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2018년 대비 44.4%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수송부문은 무공해차 보급을 통해 2018년 대비 37.8% 감축
  - 건물부문은 에너지효율향상 및 청정에너지 확대로 32.8% 감축
  - 산업부문은 에너지효율화와 연료 및 원료 전환을 통해 14.5% 감축
  - 국외감축분(16.2→35.1백만톤)과 흡수원(22.1→26.7백만톤) 활용분을 상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단위: 백만톤CO2eq)

구분	부문	기준연도 (2018년)	기존 NDC (2018년 比 감축률)	NDC 상향안 (2018년 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26.3%)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3 (△25.9%)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5.2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감축	-	-16.2	-35.1

주: 기준연도(2018)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 · 제거량)
자료: 탄소중립위원회 보도자료, 2021.10.8.

1)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등 조선 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9. 9.
2) 표준화물선환산톤수(Compansated Gross Tonage)는 선박을 건조할 때 실질적인 작업량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선박의 가공공수, 설비능력 및 선박의 가격, 작업공사량, 부가가치 등 상대적인 지수표시인 CGT계수와 GT를 곱하여 구함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산업계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9.29.
4) 고용노동부,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9.30.
5) 탄소중립위원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021.10.8.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Ⅰ.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 90

Ⅱ. 한국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 97

Ⅲ.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 104

Ⅳ.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 111

Ⅰ.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6788-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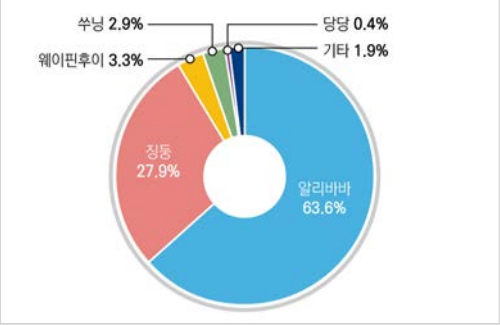
1. 중국의 산업규제 현황

중국정부는 2020년 11월 빅테크 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시작으로 교육, 게임, 부동산 산업 등으로 규제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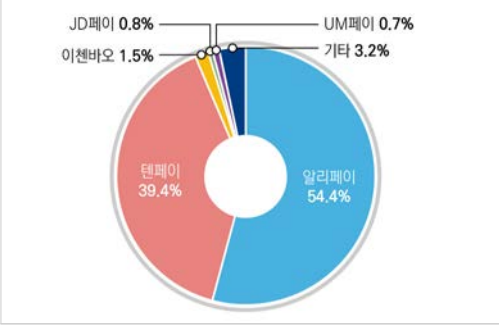
■ **(플랫폼 산업) 2020년 하반기부터 불공정거래를 본격적으로 규제**

- 중국의 플랫폼 산업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등 독과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 이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1]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소환·면담[2]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
- 6월 30일 공유차 서비스인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후 중국정부는 애플리케이션을 중국 내 모든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국가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이유로 미국에 상장한 플랫폼 기업 3곳[3]을 조사

[그림 1]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점유율



[그림 2] 중국 지급결제 플랫폼 시장점유율



주: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지급결제 시장점유율은 2019년 기준
자료: statista

※ 본 보고서는 중국 회의결과 자료인 공보(公報) 및 국가통계국,OECD, 북경대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1) 2020년 11월 「인터넷 플랫폼 경제 반독점법 지침」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2021년 2월 7일 최종안을 발표. 2021년 3월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 방법」과「소비자 정보 관리 합작사 설립방안 검토」방안 발표
2) 2020년 11월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투안, 바이두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소환하여 면담 시행. 2021년 5월에는 디디추싱, 메이투안 등 10개 운수분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운전자의 이익 침해와 운송데이터 부당 독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
3) 디디추싱, 만방(滿幇)그룹, BOSS즈핀(直聘)

■ **(교육 산업) 중국은 학업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쌍감(双减)정책'을 추진하여 사교육 산업을 규제**

- 사교육 기관들의 신규 영업허가 금지, 기존 사교육 기관의 비영리기관 전환, 사교육업체의 IPO(기업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과 광고 금지, 주말·공휴일·방학 중 학교 교과와 관련된 사교육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4]
- 이어 사교육 종사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리제도[5]를 도입하고 사상교육도 강화('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확실한 자'를 채용할 것을 강조)[6]

[그림 3] 중국의 가계지출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비중(%)

[그림 4] 중국 사교육 참여율(%)

주: 2019년 기준
자료: 북경대 중국교육재정과학연구소(中国教育财政科学研究所)

■ **(게임 산업) 미성년자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규제를 강화**

-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게임 업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7]

■ **(부동산 산업) 주택가격의 상승세 지속,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문제 등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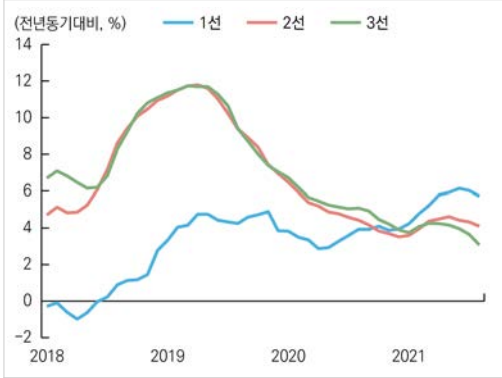
- 중국정부는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지방정부 주도 하에 금융 및 조세 정책을 추진
- 특히 2020년 8월 3대 레드라인을 지정하여 부채비율 70% 이상, 순부채비율 100% 초과, 현금성자산 대비 단기부채 비율 1배 초과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여신 확대를 제한

4) 7월 24일「의무교육 단계의 학업부담 및 방과후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발표
5) 공산당 권위 훼손, 당의 노선에 반하는 언행, 국익 훼손, 심각한 사회공익 훼손, 심각한 미풍양속 위배, 학생 차별·모독·학대·상해 등 11개 행위를 위반한 자
6) 9월 14일「학교 밖 교습기관 종사인원 관리 방법」
7) 8월 30일「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방지 관련 통지」

[그림 5] 중국 주요도시 PIR(Price to Income Ratio) (배)

주: 2019년 기준
자료: 상해 E-House 부동산 연구소

[그림 6] 중국 70개도시[8]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참고] 중국의 부동산 규제와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

■ **최근 헝다그룹 파산위기는 중국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유동성 경색에서 비롯**

-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산운용, 헬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급증
  - 2021년 상반기 총부채는 1.97조 위안 수준으로 장단기 차입금 규모는 5,720억 위안이나 현금성 자산은 870억 위안에 불과
- 3대 레드라인에 모두 해당되어 자금조달이 제한된 헝다그룹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
  - 3대 레드라인 기준(부채비율 70% 이상, 순부채비율 100% 초과, 현금성자산 대비 단기부채 비율 1배 초과)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차입이 제한
- 9월 23일 위안화 채권 2.32억 위안에 대한 이자지급이 완료되었으나, 달러표시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를 미지급한 상황으로 디폴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음

8) 중국의 도시는 거주인구, 경제발전, 소비시장, 부동산시장 등에 따라 1~4선 도시로 구분되며,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선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 2선도시는 성(省)의 수도, 자치구 정부소재 도시 등 31개 도시로 구분

2. 중국의 산업규제 강화 배경

최근의 산업규제 강화는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론'으로 중국정부가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 **공동부유(共同富裕)[9]는 나눔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과거 성장 주도 방식에서 나아가 부의 분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

■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10]달성 이후 중국정부의 핵심의제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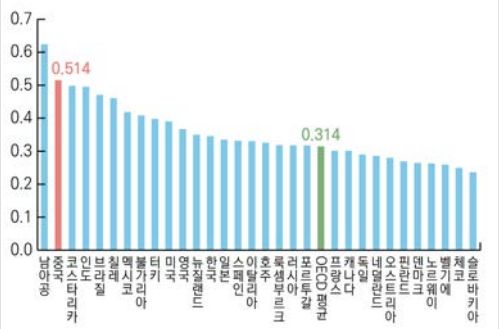
- 시진핑 주석은 2021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이 절대 빈곤을 벗어나 전면적 샤오캉 사회가 실현되었다고 선언
- 이어 8월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언급하며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년의 1차 목표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 것을 토대로 2049년(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2차 목표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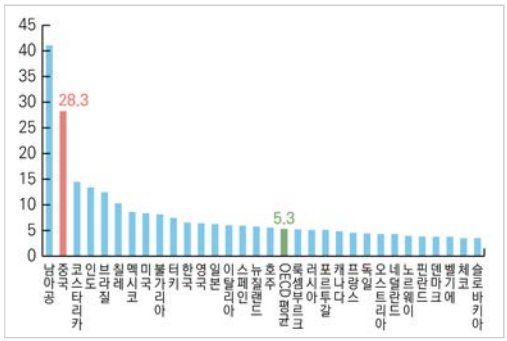
■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소비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여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확대하고자 함**

- OECD의 소득불평등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남아공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국은 부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

[그림 7] 주요국의 지니계수 비교



[그림 8] 주요국의 소득 5분위배율 비교



주: OECD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OECD 회원국이 아니지만 통계에 포함시켜 발표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9)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를"고소득 계층에 대한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언급

10) 2012년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우며, 이를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중국 명목 GDP: 2010년 48조 7,940억 위안 →2020년 101조 6,986억 위안)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1~3차 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1차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분배, 2차는 정책에 따른 분배, 3차 기업 및 민간의 사회환원에 의한 분배로 구성**

■ **1차 분배의 소득격차 축소와 가계소득 향상 차원에서 가계의 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부동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 **2차 분배 중 독점기업의 부의 분배 차원에서 독점적 시장지배구조를 지닌 산업인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

[표 1] 중국의 공동부유 실행방안

	내용	실행방안
1차분배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분배	• 소득격차 축소 • 가계소득 향상 • 기업 이익의 가계로의 분배
2차분배	정책에 따른 분배	• 세제개편, 사회보험, 이전지출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 독점과 부정경쟁 및 불법으로 얻은 수입의 재분배
3차분배[11]	사회적 분배	• 자선이나 기부 확대 • 기업가 및 고소득층의 사회환원

자료: 2021년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시진핑 연설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중국은 이와 같은 규제강화를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하여 분배를 강화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

■ **부동산과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통해 출산율[12]을 제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 중국정부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자산 및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판단
- 2016년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였으며, 올해 8월 세자녀 정책을 법제화한데 이어 사교육 및 주거비용을 낮춰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자 함

11)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공동부유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는 100억 위안(약 1조8,000억원)의 농업과학기술전담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 알리바바는 1,000억위안(약 18조원)을 공동부유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힘

12)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총 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시안 교통대학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출산률이 지속될 경우 45년 뒤에는 중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인 7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

■ **또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진입장벽과 독점적 시장지배구조를 제거하여 독과점 기업의 부를 재분배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함**

-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
  -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중국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불평등 완화를 통해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

■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2022년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13]되는 시기**

■ **플랫폼 등 IT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잠재우기 위한 의도**

■ **사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통제와 사상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내포**

3. 산업규제 강화의 영향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쌍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중국은 과거 수출과 외국자본 유치 중심의 성장에서 안정적인 내수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쌍순환 경제로의 구조전환을 도모**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쌍순환'을, 2035년 장기 발전 계획 목표로 '공동부유'를 제시

■ **내수중심의 성장인 쌍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확대가 필수적이며 공동부유론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함**

-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독점적 시장지배구조를 제거하여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확대하여 중장기 내수성장 동력을 확보

13) 2018년 3월 양회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총서기를 선출할 예정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반(反)시장적 조치들은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부동산 산업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는 관련 산업의 위축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고정자산투자가 둔화되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경우 중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14)]

■ **건설업과 교육업은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실업률 상승 등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업, 교육업이 중국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0%, 9.5%

■ **정부의 규제리스크와 정부 정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대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음**

- 규제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의 투자 및 혁신활동이 위축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
- 사교육 기관들을 비영리기관으로 전환하고 게임시간을 규제하는 등의 정책은 중국정부가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나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음

14) 중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7.7%(2018년 기준), 지방정부 조세수입 중 부동산 관련 조세수입 비중은 31.0(2019년 기준),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 중 부동산투자 비중은 22.1%(2017년 기준)(자료: 중국광파은행, 중국통계국, CEIC)

Ⅱ. 한국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진 익** 과장 (6788-3780)

1. 기업의 ESG성과와 국제경쟁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ESG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

■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성과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무적 성과 이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이 높은 비재무적 성과를 통칭함**

- ESG경영을 통해 추구하는 주요 사회적 가치를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로 분류할 수 있음

■ **국제증권위원회(IOSC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ESG성과 평가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지침을 마련 중**

- 투자자, 펀드매니저, 발행기업, 등급평가회사, 데이터공급자 등이 사용하는 ESG정보의 완전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기업의 ESG성과가 기업가치와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증권투자, 대출, 무역금융, 신용평가 등에서 ESG점수·등급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ESG성과가 기업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금 공급 시 해당 기업의 재무가치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ESG점수·등급을 함께 고려

■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참여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상대방의 ESG성과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ESG성과와 국제경쟁력 사이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assessment), 감사(audit) 등을 통해 공급업체 관련 ESG위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1)]

※ Morningstar 데이터, Sustainalytics ESG 평가 방법론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1) PRI. 2017. "Managing ESG Risk in the Supply Chains of Private Companies and Assets."

주요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경쟁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투자자·기업들이 ESG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ESG성과가 낮은 거래상대방을 기피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업 ESG성과 관련 표준(standards)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글로벌 공급망 내 거래상대방에 대한 ESG성과 개선 요구가 보다 커질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의 ESG성과가 국제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요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 수준을 비교**

2.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

통상적인 ESG점수·등급 결정방식은 ESG이슈(issue) 선정, 관련 지표 선택, 지표별 평가, 중요도 적용, 등급 산정 등의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표별로 정량·정성적 성과를 측정하고, 이슈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업 단위 ESG점수를 추정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ESG등급으로 전환**

- 중요도(materiality)는 특정 ESG이슈가 기업가치, 투자위험, 수익률 등에 미치는 영향, 즉 사회적 가치와 기업 경영성과의 관련성 정도를 고려함

■ **평가회사별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슈 선정, 지표 선택, 중요도 설정, 등급 설계 등을 수행하는 만큼, 평가결과인 ESG점수·등급에서도 편차가 존재[2)]**

- 글로벌 평가회사의 예는 Morningstar (Sustainalytics), MSCI (KLD, IVA), S&P (RobecoSAM), Moody's (Vigeo Eiris), Refinitiv (Asset4) 등임

Sustainalytics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를 설계함

■ **위험노출수준 대비 관리수준의 비율을 백분율로 전환하여 비교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기업들 사이의 상대적 역량을 비교**

-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 = 100 × [(관리수준) / (위험노출수준)]

2) Berg, Koelbel, and Rigobon,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MIT Sloan School Working Paper 5822-19*, 2020.

- 동 지수는 전체 위험노출수준 중 관리수준의 비율로서, 해당 값이 높으면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이 우수하다고 해석 가능

■ **Sustainalytics의 ESG점수·등급은 주요국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서, 이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업의 ESG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함**

-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편의(bias)를 분석과정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BOX] Sustainalytics의 ESG등급 방법론 개요

■ **Sustainalytics는 ESG이슈의 중요도에 관한 학계연구를 참조하여 중요도가 높은 이슈들을 중심으로 위험을 추정한 후 ESG점수·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

- 기업 재무성과와의 연관성, 즉 중요도(materiality)가 높은 26개 이슈에 집중[3)]
- 위험노출수준(risk exposure)과 관리수준(managed risk)을 구분하여 평가
  - 위험노출수준은 전반적인 위험, 중요도가 높은 이슈 관련 위험, 기업별 고유 위험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ESG위험 노출수준을 측정함
  - 관리수준은 기업의 위험노출에 대한 관리역량(capacity)을 나타냄
- 평가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업들을 비교집단(peer group)으로 구분하고 동일 비교집단 내 기업들의 상대적 ESG성과를 평가함

3. 한국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경제규모 상위 10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위험 관리역량 수준을 비교함

■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상위 10개국의 기업들 중에서,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Sustainalytics가 ESG점수·등급을 제시한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 분석대상 기업 수를 보면, 전체 7,060개 중 미국(2,899개), 일본(1,232개), 중국(1,160개), 한국(430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가 큰 이슈에서 ESG성과가 좋은 기업이 보다 높은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Khan, Serafeim, and Yoon, "Corporate Sustainability: First Evidence on Materiality,"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15-073, 2015.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ESG위험 관리역량 측면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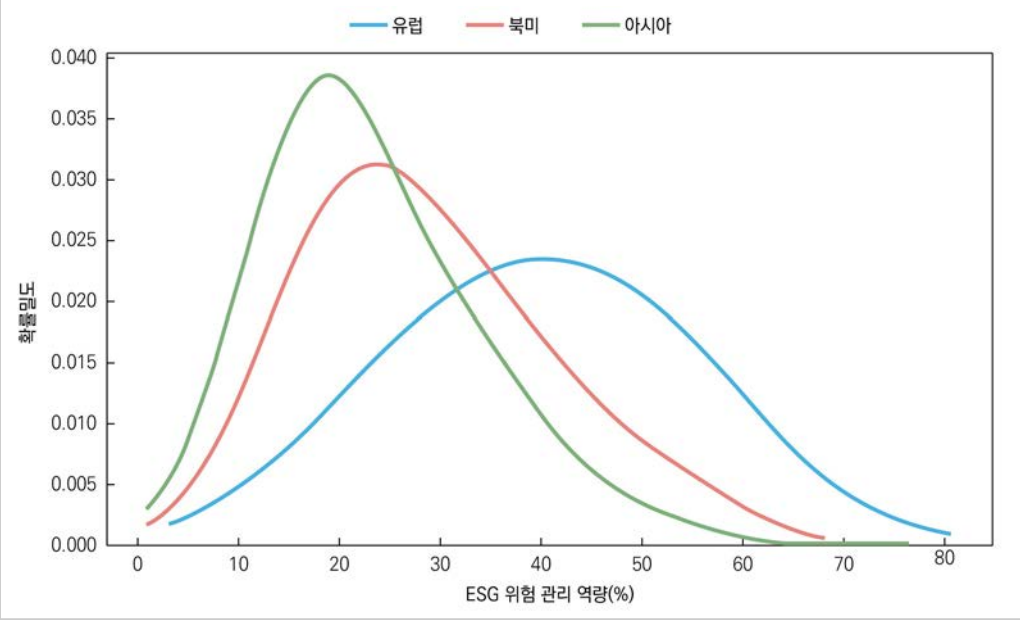
■ **전체 분석대상 기업(7,060개)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확률밀도함수를 추정**

- 그룹별 기업 수는 아시아 3,196개, 북미 3,133개, 그리고 유럽 731개임
- 특정한 확률밀도함수를 선험적으로 가정하는 대신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평활화하는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기법을 사용

■ **아시아 기업들과 북미 기업들의 경우, 그 평균이 유럽 기업들의 평균에 비해 낮고 확률밀도함수의 오른쪽 꼬리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이 대체적으로 낮은 가운데, 일부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높은 ESG위험 관리역량을 축적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유럽 기업들의 확률밀도함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형태로 나타남

[그림 1] ESG위험 관리역량 확률밀도함수 (지역별)



주: 2021년은 9월 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Direct에서 추출한 Sustainalytic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 수준을 다른 주요국 기업들의 수준과 비교하고, 해당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횡단면(cross section) 회귀분석을 수행

■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y)를 종속변수로, 상수항과 한국을 제외한 9개 국가별 더미변수(D_j)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회귀방정식을 추정**

$$y = \alpha + \sum_{j=1}^{9} \beta_j D_j \qquad \text{식(1)}$$

- 상수항의 추정값($\hat{\alpha}$)은 한국 기업들의 평균을, 국가 더미변수 계수의 추정값($\hat{\beta}_j$)은 한국의 평균과 비교대상 국가(j)의 평균 사이 차이를 보여줌
- 국가별 더미변수의 계수가 0과 같다는 귀무가설($H_0 : \beta_j = 0$)에 대한 p-값이 작을수록 평균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한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의 평균값이 주요국 평균값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평균은 21.18%로서 경제규모 상위 10개국 중 9위에 해당하며, 프랑스(42.53%)가 가장 높고 중국(20.43%)이 가장 낮으며 미국은 28.25%임**

-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한국과 상대우위에 있는 나머지 8개국과의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기업 ESG위험 관리역량 국가별 평균 (경제규모 상위 10개국)

(단위: 개, %, %p)

국가	기업 수	평균	차이[1]	p-값[2]
프랑스	159	42.53	21.35	0.00
이탈리아	100	42.22	21.04	0.00
독일	180	40.38	19.19	0.00
영국	292	38.03	16.85	0.00
캐나다	234	35.66	14.48	0.00
인도	374	29.56	8.38	0.00
미국	2,899	28.25	7.06	0.00
일본	1,232	24.59	3.41	0.00
한국	430	21.18	0.00	0.00
중국	1,160	20.43	-0.75	0.25

주: 2021년은 9월 말 기준

1) 한국의 평균과 비교대상 국가(j)의 평균의 차이를 의미하며, 식(1)에서 $\hat{\beta}_j$에 해당

2) 식(1)에서 국가별 더미변수의 계수가 0과 같다는 귀무가설($H_0 : \beta_j = 0$)에 대한 p-값으로, 해당 값이 작을수록 비교대상 평균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자료: Morningstar Direct에서 추출한 Sustainalytics 자료를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 경쟁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ESG경영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ESG위험 관리역량을 충분하게 축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ESG경영 측면에서 후발주자인 동북아시아 3개국(일본, 한국, 중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가 60%를 넘는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음**

- 해당국 기업의 최고 수준은, 일본(58.9%), 한국(58.4%), 중국(57.3%)임

■ **유럽 기업들이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북미 2개국(캐나다, 미국)과 인도가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임

4. 시사점

한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이 주요국 경쟁기업들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격차가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점수·등급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국제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기업들도 명성(reputation)관리, 공익사업, 자선활동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ESG위험 관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

ESG평가 관련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ESG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e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설정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는 정성분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평가기관별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 한계가 존재

한국에서 ESG생태계 형성과 민간자율의 시장규율 확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와 시장인프라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ESG정보 생산, ESG위험 측정, ESG성과 평가, ESG점수·등급 산정 등과 관련한 시장규율이 조기에 형성되면 한국 기업들의 ESG경영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후환경,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인하여 제기될 이슈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에 대해 ESG경영을 통한 대응을 유인할 수 있음

III.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유근식** 경제분석관(6788-4753)

1.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용상황 추이

청년층(15~29세)의 고용상황은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개선되어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으며 2021년 1월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청년 취업자 수는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1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4.5만 명 감소한 365.3만 명으로 하락
- 이후 8월까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3차 유행을 거쳐 2021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31.4만 명 감소한 364.2만 명으로 축소

■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양상**

- 3차 유행이 끝난 2021년 2월부터 청년 취업자 수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7월에 398.5만 명으로 확대
- 7월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발생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도 2021년 2월부터 크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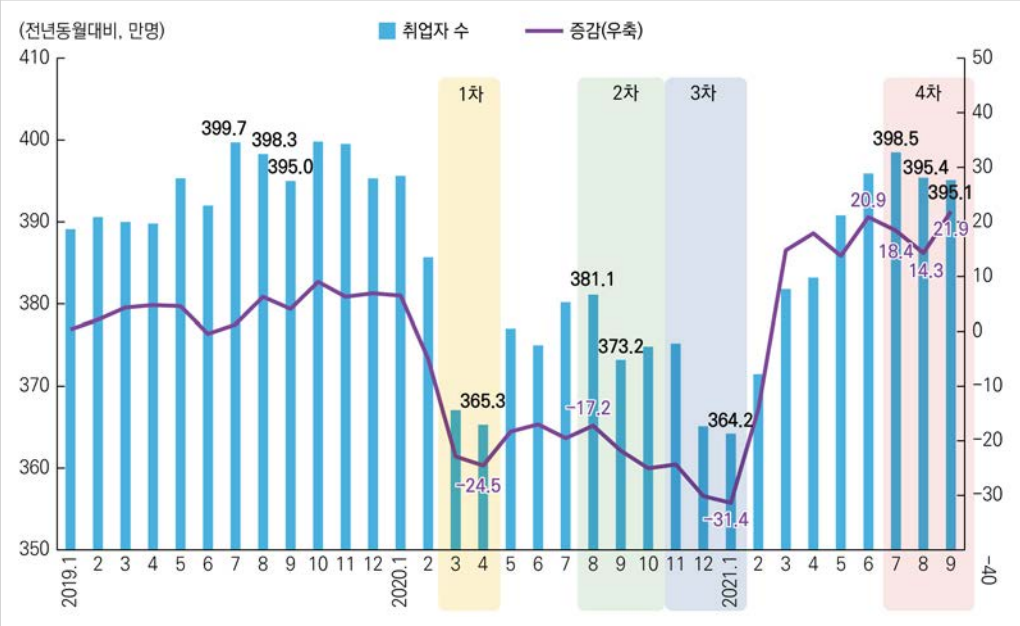
- 청년 고용률은 2021년 1월 41.1% 이후 반등하여 7월 45.5%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청년 실업률은 2021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월에 5.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실업률이 발표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1)]
-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2)]도 2021년 1월 27.2%에서 9월 20.9%로 빠르게 개선

※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및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 고용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

1)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인 반면, 1999년 5월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실업률에 대한 정보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률과 비교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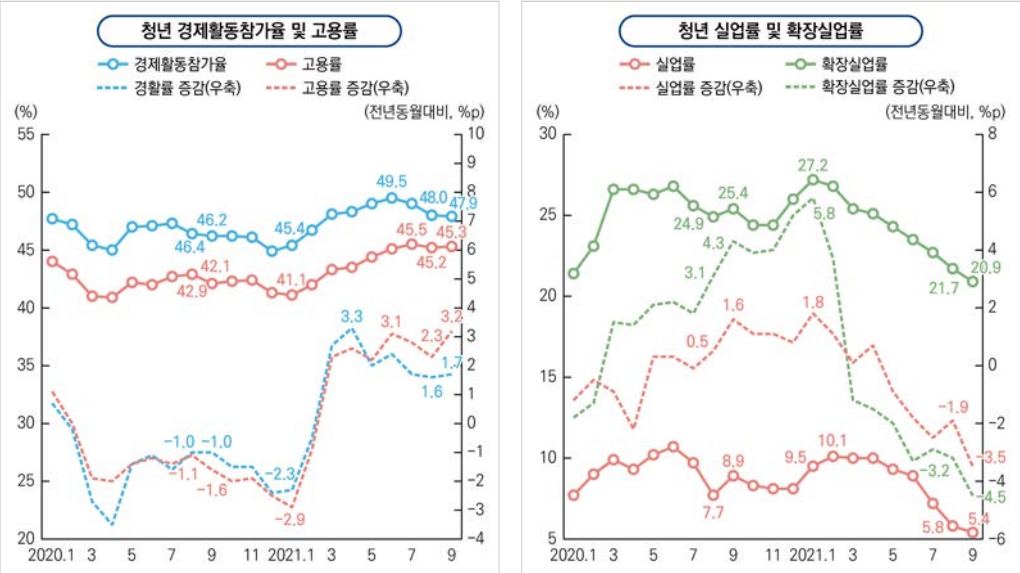
2)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제시

[그림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주: 그림에 표시된 음영은 코로나19 유행시기를 나타내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1~4차 유행을 구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청년 주요 고용지표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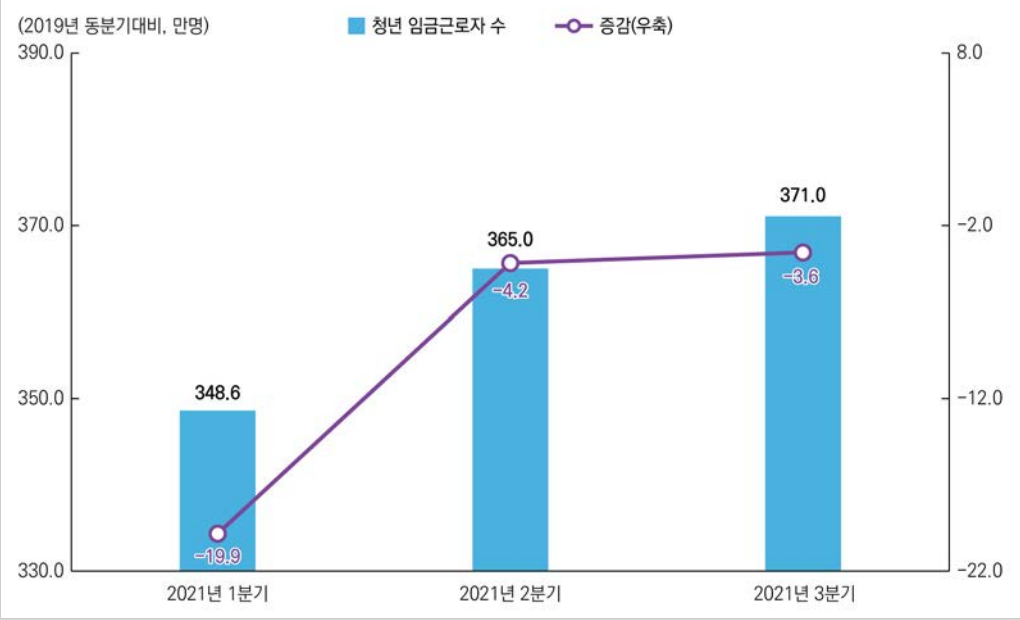
청년층의 최근 고용상황은 양적인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는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전과 후 청년 일자리의 질적인 변화를 파악할 필요

■ **청년 일자리의 질적 상황을 계약기간, 근로시간, 직종, 일자리만족도 등을 통해 파악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

■ **분석의 대상을 청년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여 결과를 제시**

- 청년 임금근로자 수는 2021년 3분기 기준 371.0만 명으로 전체 청년 취업자(396.3만 명)의 약 93.6%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2021년 1분기 청년 임금근로자 수는 19.9만 명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에 4.2만 명, 3분기에 3.6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차 축소

[그림 3] 2021년 분기별 청년 임금근로자 수 추이



주: 1) 그림에 제시된 증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분기대비 청년 임금근로자 수 증감을 나타냄
2) 1분기는 2021년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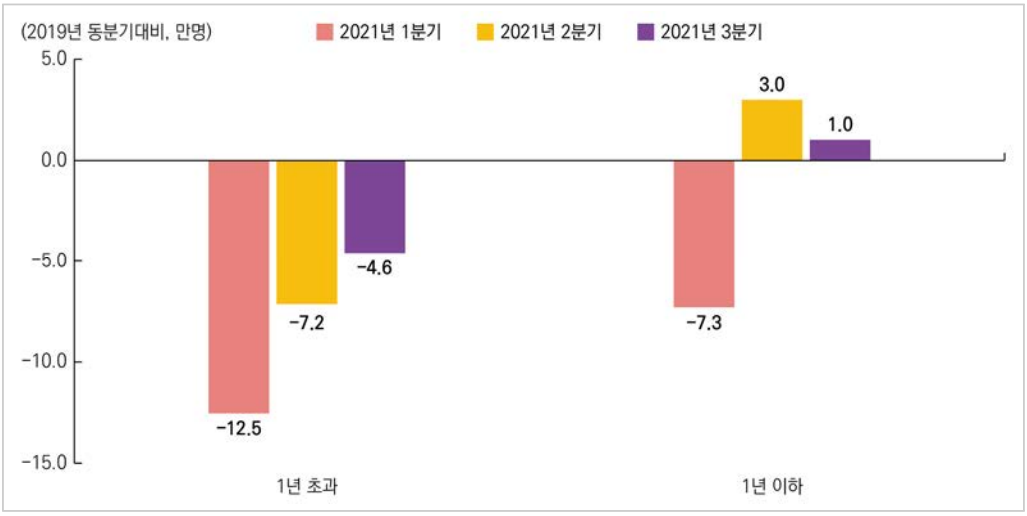
2. 코로나19 이후 청년일자리의 질적 변화[3)]

(계약기간) 2021년 3분기 청년층의 계약기간별 취업자(임금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1년 이하 계약은 증가한 반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3분기의 계약기간 별 청년 취업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년 이하의 계약이 1.0만 명 증가한 반면, 1년 초과 계약은 4.6만 명 감소**

-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일자리는 2021년 2분기에 2019년 동분기대비 증가 전환되었고 3분기에는 1.0만 명 증가를 기록
-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일자리는 감소세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3분기에도 2019년 대비 4.6만 명 감소

[그림 4] 계약기간별 청년 취업자 수 증감



주: 1) 각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분기대비 청년 임금근로자 수 증감을 나타냄
2) 1분기는 2021년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시간) 2021년 3분기에도 청년층 단시간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의 2019년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청년 취업자는 감소

3) 청년 일자리의 질적 변화는 '청년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자리 질 분석에서 '청년 취업자'는 '청년 임금근로자'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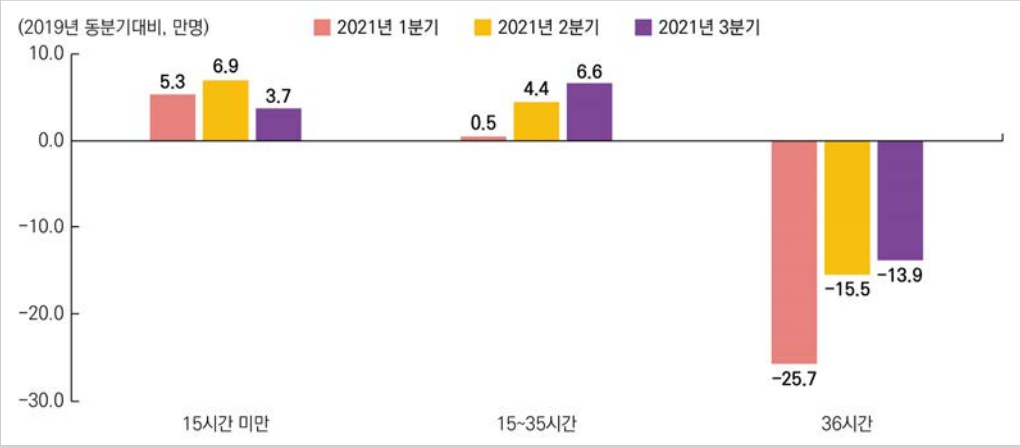
■ **청년 취업자 중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2021년 동안 2019년 대비 증가세가 지속**

-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3분기에 10.3만 명 증가를 기록하였고, 그 중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3.7만 명)

■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청년 취업자의 수는 2019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에도 13.9만 명 감소를 기록**

-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감소세는 2021년 2분기부터 축소되고 있지만, 3분기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그림 5] 근로시간별 청년 취업자 수 증감



주: 1) 각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분기대비 청년 임금근로자 수 증감을 나타냄
2) 1분기는 2021년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직종별 청년 취업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이 가장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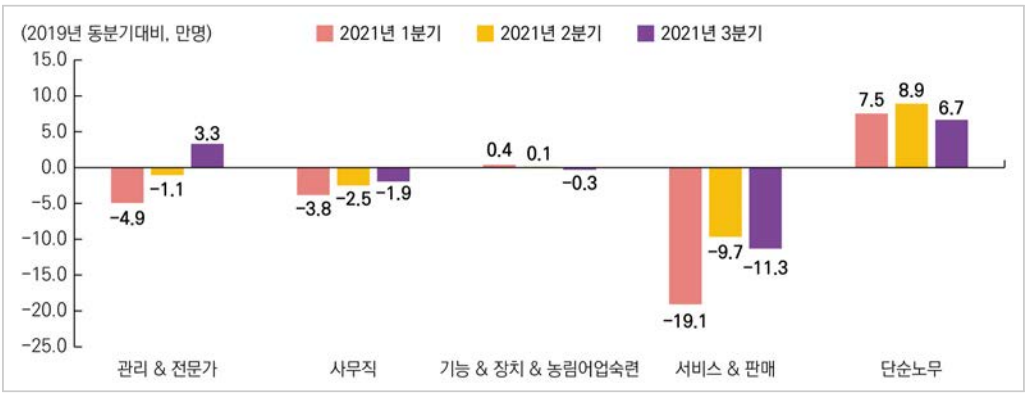
■ **2021년 청년 고용상황 개선에 따라, 서비스 및 판매직의 2019년 동분기대비 감소세가 축소되었으며 관리직 및 전문가의 수가 증가 전환됨**

- 서비스 및 판매직은 1분기에 2019년 대비 19.1만 명 감소하였으나 2분기부터 감소폭이 축소
- 관리직 및 전문가는 2021년 3분기에 2019년 대비 증가 전환되어 3.3만 명 증가를 기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순노무직의 증가임**

- 2021년 3분기 단순노무직은 2019년 동분기대비 6.7만 명 증가하여 다른 직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그림 6] 직종별 청년 취업자 수 증감



주: 1. 각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분기대비 청년 임금근로자 수 증감을 나타냄
2. 1분기는 2021년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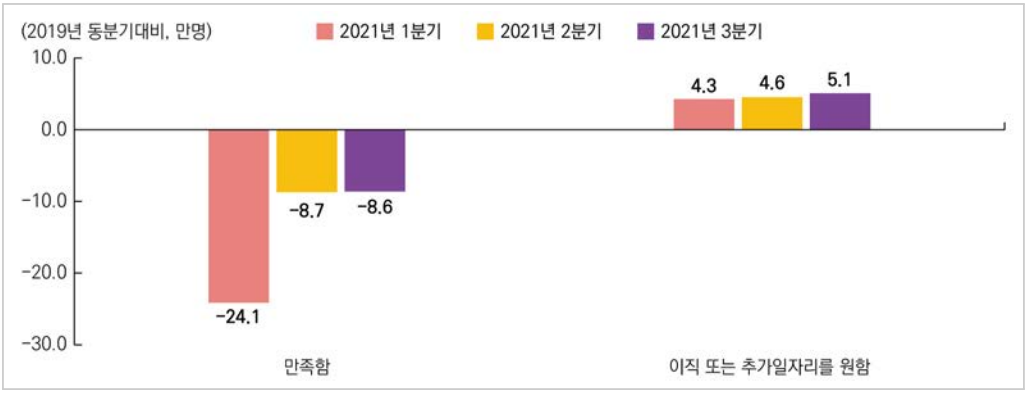
(일자리만족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이직 또는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청년 취업자는 감소

■ **2021년 3분기 기준, 이직 또는 추가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취업자는 2019년 동분기 대비 5.1만 명 증가**

- 2019년 3분기에 이직 또는 추가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취업자의 수가 10.7만 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년 사이 47.3% 증가

■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여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취업자는 2021년 1분기 이후 빠르게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3분기에도 2019년 대비 8.6만 명 감소**

[그림 7] 만족도별 청년 취업자 수 증감



주: 1) 각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분기대비 청년 임금근로자 수 증감을 나타냄
2) 1분기는 2021년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요약 및 시사점

주요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양적인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양적 고용지표는 2021년 1월 이후 크게 개선되었고 최근 양호한 수치를 기록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직종 등 질적 지표를 살펴본 결과 청년 일자리의 질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상황이 양호한 2021년 3분기에도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취업자 수는 2019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1년 이하의 계약은 증가
- 2019년 대비 청년 취업자 중 단시간근로자는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감소
-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청년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추가일자리나 이직을 원하는 취업자는 증가
- 또한,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단순 임금근로자가 다른 직종 대비 크게 증가

청년 고용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

- 고용상황이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질적인 측면의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살펴 현재의 고용상황을 평가할 필요

Ⅳ.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이승만** 경제분석관(6788-4678)

1.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동향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 중 하나로 'Fit for 55'[1]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제시(2021.07.14.)[2]

■ **EU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였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음(2019.12.11.)**

- 유럽 그린딜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을 침체된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기회로 보고,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간 50억~140억 유로의 세수 역시 에너지전환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포함

[그림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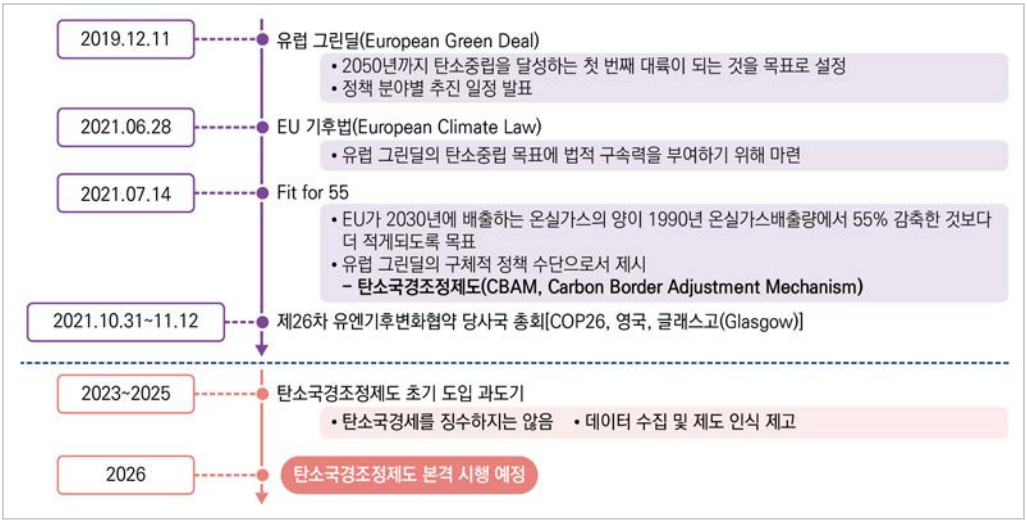


그림: EU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안,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NETIS),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 European Commission(2021.07.14.),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COM(2021) 550 final.*

2) European Commission(2021.07.1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 564 final.*

■ **'Fit for 55'는 EU가 203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량의 5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제시**

- ①탄소 가격결정, ②감축목표 설정, ③규정 강화, ④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 등에 관한 정책 포함

■ **EU는 역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담 공유, EU의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2030년 탄소누출을 2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2025년까지 3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과도기에는 탄소국경세를 징수하지는 않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
-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매 분기별로 이전 분기의 수입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 및 이미 EU 역외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보고함

미국 역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의 도입을 추진 중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21 통상정책의제 및 2020 연례보고서」[3]에서 기후변화 및 글로벌 무역에 내재된 온실가스배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s)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2020.03.01.)**

■ **미국 민주당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철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국경탄소조정 법안 발의(2021.07.19.)[4]**

- 입법안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경탄소조정을 통해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3)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1.03.01.),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4) GovTrack.us(2021), *S. 2378 — 117th Congress: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크리스토퍼 쿤스(Christopher Coons)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Scott Peters) 하원의원이 발의].

2.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은 역내 수입업자에 대한 CBAM 인증서 매입 의무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매입 비용은 궁극적으로 수출국 제조기업에게 전가되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EU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5] 등 5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역내 수입업자들에게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 매입 의무 부과**
- **미국의 경우도 EU와 유사한 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

[Box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방법

- **탄소배출량(Q)과 EU-한국 탄소배출권 가격차이(⊿P)의 곱으로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 탄소배출량(Q)=수출액(EX)×탄소집약도(tCO_2/원)[6]
  - CBAM 인증서 가격은 EU-ETS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시행 시점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의해 결정됨
  -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 매입 후, 한국 ETS의 탄소가격을 제시하여 가격차이 만큼 환급받으므로, EU-ETS와 한국 ETS 탄소가격 차이를 탄소국경세 부담으로 추정

$$\begin{aligned}\text{탄소국경세 부담} &= \text{탄소배출량}(Q) \times \text{탄소배출권 가격차이}(\Delta P) \\ &= [\text{수출액}(EX) \times \text{탄소집약도}(tCO_2/\text{원})] \times (EU-ETS\ \text{탄소배출권가격} - \text{한국 탄소배출권 가격})\end{aligned}$$

EU-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및 WCI(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가격과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 가격 차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EU 및 미국 수입업자의 CBAM 인증서 매입 예상 비용 부담을 추정[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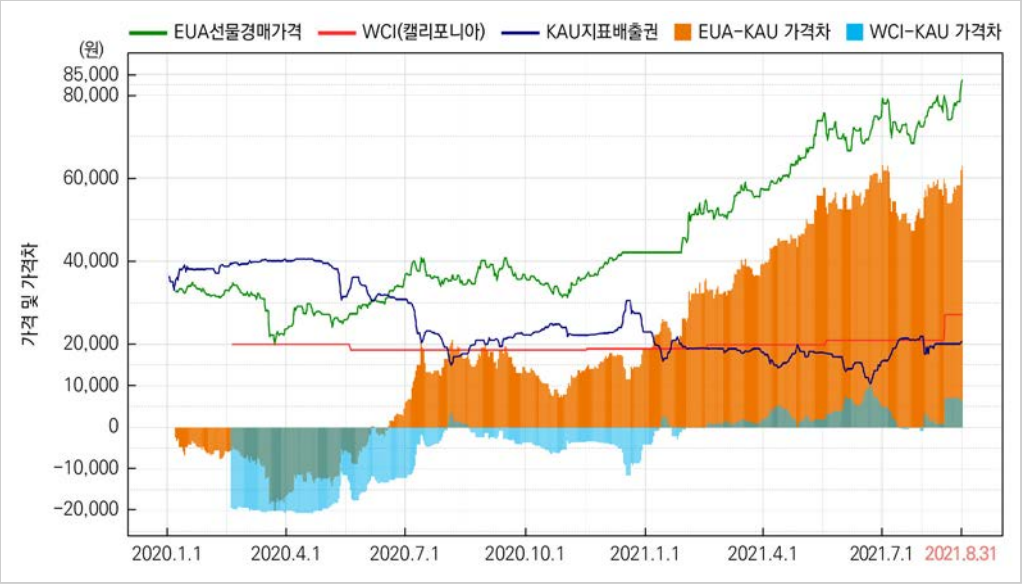
---

5) 전기에너지는 EU 역외 국가인 영국 등의 국가에서 EU 역내로 수입하는 전력을 의미하므로, 한국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6) 탄소집약도에는 단위 에너지소비량당 탄소배출량과 GDP 등 단위 생산액당 탄소배출량 등이 있으며, 여기서는 단위 생산액당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 사용.
7) 성지영(2021),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Industry Watch」,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EU와 한국 및 미국과 한국의 배출권 가격차이를 기초로 산정.

■ 2021년 8월 31일 기준, EU-ETS 탄소배출권 가격은 83,727원(60.7유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KAU지표배출권 가격은 20,700원으로, 63,027원의 가격차가 있고, WCI(캘리포니아, 27,131원)와 한국 배출권 가격차이는 6,431원

■ 위의 배출권 가격차이를 2017~2019년의 평균물량을 기준으로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알루미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부문에 적용할 경우, 대(對)EU 2,846.7억 원, 대(對)미국 338.2억 원 등 총 3,184.9억 원의 탄소국경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수입업자 기준)

[그림 2] EU-ETS·WCI(캘리포니아)·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및 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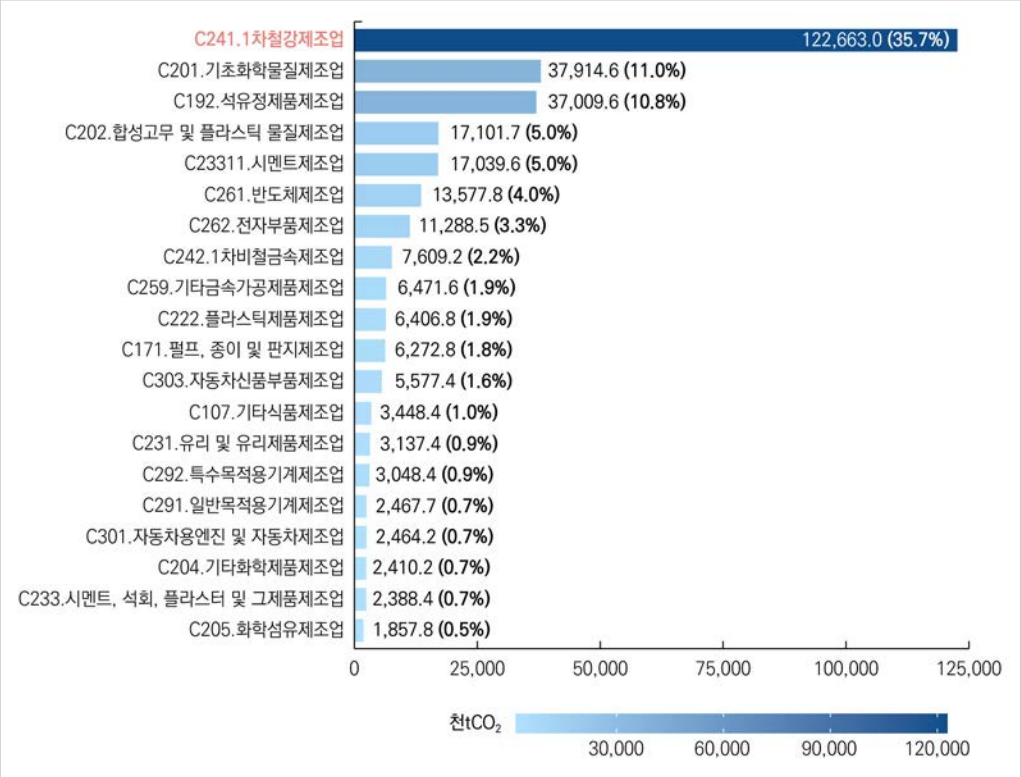


자료: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EUA Futures'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탄소국경세 부담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서 클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제조업 총 탄소배출량 중 1차 철강 제조업은 35.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포함되는 시멘트 제조업,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은 각각 5.0%, 0.9%, 0.7%,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2.2% 차지

[그림 3] 한국 제조업 중 탄소배출량 상위 20개 업종 탄소배출량 및 비중(대상년도 2019년)



자료: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NETIS), 「202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보고서 (대상년도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시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매입 비용은 궁극적으로 수출국 제조업 회사들에게 전가되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출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 **EU-ETS의 배출권 가격과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 동향의 지속적 파악 필요**

- 수출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 가격 및 탄소세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되었으므로, EU·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탄소배출권 가격 및 탄소세 동향을 파악할 필요

정부는 EU 및 미국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격을 지불하였는지를 증명·제출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 **한국은 이미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국가통계역량을 개선·활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탄소배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제조·수출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고도의 모니터링(monitoring)·보고(reporting)·검증(verification) 역량 또한 제고할 필요

산업계는 ESG 경영,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배출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 **글로벌 RE100[8] 또는 한국형 RE100(K-RE100) 참여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사용 비중을 확대할 필요**

- 생산 공정 중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인한 간접 탄소배출량은 제조업 총 탄소배출량 중 약 37% 차지

한편 정부와 산업계는 계속해서 EU의 기후 외교(EU climate diplomacy) 진행 상황 등 정책동향을 주시할 필요

■ **탄소국경조정과 관련된 EU의 다자외교뿐만 아니라, 한국-EU 양자 사이에서 탄소국경조정과 관련된 대화에 긴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

- 특히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8)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등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PART 3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Ⅰ.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동향 분석 ····· 118

I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동향 분석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경수** 경제분석관(6788-4750)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1960~2020년 기간 동안 각국의 경제적 요인과 가족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우리나라에 앞서 경제성장 및 저출산을 경험하였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적 요인과 가족정책(가족수당,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등)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

OECD 38개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지만, 그 이상 수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OECD 38개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합계출산율과 2차 함수 형태의 완만한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각국 가족정책과 합계출산율에 대한 패널회귀모형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지원과 육아휴직 기간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85명 증가
- 총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기간이 52주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43명 증가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에 대한 급여지원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고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춰 출산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기회비용을 낮춰 일·가정 양립 강화방향의 개선검토 필요

- 출산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급여의 증액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 고려 필요

※ OECD stats, OECD Family Database, 관련 연구 및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OECD 38개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에 미친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였음. 다만, 각 국의 사회·문화적 요인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자료의 한계로 분석하지 못하였음.

1. 분석배경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2002년 이후 1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1970~2019년 동안 합계출산율의 하락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컸음

■ **경제성장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중 최저 수준**

- 1인당 GDP(2015년 불변가격 구매력평가(PPP 기준): OECD(평균) 1970년 $17,513→2019년 $43,056, 한국 1970년 $2,608→2019년 $41,784
-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당 명): OECD(평균) 1970년 2.84명→2019년 1.61명, 한국 1970년 4.53명→2019년 0.92명(OECD 최저)
- 1970~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감소폭(-3.61명)은 OECD 국가중 가장 컸음

■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37년 동안 저출산 국가로 지속되어 왔고 2002년 이후 18년 동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표 1] 경제성장과 합계출산율 : OECD 평균 vs 한국

		1970	1995	2019
OECD평균	1인당 GDP($)	17,487	29,967	43,002
	합계출산율(명)	2.84	1.77	1.61
한국	1인당 GDP($)	2,608	17,688	42,581
	합계출산율(명)	4.53	1.63	0.92

주: 1인당 GDP는 2015년 불변가격 구매력평가(PPP)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2021)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실증분석에서는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Becker(1992)[1]는 1인당 소득의 증가, 인적자본과 고정자본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이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제시**

1) Becker, G.S., "Fertility and the Econom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5, No.3, 1992.

- 여성의 교육수준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 증가(대체효과)가 소득증가로 인한 자녀 수 증가(소득효과)보다 클 수 있음
- 1960~1990년 동안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음

■ **Ahn and Mira(2002)[2], Reibstein(2017)[3], 박경훈(2017)[4], 정진화·김현숙·임지은(2019)[5] 등은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에는 1980년대에는 음(-)의 상관관계였다가 1990년대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2000년 이후에는 양(+)의 상관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결과를 제시**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합계출산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Becker(1992)의 결론을 지지하지만, 상관관계는 최근 들어 약해지고 있음

OECD 국가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들어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수준 등 경제적 요인 이외에 개별 국가 차원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저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요인 등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 **Luci and Thevenon(2010)[6]은 OECD의 1960~2007년 자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경제성장이 출산율을 반등(rebound)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정진화·김현숙·임지은(2019)은 OECD 국가들에서 합계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간의 음(-)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양의 관계로 전환된 데에는 가족정책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제시**

■ **Sundstrom and Stafford(1992)[7]와 Olah(2003)[8]은 스웨덴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것은 가족정책의 효과라고 보았음**

---

2) Ahn, N., and P. Mira,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5, No.4, 2002
3) Reibstein, L., "The Impact of Public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M.S thesis, Lund University, 2017.
4) 박경훈,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조사통계월보, 2017년 7월호, 한국은행, 2017.
5) 정진화·김현숙·임지은,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Becker 및 Easterlin 가설검증과 가족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재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9.
6) Luci, A., and Thevenon, O, "Does Economic Development Drive the Fetility rebound in OECD Countries?, Working Papers hal-00520948, HAL, 2010
7) Sundstrom, M., and F.P.Stafford,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and Public Policy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8, No.3, 1992.
8) Olah, L., "Gendering Fertility: Second Births in Sweden and Hunga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22, No.2, 2003.

이하에서는 OECD 3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을 경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우리나라에 앞서 경제성장 및 저출산을 경험하였던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결정요인과 대응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에 미친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추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 **합계출산율의 경제적 요인분석은 OECD 국가들의 1960~2020년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함**

■ **합계출산율의 정책적 요인분석은 OECD 국가들의 1960~2020년 자료를 토대로 각 국가별로 실시하였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가족수당, 육아휴직, 현물지원 등)이 합계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패널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함**

- 가족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정책에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2.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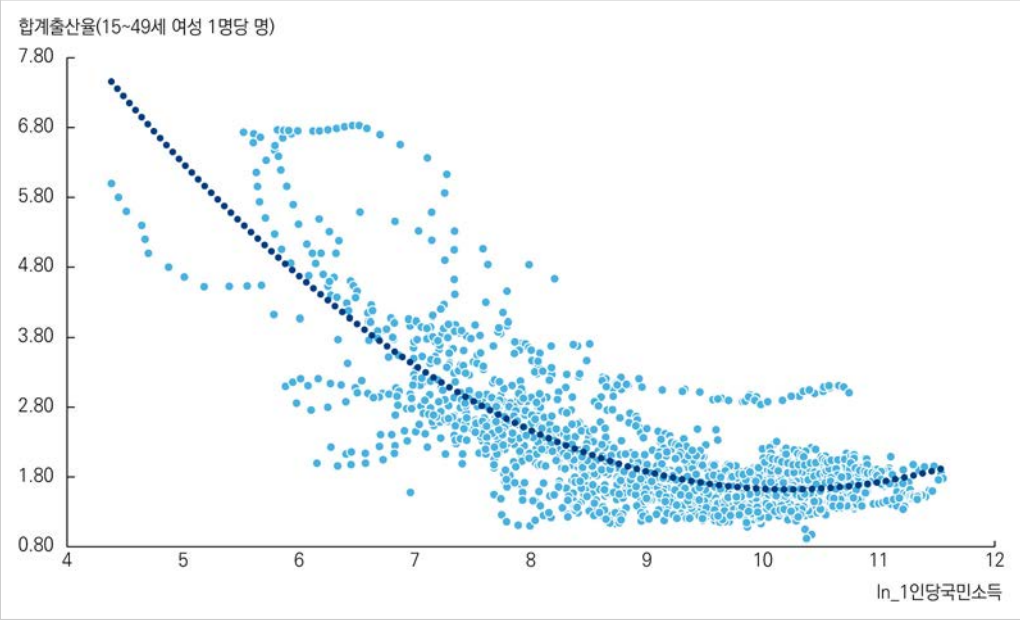
가.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산점도

OECD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였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1960~2020년 동안의 1인당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의 자연대수(ln(1인당 국민소득))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결과**

■ **ln(1인당 국민소득)이 10수준이 될 때까지 ln(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10이상 부터는 ln(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은 완만하게 증가**

[그림 1] OECD 38개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산점도



주: 검은 점선은 2차식으로 적합(fitting)시킨 추세선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21), OECD Stats(2021)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회귀분석

1인당 국민소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모형과 비선형 2차 함수 모형으로 설정하고 유의성을 검정

■ **OECD 38개 국가의 이질성과 시간 계열상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설정하고 개별국가더미와 연도더미를 모형에 반영**

[표 2] 1인당 국민소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모형	모형식
모형 1: 1인당 국민소득 선형모형	$TFR_{i,t} = \alpha + \beta_1 \ln gniper_{i,t} + \theta_i + \gamma_t + \epsilon_{i,t}$
모형 2: 1인당 국민소득 비선형모형	$TFR_{i,t} = \alpha + \beta_1 \ln gniper_{i,t} + \beta_2 (\ln gniper)^2_{i,t} + \theta_i + \gamma_t$

■ 여기서 $TFR_{i,t}$은 i년도 t국가의 합계출산율, $\ln gniper_{i,t}$은 i년도 t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의 자연대수, γ_t는 국가 고정효과 더미, θ_i는 연도 고정효과 더미

■ 모형 1과 2의 각 계수값(유의수준)과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이를 해석

1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비선형 2차 함수 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국민소득의 자연대수값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를 비선형 2차 함수로 나타낸 모형 2의 설명력이 선형관계를 나타낸 모형 1보다 설명력이 더 높았음

[표 3] 경제적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모형 1 (선형)	모형 4 (비선형 2차형식)
$\ln gniper$	-0.2 *** (.043)	-3.499 *** (0.071)
$(\ln gniper)^2$		0.21 *** (0.004)
상수항	3.963 *** (0.392)	16.171 *** (0.349)
관측치	1,952	1,952
R-squared	0.786	0.911

주: 1) 괄호안은 표준편차이며, *** p<0.01, ** p<0.05, * p<0.1임을 의미함.
2) 국가더미와 연도더미의 계수값은 생략하였음

모형 1과 2의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이외에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족정책과 같은 정책적 요인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국가별 정책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족정책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됨

우리나라에 앞서 경제성장과 합계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던 OECD 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수당 등을 늘리는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추진**

■ **합계출산율의 하락추세는 산업화 이후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하락추세가 지속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하는 사례도 있었음**

- 프랑스, 스웨덴은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최저(1.5명~1.6명)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1.7 ~ 2.0명 수준까지 회복
-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하락, 이후 2016년 1.59명 수준까지 회복, 일본은 2005년 1.24명까지 하락, 이후 2015년 1.46명까지 상승

■ **이하에서는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이 합계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

3. OECD국가들의 가족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가. 가족정책 개요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부문의 가족정책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요인으로 추정됨**

가족정책(family policy)은 가족의 탄생과 형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결혼, 출생, 육아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법률 및 공공정책 등을 의미[1)]

1) Encyclopedia.com(2021), "Family policy usually refers to social programs, laws, and public directives designed to promote and enhance marriage, reproduction, and raising children"

■ 가족정책은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족의 후생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현금 및 현물 지원이며, 일반적으로 가족의 돌봄 의무에 대한 지원을 의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70년대를 전후로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이 추진한 가족정책은 크게 가족수당,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 현물지원제도로 구분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은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현금지원으로서 가구소득이나 가구 규모 및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등이 가족수당에 해당됨

■ 육아휴직(parental leave) 및 출산휴가(maternity leave) 지원은 부모가 고용을 보장받거나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으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해 영유아기를 포함한 일정 연령층 자녀 부모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경력단절을 막아주는 시간 관련 제도

■ 현물지원(in-kind benefit)은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공급 등을 통해 자녀양육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공식 보육서비스, 취학 전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공 지원이 현물지원이라고 볼 수 있음

나. 패널회귀모형 설정 및 분석 데이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설정하고 가족정책과 육아휴직기간 등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Gauthier and Hatzius(1997)[2], OECD(2005)[3], Luci-Greulich and Olivier Thévenon(2013)[4]의 모형을 확장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설정

2) Gauthier and Hatzius,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vol51, No.3, 1997
3) Anna Christina D'Addio and Marco Mira d'Ercole,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2005.
4) Luci-Greulich and Olivier Thévenon,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29, 2013

-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OECD 38개 국가의 이질성과 설명변수와 오차항간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설정하고 국가간 이질성은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과 개별국가더미를 반영하여 통제
- 설명변수와 오차항간의 내생성은 설정된 설명변수 이외에 누락된 변수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이러한 내생성은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모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5)]

■ **OECD 사회복지지출자료(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Family Database, Euro Statistics 등의 국가별 집계 자료를 이용하여 OECD 38개국[6)] 60년(1960~2020년) 동안의 합계출산율, 가족정책, 경제변수 등과 관련된 패널데이터를 구축**

■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 독립변수 중 가족정책 변수로는 GDP 대비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GDP 대비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총급여 비중, GDP 대비 현물지원 비중, 육아휴직기간을 이용**

- 독립변수 중 가족정책변수는 선행연구의 방법을 기초로 GDP 대비 비중을 사용하였고 실적치 자료가 아닌 예산과 법적 규정에 의한 자료를 사용하여 역의 인과관계 문제가 없도록 하였음[7)]
- 독립변수 중 통제변수로는 15~65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15~65세 여성고용률, 15~65세 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의 제곱 등을 이용

$$TFR_{it} = \alpha + \beta faw_{it} + \gamma pleave_{it} + \delta inKIND_{it} + \epsilon length_{it} + X_{it}\zeta' + \eta_i + \theta_t + \mu_{it}$$

- TFR_{it} : t년도 i번째 국가의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당 명)
- faw_{it} : t년도 i번째 국가의 가족수당의 GDP 대비 비중(%)
- $pleave_{it}$: t년도 i번째 국가의 육아휴직(출산휴가포함) 총급여의 GDP 대비 비중(%)
- $inKind_{it}$: t년도 i번째 국가의 현물지원의 GDP 대비 비중(%)
- $length_{it}$: t년도 i번째 국가의 육아휴직(출산휴가포함) 기간(week: 주)
- X_{it} : 통제변수 벡터(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FLPR_{it}$), 1인당 국민소득 자연대수 ($\ln gniper_{it}$), $(\ln gniper_{it})^2$, $FLPR_{it}^2$, 15~64세 여성고용률($FEMR_{it}$), 15~64세 실업률($UNEMR_{it}$))

5)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동적 일반적률추정법(Dynami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을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에 국가더미와 연도더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내생성을 제거하였음.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두가지 방법에서 계수값의 부호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6)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은 총 38개국이며, 1960~2020년 동안 일부 미가입국, 동유럽국 등의 자료는 누락되었음.

7) 가족수당,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기간 등의 변수를 실적치 자료로 사용하게 되면 회귀모형의 추정시 역의 인과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OECD SOCX자료는 실적치 자료가 아니라 각국의 예산상 편성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규정된 가족정책 변수의 GDP 대비 비중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로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Luci-Greulich and Olivier Thévenon(2013)의 연구에서도 GDP 대비 비중을 패널회귀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음.

- η_i : 연도 고정효과 더미
- θ_t : 국가 고정효과 더미
- μ_{it} : 오차항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1인당 국민소득의 자연대수와 합계출산율 간에는 비선형 2차형식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곱항($FLPR_{it}^2$)과 1인당 국민소득 자연대수의 제곱항[$(\ln gniper_{it})^2$]을 통제변수로 추가**

■ **통제변수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 중 일부를 통제변수로 설정**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2가지 변수 중 하나를 통제변수로 설정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요약통계량과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ECD 38개국의 1960~2020년 동안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2.16명이고 최소값은 0.84명(우리나라, 2020년)이며, 최대값는 6.83명(멕시코, 1969년)임**

■ **OECD 38개국의 1960~2020년 동안 15~65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은 60.435%이며, 최소값은 25.2%(터니, 2004년), 최대값은 84.01(아이슬란드, 2016년)임**

- 우리나라의 2020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9.1%

■ **GDP 대비 가족수당 비율은 평균이 0.812%였으며, 최대값은 2.784%(벨기에, 1981년)임**

■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은 평균이 0.285%이며, 최대값은 1.644%(리투아니아, 2009년)임**

■ **출산휴가를 포함한 총육아휴직기간은 평균이 39.25주이며, 최대값은 166주(에스토니아, 2012년)**

■ **GDP 대비 현물지원 비중의 평균은 0.159%이며, 최대값은 1.58%(뉴질랜드, 1990년)**

■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가족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지출이 거의 없고 주정부차원에서 공공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OECD 집계자료에는 GDP 대비 가족정책 비율 등이 0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이하의 패널회귀분석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4]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출산율(TFR_{it})	2,291	2.16	0.954	0.84	6.83
15~65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FLPR_{it}$)	1,453	60.435	12.465	25.198	84.011
$FLPR_{it}^2$	1,453	3,807.66	1,428.43	634.94	7,057.85
15~65세 여성고용률($FEMR_{it}$)	1,454	55.705	12.47	22.319	81.095
$FEMR_{it}^2$	1,454	3,258.4	1,336.34	498.15	6,576.39
15~65세 실업률($UNEMR_{it}$)	1,454	7.373	4.138	.57	27.695
1인당 국민소득($gniper_{it}$)	1,952	18,206.74	18,522.514	80	104,159
$\ln gniper_{it}$	1,952	9.135	1.356	4.382	11.554
$(\ln gniper_{it})^2$	1,952	85.29	23.72	19.2	133.49
GDP 대비 가족수당 비율(faw_{it})	1,186	0.812	0.542	0	2.784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pleave_{it}$)	1,118	0.285	0.268	0	1.644
총육아휴직기간($length_{it}$)	1,501	39.25	45.57	0	166
GDP 대비 현물지원 비중($inKind_{it}$)	1,041	0.159	0.245	0	1.58
아빠육아휴직기간(length of father leave)	1,499	2.852	8.014	0	52.6
고용보장 육아휴직기간(length of job proleave)	1,501	47.93	54.311	0	183.7
출산휴가 기간(length of maternity)	1,501	15.647	9.277	0	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가족정책과 합계출산율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국가별 특성과 연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고용률 등이 통제된 모형에서도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의 증가와 총육아휴직기간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1은 15~65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율을 통제변수로 사용**
- **모형 2는 15~65세 여성고용률과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사용**
- **모형 1에서는 관심변수 중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과 총육아휴직기간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가족수당 비율과 GDP 대비 현물지원 비중도 합계출산율과 정(+)의 관계가 있어 합계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가족정책과 합계출산율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독립변수	모형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모형 2 (여성고용률)
GDP 대비 가족수당 비율(faw_{it})	0.014 (0.02)	0.002 (0.02)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pleave_{it}$)	0.185 *** (0.049)	0.176 *** (0.049)
GDP 대비 현물지원 비중($inKind_{it}$)	0.024 (0.037)	0.022 (.036)
총육아휴직기간($length_{it}$)	0.00083 ** (0.0003)	0.001 *** (0.00)
15~65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FLPR_{it}$)	-0.021 *** (0.007)	
$FLPR_{it}^2$	0.00025 *** (0.00)	
15~65세 실업률($UNEMR_{it}$)	-0.009 *** (0.002)	-0.003 (0.002)
15~65세 여성고용률($FEMR_{it}$)		0.008 *** (0.002)
관측치	832	832
R-squared	0.855	0.853

주: 1) 괄호안은 표준편차이며, *** p<0.01, ** p<0.05, * p<0.1임을 의미함.
2) 국가더미와 연도더미의 계수값은 생략하였음

■ **모형 2에서도 관심변수 중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과 총육아휴직기간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가족수당 비율과 GDP 대비 현물지원 비중도 합계출산율과 정(+)의 관계가 있어 합계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모형 1을 기준으로 계수값을 해석하면,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85명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출산휴가를 포함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1년(52주)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43명 증가**

- 모형 2 기준으로는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76명 증가

모형 1을 기준으로 통제변수의 계수값을 해석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계수값은 음(-)이고 그 제곱항에 대한 계수값은 양(+)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의 계수값은 음(-)으로 나타났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간에는 2차 함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형 1과 2의 분석결과 육아휴직 급여지원과 육아휴직 기간을 증가시키는 가족정책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에 대한 급여지원과 육아휴직 기간의 증가는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고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춰 출산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의 국민들은 출생시기와 유아기에 지급되는 현금지원을 토대로 출산을 계획하기보다는 출산을 선택함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즉, 임금소득을 대체시키는 육아휴직 급여를 토대로 출산을 계획한다고 볼 수 있음

■ 출생과 동시에 지급되거나 일정 유아기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현물지원은 합계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음

- OECD 38개국의 가족수당에는 출생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과 일정 유아기 동안의 현금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1960~2020년 동안의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을 경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 우리나라에 앞서 경제성장 및 저출산을 경험하였던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경제적 요인과 가족정책(대응정책)의 효과를 분석

■ 합계출산율의 경제적 요인분석은 OECD 국가들의 1960~2020년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

■ 합계출산율의 정책적 요인분석은 OECD 국가들의 1960~2020년 자료를 토대로 각 국가별로 실시하였던 가족정책(가족수당, 육아휴직, 현물지원 등)이 합계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패널 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함

패널회귀모형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85명 증가
- 총육아휴직 기간이 1년(52주)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43명 증가
- 출생과 동시에 지급되거나 일정 유아기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현물지원은 합계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음
  - OECD 38개국의 가족수당에는 출생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과 일정 유아기 동안의 현금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기회비용을 낮춰 일·가정 양립 강화방향으로 개선 검토필요

- 출산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급여의 증액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 고려 필요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10월호 | 통권 제22호

발행일 2021년 10월 27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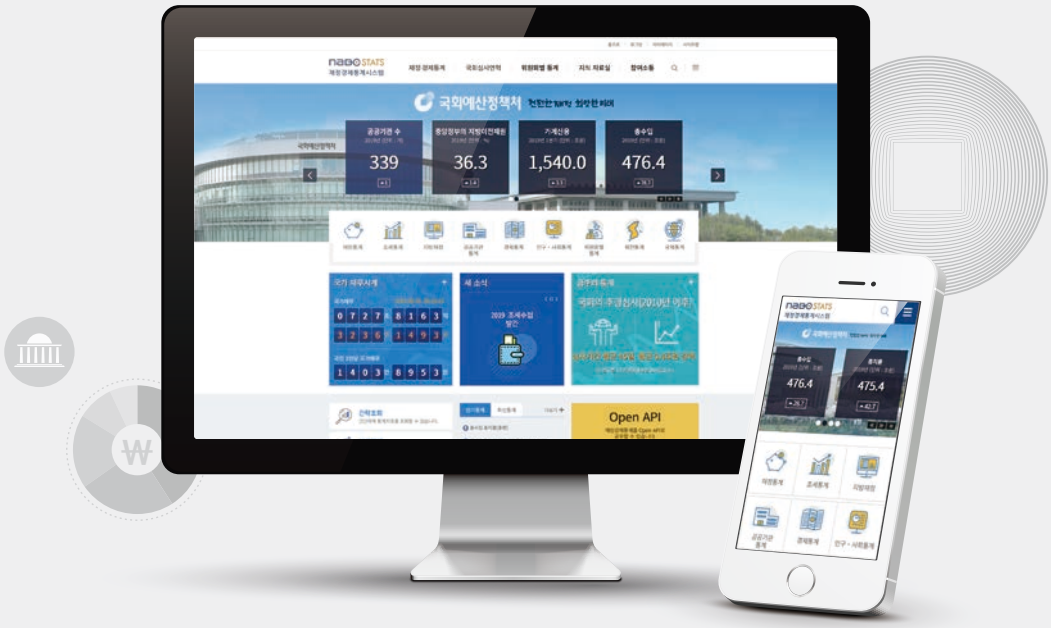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